

# “인류의 이름으로 전쟁범죄 단죄”

## 7월1일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발효, 한국도 시급히 비준해야

7월1일 대량학살과 전쟁범죄, 반인도적 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한 상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근거규범인 로마규정이 발효됐다.

국내의 인권단체들은 “최근 50년 사이에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인권기구”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 ▷ 배경과 기능

지난 4월11일 아일랜드·루마니아 등 10개국이 유엔에 로마규정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비준국이 66개국으로 늘어 재판소 발족의 최소요건이 60개국을 넘어지게 됐다. 따라서 7월1일 규정이 발효돼 조약 당사국의 첫 회의가 9월 열리고 이 회의의 결정에 따라 내년에 재판소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돼 운영된다.

앞서 1990년대 들어 지역분쟁·종족분쟁의 증가와 함께 인종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가 늘어나자 세계 120개국은 98년 이탈리아 로마에 모여 이 조약에 서명한다. 이후 조약 서명국은 2000년 말까지 모두 139개국으로 늘어났다.

국제형사재판소는 7월 로마규정이 발효한 이후에 발생한(불소급원칙 적용) 대학살이나 반인륜적 범죄, 전쟁범죄 등에 대한 재판권을 갖는다. 해당국이 전쟁범죄를 적절하게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을 때만 재판소가 개입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재판소의 관할권은 보편적이지만 범죄가 발생한 나라나 피고인 나라가 조약 비준국이아야만 기소가 가능하다. 다만 △ 비준국은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서 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경우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재판소에 특정 사안을 맡기고 관련국이 국제법 아래서 이를 수용할 경우에는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가 개입된 사건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는 일국내 무력분쟁 과정에서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을 재판할 권한을 가지며, “반인륜적 범죄”와 “전쟁범죄”의 정의에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실종”과 소년병의 전투투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여성에 대한 강간을 비롯해 기타 성적 학대행위를 전쟁범죄로, 평화시 및 무력충돌 시 어떤 경우에도, 광범위하고도 조직적으로 상기한 범죄를 자행하였을 때 “반인륜적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국제형사재판소의 독립 검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개별 부서의 조치에 관계없이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인권침해의 악순환을 만성화시키는 “면책”문제를 쫓아낼 수 있도록 하였다.

### ▷ 문제점과 전망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주요 강국의 불참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조약 비준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미국은 “해외에 파견된 군인이나 관리들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정치적 공세 때문에 이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조약서명 거부 의사를 밝히며 해외미군들의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티베트 독립운동세력 등을 의식하고 조약에 서명조차 하지 않았으며 일본도 마찬가지다. 프랑스는 조약을 비준했으나 처음 7년간 프랑스 군인의 기소 면제 요청을 단서로 달았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현실정치와 외교적 마찰로 인해 국제형사재판소의 변질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향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 ▷ 진행과정

1937년 테러리스트를 처벌하기 위한 ICC 설치에 관한 조약(프랑스·소련 등 13개국 서명, 미발효) 등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ICC 설립이 구체화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이다.

1948년 12월 제노사이드(집단살해죄)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을 채택하였고 UN 총회에서 국제법위원회(ILC)에 ICC에 관한 예비 검토를 지시하였다. 제노사

이드조약 제6조에 범인을 심리·처벌하는 기관으로서 행위자의 국내재판소와 함께 ICC를 세울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1950년 ILC로부터 동재판소 설치가 가능하며, 바람직하다는 보고를 받은 총회는 ICC 관할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재판소 규정 초안을 만들게 하였다. 그러나 냉전 당사국들과 세계 여러 강국들의 반대에 부딪쳐 뚜렷한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르완다, 캄보디아 등의 반인륜범죄가 끊이지 않자 세계 여론이 확산되어 1998년 6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ICC 설립을 위한 로마회의’에 세계 160여 개국이 참가하여 ICC 설립에 관한 로마 선언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 ▷ 한국상황

한국도 2000년 3월 조약에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은 하지 않은 상태다. 올 5월 아시아지역 인권운동가들이 한국의 외교통상부와 국가인권위를 방문해 ICC 비준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외교부측은 “올해안에 반드시 ICC 규정의 국회비준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입장은 없는 상태.

이번 로마규정 발효를 맞아 국내 인권단체들도 한국의 ICC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ICC 로마규정의 시급한 국내비준 절차를 이행하고 국내실시를 위한 입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는 최근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라며 국제사회의 인권보장흐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가인권위도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상의 범죄가 발생하여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인도주의적 관점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비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비준과 함께 국제법에 부합하는 국내법의 정비를 요구했다.

한편, 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 몽골, 타지키스탄 등 세나라만이 ICC 비준안을 유엔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다산 인권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 용산미군기지 어디로 갈까?

### 국방부 관계자, “기자들에게 이미 미군이전관련 내용 브리핑했다”

미군전차의 여중생 참사사건에 대한 규탄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용산미군기지 이전문제가 다시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4일 ‘용산미군기지 수원이전 결사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국방부를 방문해 용산미군기지 수도권 이전논의를 중단하고, 즉각 반환 조치하라는 수원시민들의 요구가 담긴 서명부를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는 용산미군기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관계자와의 비공식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 관계자는 “6월에 이미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용산미군이전 관련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브리핑을 했다. 하지만 기자들이 아직 기사화하지 않았다”며 의미있는 말을 남겼다. 하지만 이후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내가 말할 상황이 아니며 결과가 나오면 해당 지자체와 상의를 하며 진행할 것이다”라며 일반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했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와 면담을 가진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이미 한미연합조사단 내부적으로 용산미군기지 이전문제가 확정되었거나 상당부분 윤곽을 잡은 모양을 느꼈다”며 밀실행정으로 일관하는 국방부를 비난했다.

한편, 이날 경기민언련, 수원여성회 등 공대위 참가단체 회원들은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는 용산미군기지이전논의를 중단하고, 주한미군에게 기지반환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책위는 용산미군기지 수도권 이전계획에 대한 항의서한을 채택해 “국방부는

용산미군기지이전계획에 관한 밀실 논의를 중단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즉각 공개하고, 국방부장관은 수원·성남·송파 지역 대책위가 공식적으로 제안한 면담에 즉각 임하라”고 요구했다.

또 대책위는 항의서한에서 “용산기지 이전문제는 주한미군과 국방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한 뒤,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대책위 관계자들은 국방부 민원실에 들어가 수원시민 12,377명의 서명이 담긴 서류와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박진**

## 제76호

2002. 7. 9. (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다산인권센터 ●편집인: 송원찬

## 전지윤 학생, 5년 구형

지난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지윤(성공회대) 학생의 첫 심리가 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전씨가 인터넷상 다음카페 ‘민주노동당 성공회대학교 학생위원회 자유계사관’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올린 조선일보 반대 등의 내용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가 인터넷 게시한 글이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며 전씨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재판부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고재판은 8월5일 오전 10시에 수원지법에서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지윤 석방을 위한 공대위는 수원지법 앞에서 오전 9시부터 집회를 갖고 전씨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며 각계각층이 보내온 탄원서를 재판부와 검찰에 전달했다. **박진**

### \* ‘2002 교사를 위한 인권워크숍’(교사직무연수)

- 일시 : 2002년 7월 22일(월) ~ 26일(금) /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일 동안, 30시간)
- 장소 : 수원소재 숙지중학교 내(화석역 앞)
- 대상자 : 중·고등학교 교사 40명(선착순/청소년단체실무자 가능)
- 내용 : 인권의 이해, 인권교육 이론, 인권교육 프로그램 실제 등
- 참가신청 : 홈페이지 [www.rights.or.kr](http://www.rights.or.kr) / FAX 031-215-4395 이메일 [humandasan@hanmail.net](mailto:humandasan@hanmail.net)
- 참가비 : 5만원(식사, 자료집 포함)
- 문의 : 박진 인권교육 담당자(031-213-2105)

### \* 주제가 있는 작은 인권영화제

- 일시 : 2002년 7월 16일(화) 오후 7시
- 장소 : 다산인권센터 소극장
- 상영작 : ‘박통진리교’(최진성 감독, 95분 다큐)
- 문의 : 노영란 인권영화제 담당자(031-213-2105)

\* 상영후 감독과의 대화가 진행되며 주제는 수원지방법원내에 주차하셔도 됩니다.

### \* <발전노조 인권실태조사 보고 및 파업참가자 인권문제 토론회>

- 일시 : 2002년 7월11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가인권위 배움터

주간인권신문

‘평화와 인권’ 300호 발행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8년간의 인권과수꾼 역할 충실

9월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 「전북평화와 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 신부 등)에서 발행하는 주간인권신문 ‘평화와 인권’이 300호를 발행했다.

특히 열악한 우리사회의 인권현실에서 더구나 지역에서 묵묵히 인권지킴이로서 역할을 해온 인권단체이기에 이번 300호 발행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인권단체들의 입장이다.

지난 1994년 7월1일 정의평화정보센터(준) 시절 준비1호를 발행하다 같은해 12월10일 정의평화정보센터의 이름으로 창간호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척박한 지역인권현실속에서 이 신문은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사상탄압, 주한미군의 인권유린, 새만금사업 반대운동, 노동자 감시 인권침해 등 노동자와 빈민, 농민 등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해 왔다.

이 신문의 편집인인 서미숙씨는 “현재 1천부가 배달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서 가리워진 지역의 인권현실을 왜곡 없이 전달하고 개선해나가는 충실한 인권과수꾼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라며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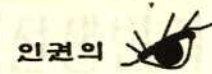
한편, 전북평화와 인권연대는 300호 발행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10~13일 전주 홍지문화공간에서 인권운동가 단 존스의 그림 전시회를 열고 독자와 편집진이 만나는 ‘평화와 인권의 밤’ 행사도 갖는다.

또 매년 ‘인권삼계탕’으로 후원행사를 진행해왔는데 올해에도 18일 전주 서학동성당에서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산]

<홈페이지 개편안내>

7월 9일(수) 새롭게 단장한 다산인권센터의 홈페이지가 여러분 앞으로 찾아갑니다.

클릭!! www.rights.or.kr



월드컵과 이주노동자

윤계훈 수원외국인노동자센터 상담실장

2002년 한·일월드컵이 끝났다.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모르긴 몰라도 “대~한국 짹짹”일 것이다. 더 나아가 이 구호는 이른바 토종 한국인들은 물론이고 외국인 관광객 심지어는 한국에서의 차별을 온몸으로 부대끼는 이주노동자들마저도 열광하게 만들었다. 월드컵이 열리는 도시 근방의 대형스크린 설치장소에서 붉은색 티셔츠를 입고 한국을 응원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수원외국인노동자센터만 해도 6월 월드컵 기간 중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은 채 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쉽게 발견되었다. 한국경기가 있는 날이면 센터내 텔레비전 주변에 둘러앉아 한국을 응원하였고, 적어도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한국은 좋은 나라, 상대편 나라는 나쁜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 동안 한국에서 온갖 멸시와 차별을 받아가며 기본적인 인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던 이들이 한국을 응원하는 것에 솔직히 처음에는 나 스스로 의아해 했다. 심정적으로 보면 자신들을 차별하는 한국이 패배하기를 바랬어야 하는데, 이들은 “나는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이기는 하지만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겼으면 좋겠다”, “한국은 아시아이다. 나도 아시아인이다. 한국과 일본이 지면 기분이 좋지 않다” 등의 그야말로 순박한 이유를 들며 한국을 응원했다.

스스로 2년 이상을 이주노동자들을 대해오며 이들을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심각한 착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일신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먹고사는 문제를 중심으로 사람을 만나왔던 그간의 인연이 커다란 벽으로 다가왔다. 따라서 이들과의 관계가 일상과 문화속에서 확장되고 공감되지 못한다면 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내가 ‘희망’했던 친구가 아닌 단지 helper로만 인식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사실 최근 들어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의 영문명을 놓고 가벼운(?) 논쟁이 종종 있다. 그것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도움을 받기만 하는 입장에서 상부상조를 넘어서서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이기도 할텐데 이런 경향들을 받아안아야 하는 단체입장에서는 당연히 발생하는 고민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단체명은 이주노동자를 위한 장소라는 의미의 ‘for’를 사용하는데, 점점 ‘with’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일부 단체들은 실제로 변경하기도 했다. 물론 이름 하나 바꾼다고 해서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을 도와왔던 단체들을 진정한 친구로 인식할런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이주노동자 운동 10여년 역사의 중요한 성과임에는 분명하다.

반면 걱정거리가 하나 늘었다. 그것은 일부 언론에서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의 이른바 ‘혈통적 민족주의’를 극복했다거나, ‘열린 민족주의로의 전화의 효시’라고 외쳐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월드컵 기간동안에 한국에 발딛고 있던 외국인들은 순수 관광객이든 이주노동자들이든 후한 대접을 받은 하였다. 얼 굴이 하얗든 우리보다 검든, 한국의 4강 진출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했던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대접이었지만 월드컵이 끝난 지금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참으로 궁금하고 걱정스럽지만 한 것은 비단 나만의 기우인지 모르겠다. 임금도 받지 못하는 한국에 대한 순수한 응원을 보여준 이주노동자들과 이제 월드컵이 끝났으니 ‘열린 민족주의’를 함께 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을 청소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한국 정부간의 말도 안되는 싸움이 언제 시작될 지 걱정, 또 걱정스럽다.

다산인권

제77호

2002. 7. 16. (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다산인권센터 ●편집인: 송원찬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폭력으로 가로막힌 에바다 정상화

에바다연대회의, 농아원 진입했으나 밖으로 밀려 대치 중

지난 15, 16일 양일에 걸쳐 평택 에바다 농아원에 또다시 큰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15일 오후 3시경 에바다복지회 이사진과 농아원 교장,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관계자 등 50여명은 이사진의 합법적 업무를 돕기 위해 이사회의 허락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출입금지처분을 받은 농아원 내외부인들을 쫓아내기 위해 농아원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연대회의의 관계자들이 정문을 진입하고 건물에 들어가서 점수하려 하였으나 갑자기 나타난 구재단측 농아원생들이 건물을 가로막고 문을 걸어 잠근 채 휘발유를 뿌리고 강력히 반발해 내부 진입은 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점거해온 일부 원생을 포함한 구재단측 인사들과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부상자가 속출했다. 또 16일 새벽을 틈타 구재단측 농아원생 수십명이 기습적으로 노상시위를 벌이고 있는 에바다연대회의의 관계자들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에바다연대회의의 한 관계자는 “농아원으로 진입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폭행을 당해서 옷이 찢어지고 찰과상을 입었다”면서 “부상자 중에서 코뼈가 부러지고 눈이 찢어져 8바늘 꿰매는 등 한명은 의식이 혼미한 상태다”면서 당시의 극한 상황을 설명했다.

결국 16일 오전에 에바다농아원에 진입한 연대회의의 관계자들은 경찰에 포위된 상태에 있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적으로 농아원 밖으로 쫓겨났다. 이에 신임 이사진과 대학생들은 경찰을 규탄하며 현재 에바다농아원 정문 앞에서 연좌농

성을 벌이고 있다. 에바다연대회의는 경찰측에 △출입금지 가처분을 받은 양봉애와 비리 세력인 직원들을 농아원 내에서 추방시켜 줄 것, △폭력을 행사한 농아원생과 직원들을 사법처리하고 그 배후를 조사할 것, △에바다 이사회의와 교장, 농아원장의 업무 정상화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에바다복지회 사무국장 남정수 씨는 “경찰이 농아원생을 자극하여 폭력사태가 일어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를

밖으로 밀어냈다고 하지만 평택경찰서의 미온적인 대처와 불법방조가 현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들고 있다”면서 “앞으로 폭력을 행사한 구재단측 농아원생들의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것”이라며 경찰의 구재단측 비호를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구재단측 인사들과 농아원생들은 평택지원이 이들에 대해 출입방해금지 및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 또 양봉애씨등 옛 비리재단 쪽 직원들은 이사회 결정에 불복하고 학교를 파행으로 이끌다 지난 2월에 해임된 상태다. [다산]

교사 지위이용 여학생 상습 성폭행

여성시민단체들, 검찰 능장수사에 항의하며 구속수사 촉구하고 나서

지난해 2월말경부터 2002년 5월까지 5회에 걸쳐 H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펜싱 선수 J모양(고1)이 H고등학교 교사와 경기도 펜싱협회 관계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할말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하여 저녁 늦게 학교로 불러내 체육관과 차안에서 위압적인 분위기와 힘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꼼짝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위 가

해자 중 한 명은 지방시험을 간 곳의 숙박시설인 모텔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지난 5월 말 성폭행당한 후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 남자친구의 의해서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게됐다.

이후 이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는 6월 초경에 수원시 부녀아동상담소와 상담한후 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수원남부경찰서(2면에서 계속)

<‘2002 교사를 위한 인권워크샵’(교사 직무연수)>

- 일시 : 2002년 7월 22일(월) ~ 26일(금) /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일 동안, 30시간)
- 장소 : 전교조 경기지부 회의실
- 대상자 : 중고등학교 교사 40명(선착순/청소년단체실무자 가능)
- 내용 : 인권의 이해, 인권교육 이론, 인권교육 프로그램 실제 등
- 참가신청 : 홈페이지 www.rights.or.kr / FAX 031-215-4395 이메일 humandasan@hanmail.net
- 참가비 : 5만원(식사, 자료집 포함)
- 문의 : 박진 인권교육 담당자(031-213-2105)

(1면에서 이어짐)는 피해자 2인을 긴급체포한 후 수사에 착수하여 같은 학교 펜싱 선수등을 참고인으로 조사, 증거물을 첨부하여 수원검찰청에 수사의견을 올렸다. 하지만, 검찰은 보강수사를 요청한 직후 수사중인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것을 요청했다. 결국 이 사건은 지난 6월18일 검찰로 송치되었지만, 한 달이 흐른 지금까지 담당검사는 전혀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에 참여하는 여성단체 관계자는 "이 사건은 펜싱선수들의 특수성, 학생의 운동과 진로, 실업팀으로의 취업 등을 좌지우지하는 교사가 선생님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제재를 상습 성폭행한 전형적인 사건이다"면서 "검찰이 구속수사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피해자는 현재 경기도 펜싱협회 관계자들로부터 협박 등을 받고 있으며 6월부터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해자들은 학교에 연가신청을 내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한편, 수원 여성의전화를 비롯한 60여 개 여성시민단체들은 수사촉구 진정서를 이미 수원검찰청과 청와대 민원실, 여성부장관에게 접수했다. 또한, 이들은 담당검사의 늑장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수사와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8일 오전 11시 수원 지방법원 앞에서 가질 예정이다.

또 이들은 앞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담당검사실 항의방문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항의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산**

### 발전노조 파업후 보복성 인권침해 심각수준

인권단체공동조사단, 발전회사의 반인권적 노조탄압 폭로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12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발전노조인권실태 인권단체공동조사단'(아래 조사단)은 11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발전노조에 대한 회사측의 인권침해를 폭로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이들이 펴낸 보고서에서 "사측이 파업에서 복귀한 조합원들에 대해 조합원의 성향을 '온건/중간/강성/구체불능' 등 4단계로 분류하고, 회사방침에 따르는지 여부에 따라 A, B, C로 매일 행동기록표를 작성하고 등급분류를 시행했음이 조사결과 확인됐다"며 "이는 통상적 노무관리로 볼 수 없는 과도한 노동자 감시 조치로 사찰의 성격을 띠고 있는 행위이며 노조사무실 출입차단 및 홈페이지 차단과 유사한 노조활동 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또 "사측이 조합원 8천900여 명을 대상으로 360억원대의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일부 노조간부가 아닌 사실상 모든 파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벌인 것"이라며 "'노사관리 안정화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사측의 입장은 가압류신청이 노조 무력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정부와 사측은 파업 종료후, 민영화 강행을 위해 노조의 반발을 무산시켜야 한다고 보고 서약서 강요와 해고, 가압류 등의 '전술'을 구사하면서 노조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5월말에 진행된 남동발전

조합원들의 산별노조 탈퇴 투표도 이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토론에 나선 노항래 공공연맹 연대사업국장은 "데이콤 노동조합의 파업이나 농업기반공사노조 파업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합법적인 파업일지라도 회사로비에서 구호나 노래를 부르고, 회사관계자의 출입이 일시적으로 제한한 것이 업무방해 죄가 되고,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다"라며 "회사측과 정부는 업무방해, 손해배상, 가압류 등 새로운 형태로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영국 변호사는 "가족의 생계수단과 보금자리마저 앗아가는 반인권적인 탄압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신원보증인에게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해 이런 심리적 압박을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이번 토론회는 사측의 노동탄압에 대해 노동, 인권단체들간의 연대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파계를 던져준 자리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올해 초 '전력산업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며 38일간의 파업 투쟁을 하고 현장에서 복귀한 발전산업노조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보복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인권단체들이 심각성을 공유하여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발전회사 본사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펼쳤다. **다산**

# 다산 인권

제78호

2002. 7. 23. (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편집인 : 송원찬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 기무사, 학생운동권 함정수사 의혹

서울고등군사법원, 국가보안법위반 장교 이례적 선고유예판결

23일 서울고등군사법원은 지난 2월1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된 육군 00부대 최모 중위에게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현역중위에게 실행이 아닌 선고유예 판결을 한 것은 이례적으로 사실상 무죄판결에 가깝다.

이 사건의 담당검사는 공소사실에서 '최중위는 모대학교 재학시절 부총학생회장장을 역임하며 21세기진보학생연합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에 대하여는 이적단체 가입죄를, 군에 들어와서 병사를 교육하고 책들과 비디오테이프를 보관한 것에 대해서는 이적표현물 취득, 소지죄와 이적단체고무찬양죄를 적용'하여 기소했다.

하지만 최중위는 21세기진보학생연합은 이적단체가 아니고, 위 책들과 비디오테이프를 소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취득과정에서 그동안 절친하게 지냈던 신모 중사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최중위는 "신중사가 청년좌파라는 청년진보당기관지를 구독하는 것을 내세워 대학시절 학생운동을 한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하면서 군대현실과 부대지휘관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면서 "신중사는 자신에게 병사들을 의식화시켜야 한다면서 독서동아리를 만들어 자신에게 독서동아리 교육담당을 맡긴일, 자신의 학교 친구들이 참여한 농활에 함께 가 농촌활동 책자들을 취득하도록 요구했다"는 사실을 예로들며 기무부대의 함정수사임을 주장했다.

변론을 맡은 김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변론을 통해 '21세기진보학생연합이 사상적기반으로 삼는 그람시 사상은 이미 시민단체들의 이론적 기반이기에 21세기진보학생연합을 이적단체로 보

기 어렵다'라며 이적단체가입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최중위가 군내에서 병사들을 교육하고 책들과 비디오테이프를 소장하게 된 것은 다름아닌 기무부대와 신중사의 계획적인 접근에 의해 저지르게 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적단체인 21세기진보학생연합에의 가입은 인정하지만 조사를 면밀히 해야 할 것이고, 함정수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이런 수사를 하면 함정수사이지만

최중위는 학교 재학시절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었기에 함정수사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중위가 군생활에 모범이었고, 초범인 관계로 선고유예를 한다'라고 판결했다. 송주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이 사건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판결이었지만 기무사의 함정수사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기무사의 계획적인 함정수사를 밝혀내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사건은 최중위가 지난 3월 말 경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선고받아 항소한 사건이다. **다산**

## 에바다사태 평택경찰서 직무유기 고소

에바다연대회의, 농아원 앞 농성풀고 폭력피해자 손해배상 청구하기로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23일 오전 11시 대책회의를 갖고 농아원생들의 폭력을 조장, 방관하고 있는 옛 재단측 관계자와 평택경찰서를 고소하기로 했다.

연대회의는 농아원생들의 폭력을 부추기고 있는 양봉애 전 행정실장 등 옛재단측 관계자들을 폭력고사죄로, 이들의 폭력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평택경찰서측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기로 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옛 재단측에서 농아원생들을 폭력으로 몰고 있으며,

석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극에 달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연대회의는 경찰청을 방문해 에바다 폭력사태와 관련된 경찰의 대응지침을 확인하기로 했으며, 평택지검도 방문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연대회의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에바다 농아원 앞에서 '에바다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기로 했다. 한편 이번 에바다농아원 진입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2면에서 계속)

##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촉구하는 경기지역 1천인 선언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7월 30(화) 오전11시 / 다산인권센터 회의실
- 참여방법 및 기간 : 홈페이지나 팩스(031-215-4395) 이메일(kgstop10@hanmail.net)/ 7월 27일까지
- 문의 :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031-213-2105)

다산인권센터의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클릭!! [www.rights.or.kr](http://www.rights.or.kr)

< 인권침해신고 >  
031-2110-5855

**'인권센터의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지난 몇해동안 경기지역에서 인권활동을 전개해온 다산인권센터는 올해에 정관을 마련하고 새로이 운영위원을 구성해 지역인권단체로 거듭나려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회원으로 참여해 함께 우리사회의 인권지킴이가 되어주십시오.

(회비 월 5천원이상, 연 3만원이상/ 가입은 홈페이지 [www.rights.or.kr](http://www.rights.or.kr)에서)

조흥은행 : 501-04-877047 예금주 다산인권상담소  
농협 : 116-12-264081 예금주 노영란

(1면에서 이어짐) 부상자 치료비와 관련,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에바다복지회 이사진과 농아원 교장, 에바다연대회의 등 60여명은 지난 15일 에바다 농아원을 진입했으나 경찰에 의해 강제로 농아원 밖으로 밀려난 이후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가 지난 20일 농성을 풀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19일 '에바다 농아원 보조금 지급 지연 등을 이유로 보조금 일체를 평택시로 반환하라'는 공문을 윤회찬 에바다 농아원 원장 앞으로 보냈다. 이에 윤원장은 "농아원 출입조차 봉쇄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아원 총무에게 수차례에 걸쳐 보조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집행을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원장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총무에 대해서는 징계에 회부할 예정이며, 평택시보조금 관리조례 어디에도 시가 보조금을 직접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반환 명령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산]

여성단체 가해자 구속 촉구 ...검찰 뒤늦은 수사

(속보) 수원 H고교에서 벌어진 교사의 여학생 성폭행사건에 대해 뒤늦게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지난 77호 기사) 23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 검찰청 앞 사거리에서는 수원여성의전화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모여 H고 학교 성폭력 사건 가해자 구속수사와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가해자가 구속수사되고 엄중처벌 받을 때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수원지방법원앞에서 피켓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검사는 지난 22일 피해자 학생을 불러 밤9시까지 조사를 마쳤고, 또다른 피해자 학생과 참고인, 가해자를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은 체육교사가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에 대한 가해자 구속수사가 되지 않자 여성단체들이 18일 수원지방법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능가수사를 비난하며 구속처벌을 주장했다. [다산]

참정권 제한 지문날인반대자 헌법소원

지문날인반대연대, 12월 대선까지 행정자치부 앞 매주 1인시위 돌입

서울 화양동에 사는 윤모씨(33세). 윤모씨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지문날인을 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며 지문날인을 거부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 윤모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주민등록증이 없어 자신의 신분을 밝힐 증명서가 없는 상태였지만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이 투표할 방법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첨부한 증명서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게 된다.

이를 근거로 윤모씨는 화양동사무소에 찾아가 6.13 선거에서 선거인 본인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첨부한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화양동장은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첨부한 증명서의 발급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며 윤모씨의 요청을 거부해 결국 선거를 하지 못했다.

따라서 윤모씨는 화양동장이 주민등록등본에 자신의 사진을 첨부한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 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23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을 제한 당해 선거를 하지 못했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하겠다는 윤모씨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윤모씨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선거에서 본인확인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는 하지만 다른 본인확인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내걸고 투표참여를 거부한다면 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행위"라며 "화양동장의 처사는 선거부정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적 행위"라고 지적해 헌법소원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지문날인반대연대는 매주 화요일마다 행정자치부 앞에서 1인시위를 할 예정이며 또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토론회를 8월말 경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문날인거부자, 재외국민, 청소년 등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결성된 참정권보장을 위한 연대회의(준)는 27일 오전 11시부터 내부워크숍을 통해 향후 12월 대선을 앞두고 참정권 보장운동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산]

전국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들 업무중단, 노숙투쟁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외국인노동자들을 지원하던 상담소들이 정부정책의 철회를 주장하며 업무중단을 선언했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이하 외노협) 소속 전국 35개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들은 '산업연수제 확대'와 '자진신고외국인노동자 전원 강제출국', '기만적 재외동포 취업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탁상공론일 뿐 아니라 비열한 조치'라고 혹평하고 정부에 대해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산업연수제 철폐투쟁본부를 새로이 구성하며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곧바로 명동성당에서 노숙투쟁을 돌입했다. 투쟁본부는 '그동안 열악한 조건에서 외국인노동자 지원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 왔지만 이번 정부정책은 더 이상 외국인 지원업무를 의의가 없어졌다'며 외국인노동자 지원업무중단을 결의했다. 또 앞으로 매일 오전 10시 명동성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민사회단체 및 외국인노동자들과 연대해 대대적인 정부정책의 철회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다산 인권

제79호

2002. 7. 30. (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 편집인 : 송원찬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공안당국, 한총련 마녀사냥 도시작

경기지역 인사 1,200명 선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촉구

10기 한총련에 대한 공안당국의 구속수배 방침에 시민사회진영에서 강력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경기지역대책위원회(준비위원장 박희영 목사)는 30일 오전 11시 다산인권센터 회의실에서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촉구하는 경기지역 1천인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기지역 각계인사 1천200명이 서명한 선언문을 통해 "대학생들이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구성된 한총련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양심과 정의, 인권에 대한 모독이자 도전"이라면서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의 연장선상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수배해제, 구속자 석방 △10기 한총련 구속수배 반대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10만인 서명과 함께 8월에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공안기관 항의방문, 1인 릴레이시위를 통해 강력대응 할 예정이며 거리캠페인을 통해 한총련 합법화의 정당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안당국은 경기지역에서는 경기대, 서울농생명대 총학생회장에게 출두요구와 탈퇴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대의원들에 대해서도 8월초에 소환할 방침이어서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총련 미 탈퇴자들에 대한 구속수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희영 준비위원장은 "한총련은 변화하려 하는데 공안당국의 편협된 시각과 행태는 여전하다"라며 "경기지역에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운동을 대중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와 전국민중연대 19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각계 지도자 1천인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한총

련 이적규정 철회를 촉구했다. 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소속 종교인들도 18일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 성당 마당에서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종교인 1천인 선언'을 갖기도 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는 23일 김형주 한총련 10기 의장 등 93명의 양심수들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KNCC는 탄원서에서 "현재 이념과 사상,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는 양심수가 93명에 이른다"며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위해 오는 8.15 광복절에 석방사면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산]

정신과진료 개인정보제공 사생활침해

국가인권위, 경찰청장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계 및 피해자 손해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30일 문모씨등 15명이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에 정신과진료를 제공하고 경찰청이 이를 수사적성검사의 자료로 이용한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결정했다. 이를 근거로 국가인권위는 행자부 장관과 복지부장관에게 각각 경찰청장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관계 직원을 정

계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경찰청이 감사원의 권고를 빌미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관리하고 있는 자료(수사적성검사대상자 명단)의 삭제와 이 자료를 이용한 운전면허수사적성검사의 중지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경찰청장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손해배상과 사생활 비밀 및(2면에서 계속)

미군장갑차 사망 여중생 49재 거리 추모제

- 일시 : 2002년 7월 31일(수) 오후 7시
- 장소 : 경기불교문화원(수원 팔달문)/ 서울시청(서울행사)
- 내용 : 수원지역 통일한마당 발족식/ 헌화/ 추모 거리춃불행진
- 문의 : 수원시불교연합회 이영석(031-251-3652)

< 수원시민 통일한마당 안내 >  
- 8월 10일(토) 오후1시 / 수원 만석공원

(1면에서 이어짐)인권침해 사례의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권고했다.

진정인들에 따르면 "정신과 진료 사실을 친구는 물론 가족에게 숨기고 있었는데 개인정보 공개로 인해 치료사실이 알려질까봐 두렵다"며 "일부 환자는 개인정보가 공개된 이후 치료를 중단하거나 증상이 악화되었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정신과 치료사실이 아내에게 알려져 이혼위기에 처한 사례도 있다"며 여러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공익소송팀 정미현 간사는 "이번 결정은 우리 사회가 개인정보보호 차원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등한시하는 풍토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이 사건 피해자 12,800여명의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현재 공익소송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감사원이 같은해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정신질환자, 간질병 환자 등의 진료명세를 요청한 뒤, 2001년 9월에는 경찰청장에게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25,510명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자료를 통보받아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지정여부를 정하도록 권고해서 비롯된 사건이다.

경찰청은 2001년 5월과 2002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의 권고 등을 근거로 특수상병(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와 정신분열증)의 총 진료일수(투약일수 기준)가 180일 이상인 사람 1,328명에 대한 전산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자료를 제공했다.

결국 정신과 진료후 진료비 청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개인정보가 경찰청으로 넘어가서 수시적성검사 통보 대상자 선정 자료로 사용되어, 영문도 모른 채 12,800여명이 검사대상자로 통보받고 이 중 3,000여명이 수시적성검사를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문묘씨등 15명이 국가인권위에 경찰청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정신과 진료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진정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산]

### 교육청은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전교조 경기지부, 5일째 경기도교육청 점거농성 식발투쟁 강도높여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교사 40여명이 지난 26일부터 도교육청의 단체교섭 지연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경기도 교육감실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에 요구한 단체교섭을 6개월이 훨씬 지난 올 6월7일에 1차 본 교섭을 시작하는 등 사실상 단체교섭을 거부해 왔으며 이는 명백하게 부당노동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지난 18일 3차 본 교섭 이후 단체교섭을 연기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조속한 단체협상 재개, 인사위원회에 노조 참여 보장, 노조활동 보장, 방학 중 생활지도 폐지 등 10대 사항을 요구하면서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이번에 교섭이 결렬된 것은 원인은 무엇보다 현재 한교조 선관위가 지난달 29일 선임위원장 당선무효 결정을 한 뒤 구성된 한교조 비상대책위가 "진행중인 단체교섭은 오는 8월16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기도교육감 앞으로 보냈고, 도교육청이 이 공문을 근거로 교섭을 연기하기로 한 결정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전교조 경기지부는 한교조 규

약 상 수석부위원장 및 연장자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데도 교육청이 이를 확인치 않고 교섭을 중단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미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교섭타결까지 마치는 등 타 시·도지부에서도 단체교섭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6개월 이상 교섭을 해체한 교육청이 한교조 비대위 공문을 빌미로 교섭을 연기한 것은 사실상 교섭 거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한교조 선관위가 선임위원장 당선 무효선언을 함께 따른 조치일 뿐 단체교섭을 거부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29일 김정화 성남 중등지회장, 임정철 고양중등지회장에 이어 30일 구희현 민주노총본부부장, 박석균 전교조 경기지부 사무처장이 식발을 하는 등 29일부터 도교육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하루 2명씩 식발을 감행하는 등 강도높게 대응하고 있다. 한편, 이번 단체교섭은 전교조 경기지부가 지난해 11월에 요구했으나 8개월이 지난 올해 6월7일에야 겨우 1차교섭이 이루어져 전교조의 교육청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다산]

### 제2회 청소년모의법정대본 공모 친구야! 성난사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 공모의 주제 및 소재 : 청소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현상, 참신한 내용(청소년 폭력, 청소년 성매매, 따돌림 등 청소년 문제나 두발제한, 체벌, 교칙문제 등 학교생활상의 문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 공모의 형식 : 공연시 20분~30분 정도의 분량(원고지 50매 내외) / 제출형식 : PC 신명조체 11포인트, A4 용지로 작성해서 제출

■ 당선작 및 부상품 : 대상, 우수, 장려작 상장 및 상금 수여

■ 일정 및 접수 : 9월 13일까지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대상 : 경기도 거주 중·고등학생

■ 문의 : 박진 상임활동가(031-213-2105) www.rights.or.kr(인권교육) 참조

# 다산 인권

제80호

2002. 8. 6.(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편집인 : 송원찬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 레미콘회사들, 조합원상대 수억원 손배 청구

법원 징역형 선고 등에 업고 가압류 소송...비정규노동자 인권침해 맞물려

6일 오후 2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제2단독(안병욱 판사)에서는 작년 특수고용직 투쟁에 앞장섰던 수도권 지역의 레미콘노동자들 22명에 대한 업무방해선고공판이 있었다.

재판부는 22명에 대해 전원 유죄로 인정하여 많게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적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 22명 중 17명에게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 레미콘 노동자들은 지난 2000년 9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의 조합원들로서 레미콘 회사들에게 노동조합인정, 단체협약체결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레미콘회사들은 이들 레미콘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했고, 급기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마저 거부하여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2001년 4월 10일 총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레미콘회사들은 파업을 빌미로 500여명을 집단해고했고, 집과 레미콘차량을 가압류하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했다. 레미콘회사들은 더 나아가 레미콘조합원들 수백명을 경찰에 업무방해로 고발하여 수천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게했으며 급기야는 구속까지 하게 만들었다. 레미콘회사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너무나도 긴 파업으로 힘겨운 생계를 극복하고자 아무조건 없는 복귀를 원했던 레미콘조합원들에게 반성문을 요구하거나 복귀를 거부했다.

이런 레미콘조합원들을 검사는 업무방해로 기소했고, 법원은 이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용인시 모현면 소재 CKI인프라시스 레미콘회사(대표이사 허승)는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을 해고하였음은 물론 분회장의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그리고 급기야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손해를 보았다며 4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조합원 7명에게 제기했다. 경제활동 노동자 중 50%를 넘어서는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는 시기에 현행 노동법은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원은 이를 답습하고 있어 비정규직 소속 회사들의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비정규직들의 노동조합은 해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합법적인 활동이 아니라 불법이며 업무방해이고 영업을 방해하는 재산권침해행위라는 것이다. 현행 노동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점점 더 늘어가는 비정규직들의 인권침해는 일상이 될 것이다. [다산]

## "수원시민 통일의지 뽐뽐 뭉친다"

10일 만석공원서 제8회 수원시민통일한마당 열려

제8회 수원시민통일한마당이 오는 10일(토)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장안구 만석공원에서 열린다.

수원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준비한 이번 통일한마당은 6·15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실현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13일 양주에서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고 신효순, 심미선양을 위한 추모제도 결들인다.

이번 통일한마당은 크게 전시회, 시민참여 프로그램, 공연, 추모곡, 대동놀이로 꾸며진다. 전시회로는 친일반민족행위를 알리는 전시회 및 서명(경기민연련), 장갑차 희생자 및 주한미군범죄 사진전(용산미군기지수원이전결사반대수원공대위), 북한문화유산사진전(역사기행연구회 '역사와 진실'), 방북취재단 사진전(수원 YMCA), 반전평화통일 판넬(수원환경운

동센터), 통일만화전시회(수원KYC), 시민참여프로그램으로는 '여성들이여 미치자' 여성마당(수원여성회), 하루감옥체험(다산인권센터), 세발자전거대회, 통일염원물로켓발사(수원KYC), 추모백일장(새시대청년연합회), 공연으로는 통일염원율동(수원여성의전화), 통일맞이 장안구 100인 합창(수원지역민주노동당), 문예공연(청년학생연대)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수원민예총에서 의정부 두 여중생과 주한미군에 의해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을 위한 추모곡을 펼친다.

이상명공동집행위원장은 "올해 통일한마당은 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들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방향에서 기획됐다"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수원시민들과 함께 한반도에서의 평화통일을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산]

### 노동기본권 침해 직권중재제도 철폐하라

#### 70개 시민사회단체들, 병원 장기파업사태 해결 촉구

지난 5월 70여 개 보건 의료, 종교, 시민, 사회, 민중단체들로 구성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직권중재제도 철폐와 보건 의료노조 장기파업사업장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76일째 장기 파업을 맞고 있는 병원사업장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직권중재제도를 철폐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직권중재제도가 불성실 교섭, 파업 장기화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즉각 직권중재제도를 철폐하고 병원의 장기파업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병원 사업장 중 장기파업을 맞고 있는 곳은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3개 병원(강남성모, 여의도성모, 의정부성모), 경희의료원, 제주 한라병원, 목포 가톨릭 병원, 제천정신병원이다.

이 가운데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3개 병원과 경희의료원은 6일 현재 파업 76일째를 맞고 있다.

보건 의료노조에 따르면 현재 파업중인 병원에서 노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가 대대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동안 병원파업과 관련, 출두요구서 발부 및 체포영장 발부자가 모두 180명에 달하며, 손해배상 청구액 19억6천만원에 가압류가 무려 50억원에 이를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파업기간 중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징계해고자가 34명이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만 해도 293명이다.

공대위는 병원사용자측에서 파업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부당노동행위 등을 일삼으면서 노조탄압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공대위는 병원의 장기화된 파업은 바로 직권중재제도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일부 병원사용자들은 직권중재제도만 적용되면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서 노조 간부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또 경찰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믿고서는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불성실하게 응하고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마냥 강병일변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대위는 직권중재제도가 표면적인 명분과는 정반대로 실제에 있어서는 공공 부문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노동조합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는 핵심적 기제로 작용해 왔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미 지난 96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5대 4 다수의견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고, 지난해 11월말 행정법원도 헌법재판소에 직권중재위헌신청을 한 예를 들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49차 보고서에서도 강제중재제도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결사의 자유에 위반된다면서 시정 권고했음을 강조했다.

공대위는 악법 직권중재제도 철폐, 병원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병원사용자측의 노조와의 성실한 교섭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대신**

### "의문투성이 수사 발표"

#### 민변, 여중생 수사발표 의견서

민변은 5일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서 발표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이 의견서에 따르면, △도로폭보다 폭이 넓은 사고차량이 무단 운행하면서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교행을 시도하다 사고 지점 앞에서 갓길로 방향을 바꾼 것이 사고의 1차적인 원인이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 주체를 전혀 밝히지 않았고, △검찰은 통신장비 잡음 등으로 운전병이 관계병의 정지지시를 듣지 못했다고 했으나, 운전병과 관계병이 착용했던 통신장비의 소음방지장치가 떨어져나갔고 통신장비가 있는 것을 착용한 점에 대해 왜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통신장비에 대한 긴급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며 △검찰은 관계병과 운전병이 피해자들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했으나, 오르막길에 빨간색 옷을 입은 이들을 발견하는 것은 무리가 없었으며, 피해자 발견지점과 관련해 번복 진술한 의혹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수사결과발표는 국민의 의문을 해소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대신**

### 제2회 청소년모의법정대본 공모 친구야! 성난사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 공모의 주제 및 소재 : 청소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현상, 참신한 내용 (청소년 폭력, 청소년 성매매, 따돌림 등 청소년 문제나 두발제한, 체벌, 교칙문제 등 학교생활상의 문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 공모의 형식 : 공연시 20분~30분 정도의 분량(원고지 50매 내외) / 제출형식 : PC 신명조체 11포인트, A4 용지로 작성해서 제출
- 당선작 및 부상품 : 대상, 우수, 장려작 상장 및 상금 수여
- 일정 및 접수 : 9월 13일까지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대상 : 경기도 거주 중·고등학생
- 문의 : 박진 상임활동가(031-213-2105) www.rights.or.kr(인권교육) 참조

# 다산인권

### 제81호

2002. 8. 13. (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편집인 : 송원찬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 성폭행 피해자 검찰조사후 자살기도

### 교사 성폭행사실 전면부인, 검찰 당사자 거짓말탐지기 조사예정

지난해 2월말경부터 2002년 5월까지 5회에 걸쳐 H고등학교 교사와 경기도 펜싱협회 관계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H고교에 재학중인 펜싱선수 조모양(고1)이 13시간동안 피의자와의 대질심문을 포함한 검찰 조사를 받은 후 그 충격으로 자살을 기도한 사건이 발생했다.(다산인권 77호 관련기사 참조)

다행히 조양의 아버지에 의해 발견돼 긴급히 수원소재 D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조양은 유서글에서 '정말 힘든 건 죄진 사람들은 지금 너무 너무 몇몇한테 피해본 나는 너무 죄인 같아 항상 고개 숙여야 하고 피해야 되잖아. 어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지 모르겠어'라고 남겨 검찰조사중 대질 심문과정에서 피의자와의 대질 충격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조양은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며 건강이 호전되는 대로 정신평치료도 받을 예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 6월중순경 수원지검으로 송치되었으나 한달여 동안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수원여성의전화를 비롯한 60여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명으로 '성폭행 피해자 구속수사와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진정서를 제출하자 수사가 시작됐다.

현재 검찰은 경찰수사를 백지화시킨 상태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직접조사를 위하여 피해자 조양, 피의자 2인, 각 참고인들을 불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대부분의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조양을 비롯한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고려하고 있고

조양의 변호인은 검찰에 조양이 작성한 유서와 병원진단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여성의전화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조양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를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와 대질심문을 하려한데 대해 피해자 인권침해에 대한

## 국가인권위,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권고

###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등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대책 전면적 재검토 요구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현 산업연수생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권고하고 나서 향후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정부가 지난 7월15일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이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 국무총리에게 개선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권고했다.

특히, 국가인권위는 "산업연수생제도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하여 국제사회에 인권탄압 국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었다"라며 "앞으로는 보다 당당하게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수원지검 앞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성폭행 피해자 구속수사와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오는 14일에도 수원지검 앞과 H고등학교 앞에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이들은 오는 19일 단체인담회를 갖고 이 사건에 대한 경과과정과 상황을 공유하고 'H고등학교 성폭행 대응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조직적인 대응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대신**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합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 포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가인권위는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동포(조선족)로 국한시켜 우대하는 정책은 인종 및 민족적 차별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우며, 내년 3월31일까지 불법체류자 출국조치에 대해서도 한시적 사면조치를 통해 시간을 갖고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22일부터 전국의 외국인노동자지원단체들은 정부의 외국인력개선방안 철회를 주장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신**

### < 주제가 있는 작은인권영화제 >

- 일시 및 장소 : 8월 20(화) 오후 7시 / 다산인권센터 회의실
- 상영작 : 조국은 없다 / 탈북소년 중국에 가다(연출 변재성)

### < 제 4 회 다산인권포럼 >

- 일시 및 장소 : 8월 27(화) 오후 7시 / 다산인권센터 회의실
- 주제 : 사상·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 문의 : 노영란 상임활동가(031-213-2105)

### 인터넷 토론 전지윤 학생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판결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인터넷에 올린 토론 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기소된 전지윤 학생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씨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다음카페 민주노동당 성공회대학교 학생위원회 자유게시판에 올린 7개의 글 가운데 6개를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6항인 '후원제안서 양식(교정본)만 무죄판결을 내렸을 뿐이다.

전씨의 무죄를 주장했던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는 논평을 통해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토론을 체제위협으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이라는 잣대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며 법원판결을 비난했다. 최근 인터넷활동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사례를 보면 7월25일 서해교전 관련 논쟁을 벌이던 한 회사원 김모씨, 인터넷에 '북한사랑'을 개설해 운영활동했다는 이재운씨, '범민련전사'라는 카페에 올린 글을 문제삼아 구속된 이성우씨 등이 있다. **다산**

### 노동자 통일선봉대 100여명, 매향리 미사격장 진입 농성

민주노총 3기 노동자 통일선봉대와 민주노총 경기본부 조합원, 학생 등 120여명이 12일 오전 11시경 매향리 쿠니 육상사격장 진입을 시도, 12시경 경찰의 봉쇄를 뚫고 진입했다.

이들은 쿠니 사격장내에 누워 "주한미군 필요 없다" "미군기지 폐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진행하였으며 상황이 정리되고 사격장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대열 뒷쪽에 있던 참가자들이 경찰 병력에 의해 차단되어 이 중 석권호 민주노총 경기본부 정책국장 등 4명이 강제연행 되었다가 곧바로 석방되었다.

한편, 이날 집회참석자들은 기아자동차 노조대의원 100여명이 집회에 결합하는 과정에서 사복경찰들이 이들 대의원들의 목을 진압봉으로 조르는 등 과잉진압을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다산**

### 서울시장 사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이동권연대, 국가인권위원장실 점거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지난 12일 오전 11시 30분,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공동대표 박경석, 이하 이동권연대) 소속 20여명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실을 점거하고 이 들중 9명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단은 이날 오후 2시에 위원장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발산역 사고에 대한 책임을 계속 회피하면서 450만 장애인을 기만하고 있다"며 "서울시장의 공개사과가 있을 때까지 인권위원장실 점거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발산역 리프트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언론 등을 통한 공개사과 △지하철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추진본부'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를 점거한 것은 국

가인권위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국가기관이며 장애인 인권과 이동권 보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라며 "국가인권위가 이번 발산역 사건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앞으로 이들은 릴레이 1일 단식농성단과 지지방문단을 조직하는 등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2월 오이도 장애인 수직형리프트 추락사 사망사건의 투쟁을 계기로 결성된 이동권연대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며 계속해서 저상버스 도입을 주장해왔다.

또 지난 5월 중증장애인 윤재봉 씨가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리프트를 타다 추락 사망한 사건 이후에는, 이에 대한 서울시장의 면담과 공개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면담은 물론 공개사과 요구를 거부했다. **다산**

### 외국인 강제퇴거명령시 구제절차 보장해야

지난 9일 국가인권위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재중동포 조모 씨 등 3명이 낸 진정과 관련,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할 것"을 권고했다. 조씨 등은 지난 5일 오후 1시경 만취한 상태에서 수원의 한 정육점 주인에게 행패를 부리며 욕설을 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입건됐다. 다음날인 6일 이들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고, 곧바로 출입국관리소장으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조씨 등이) 대한민국의 영역안에 있는 조선족 중국인들이고, 세사람이 외국인 등록을 필하고 체류중이거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를 이행했다는 점, 이들의 행위가 국익이나 사회질서를 해치지 않았다는 점, 사건당시 세사람이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이들이 제기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 필요한 구제조치가 종결되기 전까지 강제퇴거 명령집행을 정지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비록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구제절차가 충분히 보장돼야 함을 강조해 출입국관리소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외국인 추방의 관행에 쐈기를 받는 조치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법무부장관이 이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게 되며, 조씨 등이 그 결과에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3호) 및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같은 항 4호)에 대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산**

# 다산 인권

제82호

2002. 8. 20. (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다산인권센터 ●편집인: 송원찬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 교사 성폭행 고소 여고생, 무고 체포영장

여성시민단체, 검찰의 편파적 수사 거센 반발 - 엄정수사 촉구

(속보) 수원지역 H고교 교사의 여고생 성폭행사건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다산인권 77호, 81호 참조) 검찰이 도리어 피해자인 여고생을 무고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여성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수원 H고교 펜싱선수 조모양의 성폭행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형사1부 이주형 검사는 20일 "조양이 체육교사와 경기도 펜싱협회 관계자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시점과 장소가 정황상 성폭행이 어려운 것으로 참고인 조사에서 드러나는 등 무고 혐의가 짙어 조양을 소환했으나 응하지 않아 영장을 발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양의 변호인 손난주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조양이 지난 12일 검찰에서 대질신문의 충격으로 조사후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 치료를 받은 뒤 현재 서울 모병원에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양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라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행위를 비판했다. 이어 손변호사는 "조양은 심신이 안정되는 대로 검찰에 출두하여 수사에 응할 것이다"라며 밝혔다.

그동안 H고교 성폭행 사건의 엄중수사촉구를 주장하고 있는 수원지역 여성시민단체들은 21일 12시에 수원지법앞에서 'H고 성폭행 피해자 체포영장발부 규탄과 피해자 중심수사 및 가해자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검찰이 미성년자 성폭행사건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파악하지 못한채 수사를 처리하고 있다'며 비판

하며 '피해학생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즉각 철회하고 가해교사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성폭행 가해자에 대하여 해당 학교와 교육청은 응분의 징계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23일

##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도지사가 나서라

경기도지역 시도의원 10여명, 손학규 도지사 공개서한 발표

미군기지시설확장반대및 우리땅되찾기 경기도운동본부(본부장 김준기)와 민주노동당 박미진 도의원을 비롯한 김현철(수원시의원)등 10여명의 경기지역의 시의원들은 지난 16일 오전 11시 수원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 2의 미선이와 효순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도지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2000년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미군의 성폭행사건에 대해 미국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낼 수 있었던 데에는 오키나와 현 지사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는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미군기지의 87%가 경기도에 몰려 있는 현실에서 경기도에서 미군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원 팔달문 중앙국장 앞에서 집회를 하는 등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 엄중처벌을 요구하며 집회 등 시위를 계속해서 벌일 계획이다.

한편, 이 사건의 검찰수사와 별도로 이 사건에 대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팀에서 집중취재중(8월 31일 방영예정)이며 현재 여러 언론사들도 앞다투어 취재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건의 공방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산**

시도의원들은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경기도지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통해 "도지사가 나서서 1,000만 도민과 함께 여중생 사망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재판권 이양을 촉구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손 지사에게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국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경기도 차원의 미군기지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앞으로 이들은 "경기도내의 모든 의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추진하겠다"며, "경기도 의회에서 사전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과 모금운동을 펼쳤다. **다산**

### < 제 4 회 다산인권포럼 >

#### 인터넷과 인권

- 일시 : 2002년 8월 29일(목) 오후 7시
- 장소 : 다산인권센터 회의실(수원지방법원 정문앞)
- 강연 : 장여경 진보네트워킹센터 정책실장
- 문의 : 031-213-2105 ( 노영란 상임활동가 )

### 인권단체들, 발산역 리프트 사고 서울시장 사과 및 국가인권위 해결 촉구나서

인권실천시민연대등 12개 인권단체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산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장의 공개사과와 국가인권위의 적극적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진관(불교인권위원회) 스님은 '서울시는 중증장애인들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이 9일째 되도록 아무런 답변조차 없으며, 가까운 인명이 희생되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한 진정을 제기받고도 인권 주무기관으로서의 어떠한 역할도 수행한 바 없으며, 법적 권한이 없어서 아무 것도 도와줄 수 없다. 농성장에서 나가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규탄발언을 한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농성장에서 퇴거만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 직원들의 태도는 매우 관료적인 행태이며, 이번 문제에 국가인권위가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하며 사태해결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끝낸 참가자들은 서울시장으로 행진을 해서 대표단과 시장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부재중이라며 면담을 거부해 항의서한만 전달했다. 시청앞에서 가진 집회에서 이수호 전교조 위원장은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는 생존권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인 만큼 서울시의 성의있는 답변이 있어야 한다"며 서울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장애인들은 지난 5월 발생한 서울지하철 5호선 발산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에 항의해 서울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지난 12일부터 국가인권위에서 9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다시**

### 영화속의 재판이야기

김철준 변호사(다산인권센터 운영위원)

#### 1. 피고인

강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회적 편견이 있다. 강간은 폭력이라기 보다는 승낙 받지 않은 성행위라는 편견과 아무래도 약한 여성의 단정치 못한 행실이 강간을 유발하기 쉽다는 편견.

여주인공 사라 토비아(조지 포스터)는 남자 친구와 싸우고 화가 난 나머지 혼자 술집에 들러 술을 마신다. 만취된 사라는 주크 박스 앞에서 요염한 춤을 추다가 술집 안에 있던 남성들에 의해 윤간을 당하고 만다. 사라는 용기를 내어 신고를 했지만, 그녀가 가진 정황은 불리하기 짝이 없다. 그녀는 과거에 마약을 소지한 전력을 갖고 있으며, 다른 남자와 동거생활을 하고 있다. 당연히 사생활이 단정해 보이지도 않는다. 법률가들은 이런 사정들을 물고 늘어지며 모든 책임을 사라에게 떠넘기려 한다.

우리나라의 형사재판도 마찬가지다. 가해자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약한 옷을 입고, 행실이 단정치 못했다.' '밤이 늦도록 술을 함께 마셨다.' '그다지 심하게 저항하지 않았다' 등의 주장을 펼친다. 강간에 대한 두 가지 편견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사라는 법정투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강간에 대한 편견의 일각을 무너뜨린다. 강간은 단지 폭력일 뿐이며 비록 행실이 단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정의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다.

하지만 이 영화는 또 하나의 편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아니, 조장하고 있다.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의 모든 조건을 갖춘 여주인공이 강간을 당한 것으로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그런 여성이 강간을 유발하기 쉽다는 또 하나의 편견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 2. 필라델피아

헐리우드는 또 두마리의 토끼를 쫓고 있다

미국독립선언서가 선포되었던 자유와 평등의 도시 필라델피아. 엔디는 그곳 최대 로펌의 촉망받는 변호사다. 대표변호사 윌러도 그의 능력을 신뢰해서 큰 사건의 수석변호사로 임명한다. 하지만 그는 동성애자이며 에이즈환자였다. 윌러는 동성애에 대한 증오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의 전형.

그는 엔디의 얼굴에 난 에이즈반점을 보고 소송서류를 소홀히 간수했다는 이유를 들어 해고한다. 엔디는 에이즈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결코 정의일 수 없다고 믿기에 로펌을 상대로 법정투쟁을 결심한다. 그리고 엔디는 시민들이 건설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소송에서 시민들을 변호했던 흑인 변호사 밀러를 선임한다. 재판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드라마였다. 이들은 윌러가 엔디의 에이즈 반점을 알고 해고했다는 사실과 그가 동성애에 대해 혐오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밝혀내고, 마침내 배심원들도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림으로써 정의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감동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영화가 과연 동성애자들의 문제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가.

우선 이 영화는 에이즈가 동성애에 의해서 비롯됐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깔고 있다. 영화의 시작에서는 밀러의 첫딸의 출산과 가족들의 환호가 그려지고 이어서 동성애자들의 회화화된 모습과 불쌍한 모습이 되풀이 보여진다. 밀러는 엔디의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집에 들어와서는 어린 딸과 부인을 소중하게 끌어안는다. 심지어 '난 호모가 싫어'라고 외치기까지 한다. 영화의 에필로그. 소송에서 이긴 엔디가 불쌍하게 죽어가는 모습과 필라델피아 너른 공원을 밝게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마침내 이 영화는 그 본심을 드러낸다. 양성애에 기반한 가족주의가 진정한 미국의 정신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 다산인권

제83호

2002. 8. 27.(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다산인권센터 ●편집인: 송원찬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 인권단체 장애인이동권 동조단식

발산역리프트참사 서울시장 공개사과 촉구...인권위 조사키로

지난 5월 서울 발산역 리프트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장애인이동권연대가 27일 현재 단식농성 17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26일 다산인권센터,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 등 5개 인권단체가 동조단식에 돌입했다.

인권단체들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단식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를 비롯한 당국은 발산역 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 때마다 피해자 본인에게 모든 과실을 돌리며,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여왔다"면서 "인권단체들은 장애인이동권연대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면서 서울시장이 공개사과하고 구체적인 장애인이동권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동조단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서울시측은 단식농성에 지쳐가는 장애인들의 고통을 여전히 외면한 채 '장애인전용 콜택시 도입'이라는 허구적인 대책을 내놓는 등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리프트추락사고에 대해 최소한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권단체들은 "마지막 기대를 품고 찾아온 장애인들을 천덕꾸러기로 대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태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느낀다"며 국가인권위의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이들은 "장애인들의 농성을 계기로 국가인권위 전 건물에 전자출입장치의 설치를 추진하는 등 장애인농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나, 이는 국민 인권신장의

보루로서 국가인권위가 보여야 할 태도가 아니"라면서 "지금이라도 장애인이동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인권위가 적극 대응에 나설"것을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서울시장의 공개사과가 있을 때까지 장애인이동권연대와 함께 단식을 계속할 방침이다.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회원 100여명은 26일 오후 서울시장 앞에서 '서울시장 공개 사과·구체적인 장애인이동권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인간사슬 잇기 집회를 가졌다.

## 여성·시민단체들 수원법원 앞 1인시위

성폭행피해자 중심 수사, 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지난 20일 수원지검 형사1부 이주형검사는 수원 h교 성폭행 피해자인 s여학생 대하여 무고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본지 제77호, 81호, 82호참조)

수원여성의전화를 비롯한 70여개 단체들은 체포영장 발부에 항의하는 항의집회를 지난 21일 수원지검 앞에서 갖고 체포영장발부의 부당함과 피해자중심의 수사를 통한 가해자의 엄중처벌을 검찰에 요구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체포영장 발부 철회와 피해자중심수사, 가해자 엄중처벌을

또 27일 오후 2시 서울시장 홈페이지에서 대규모 온라인시위를 전개했으며, 서울시의회가 열리는 28일부터 30일까지 의회 앞에서 피켓팅 등 다각도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28일 오전 11시 발산역 장애인리프트 추락사고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권위는 발산역 리프트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장애인단체와 리프트 전문가, 인권위 조사관, 시 관계자, 피해 유족들과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최근 리프트 사고가 발생한 2호선 영등포구청역, 4호선 혜화역 등 5개 다른 전철역의 리프트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다시**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지난 22일부터 수원지검 앞에서 계속하고 있다.

현재 피해여학생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인 지난 26일 오후 1시30분에 검찰에 출두하여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조사를 받았고, 27일 오후에 다시 한번 출두하여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사건은 피해여학생이 담당체육교사와 P협회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6월 중순에 수원지검에 송치되어 7월 중순부터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다시**

★제4회 다산인권포럼 '사이버세상에서 우리는 자유로운가'

· 8월29일(목) 오후 7시 다산인권센터 회의실

☆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경기지역 범사회인대책위 출범식

· 9월7일(토) 오후 5시(아주대/ 변경시 추후 알림)



### 2기 민주화보상심의위원 보수성향 인사 대거위촉

2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에 보수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위촉돼 말썽을 빚고 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26일 신입 위원으로 이문재, 조중환, 이우승변호사, 최송화(서울대 법대), 박승희(성균관대), 백경남(동국대) 교수, 김상근 제2건국위원회 상임위원장, 김상용 전 대한매일 주필을 선임했다.

신입 위원 가운데 현재 시민단체로부터 크게 반발을 사고 있는 이는 이문재 변호사와 최송화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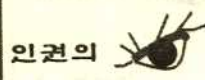
이변호사는 지난 6월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송화교수는 1979년 1월부터 80년 7월까지 서울대 학생부처장, 학생처장 직무대리로 재직했다. 문제는 이 당시에 대학생 강제징집 및 학생 제적이 대거 이뤄졌던 시점에 이 같은 보직을 담당했다는 사실이다.

이밖에도 일부 신입위원이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고, 중도·보수적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신입위원들이 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는 "심의위원회 자체를 부정하던 인사를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민주화운동을 울곧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제되고 있는 일부 인사들을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산**



### 용역경비업체 농성장 침탈은 명백한 불법

박영운 변호사(법무법인 다산)

지난 25일 새벽 4시 제주 한라병원에서 파업농성으로 지칠 대로 지친 채 잠을 자던 130여명의 한라병원 노조원들은 일단의 괴청년들의 무자비한 폭력에 치를 떨어야 했다.

중무장을 한 용역경비업체의 직원 160여명이 병원측의 사주를 받고 새벽 노조원들이 잠든 틈을 타서 농성장에 난입하여 대다수가 여성인 노조원들을 군화발로 짓이기고, 주먹으로 때리고, 방패로 내리찍으며 농성중인 노조원들을 강제로 끌어낸 것이다.

이들 경비업체 직원 대다수가 폭력배들로 이루어졌다니 아연실색할 일이다. 이들이 누구로부터 이 같은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았던 말인가? 과연 법치국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발생한 일이라 할 수 있을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현행법률에 의하면, 허가된 물리력으로서의 공권력인 경찰권 역시 일정한 한계가 있다. 경찰권에 의한 개인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는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인용할 수 없는 장해가 발생하였거나, 장래 그러한 장해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어떠한 행위 또는 사실이 사회질서에 해악을 미친다는 단순한 사실이나, 사회질서에 대한 장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단순한 가능성에 기한 경찰권 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라병원의 파업농성에 대하여는 경찰권 발동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물며 사인에 의한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물리력의 행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한라병원 노조원들을 폭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끌어낸 경비용역업체의 설치근거인 경비업법 제2조는 시설경비업무의 범위를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7조에서는 '경비업자는 경비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경비업자의 의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결국 경비업자가 그 자신의 업무범위와 의무를 넘어 한라병원 노조원들을 강제로 끌어낸 것은 불법적인 폭력행위이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비용역업체의 직원들이 한라병원 노조원들에게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500여명의 전투경찰을 배치한 채로 수수방관하였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태를 악화시킬 것을 우려, 교통정리와 정보입수에 주력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불법적인 폭력행사 현장에서 경찰의 직무를 유기한 것에 대한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경찰은 직무유기를 넘어 사인의 집단폭력을 묵인하였고, 비호하였다는 질책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 장애인리프트참사에 대해 서울시장은 공개사과하고, 장애인이동권 보장하라

장애인이동권보장 단식농성장 지지방문 갑시다/ 서울 시청역 국가인권위 11층 쉼터

# 다산 인권

제84호

2002. 9. 3. (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다산인권센터 ●편집인: 송원찬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 경찰, 한총련학생 연행과정 권총위협

경기지방경찰청, 한총련 대의원 무리한 검거로 물의

경찰이 수배중인 한총련 대의원들을 연행하기 위해 권총으로 위협해 경찰의 과잉수사라며 대학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인총련과 경원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시40분께 성남 경원대학교 정문앞에서 분당경찰서 이매파출소 소속 경찰관 1명이 명지대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 유모씨 등 2명을 연행하려다 학생들에게 가로막히자 권총을 뽑아들어 학생들을 위협했다.

이날 학생들은 '여중생 살인미군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을 이용해서 명지대학교를 나오는데 승용차 2대가 따라오기 시작했고 건물목에서 신호대기중 갑자기 건장한 남자 10여명이 뛰어와 주먹으로 차를 두드리며 차량의 문을 열 것을 요구하자 황급히 방향을 틀었고, 경원대로 향하면서 약 한시간 가량 추격전을 벌였다. 어어 연락을 받고 나와있던 경원대 학생 10여명이 경찰차의 학교 진입을 저지하자 정복을 입은 경찰 2명이 권총을 뽑아들었다. 경찰들은 강력하게 항의하는 학생들을 향해 권총을 겨누는 것이다.

학생회 관계자는 "차안에서 내려 학내로 들어가려는 학생회 간부들을 향해 권총을 빼들고 겨누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경찰은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측은 "병소나사고인 것으로 알고 갔다가 대학생들이 각목을 들고 위협하자 어쩔수 없이 권총을 빼들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민중연대(준) 등 사회단체관

계자와 학생들 50여명은 3일 오전 10시에 경기지방경찰청 앞에서 "한총련 학우 석방과 한총련 대의원 총기위협 규탄 기자회견 및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 연달아 김대봉(경기대), 신지숙(한신대) 등 졸업생을 연행, 구속한 것을 규탄하며 석방을 촉구했다.

또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경찰의 총기위협으로 인한 무분별한 과잉연행을 규탄하며 항의서한을 경기지방경찰청장에 전달했다. 한편, 한총련의 이적규정 철회와 합법적 활동보장을 주장하며 구성된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경기지역 범사회인 대책위원회'의 발족식이 9월7일(토) 오후 5시 수원월드컵경기장 주변 중앙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발족식 이후 저녁 7시부터는 남북통일축구 경기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관람하면서 공동운원을 할 계획이다. **다산**

##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배제 입법 박차

사회단체협의체, 9월5일 공소시효배제 입법촉구 의견서 국회제출 예정

최근 '허원근 일병 자살조작사건' 등을 통해 공소시효만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능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침해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새사회연대 등 16개 시민사회인권단체로 구성된 '반인도적국가범죄 공소시효배제운동 사회단체협의체'는 오는 5일(목)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각계 시민사회단체들 연명한 공소시효배제입법 촉구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하고 조속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촉

구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도 지난 26일 오후 3시에 박상기 연세대 법대교수, 박찬운변호사, 조국 서울대 법대교수, 조정찬 법제처 법제관,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하태훈 고대법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공소시효배제입법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다수 참석자들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표명이 있을 예정이다.

공소시효배제운동협의(2면에서 계속)

###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경기지역 범사회인 대책위원회 발족식 - "오~ 합법! 한총련!"

- 일시 및 장소: 9월 7(토) 오후 5시 / 수원월드컵경기장 중앙공원
- 문의: 송원찬 상임활동가 (011-750-3455)

### 청소년인권의식 표본조사 발표 및 청소년인권향상을 위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9월 12(목) 오후 3시/수원청소년문화센터 은허수홀
- 문의: 박진 상임활동가 (031-213-2105)

(1면에서 이어짐) 체는 지난 1월 수지김(일명 김옥분) 사건을 계기로 구성돼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및 공소시효 배제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대중서명전, 각종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반인도적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별법(안)'을 만들어 송영길(새천년민주당)의원을 통하여 국회에 입법청원을 한 상태다. **다산**

**국가인권위, 면전진정 방해한 교도소장 징계권고**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재소자들의 진정 신청을 방해한 진주교도소 이모 소장 등 교도소 관계자 6명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주교도소 교도관 심모씨가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인 이모씨가 '에이즈 치료를 받게 해달라'며 인권위에 낸 진정과 관련해 이씨를 면담하면서 '진정을 취하지 않으면 방을 옮기겠다'며 진정신청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또 교도관 조모씨는 교도관에게 폭행당한 내용을 호소하기 위해 진정을 신청한 재소자 엄모씨와 함모씨를 상담하면서 진정을 취하하라고 종용하거나 진정신청을 회피해 진정 방해를 금지한 국가인권위법을 위반했다는 것.

인권위는 "교도소의 지속적인 조직적인 진정 방해는 공무원이 시설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면전진정의 방해는 헌법 10조(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며, 국가인권위법 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을 위반한 것이다. 또 국가인권위법 57조는 '진정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2월부터 9월2일 현재까지 총 364건의 면전진정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산**

**발산역 장애인 리프트참사에 대해 서울시장은 공개사과하고, 장애인이동권 보장하라**  
장애인이동권보장 단식농성장 지지방문 감사다/ 서울 시청역 국가인권위 11층 쉼터

**인권의  떠난 군인들에게 바친다.**

김삼석 (군사평론가, 수원신문기자)

7월 중순. 어느 때처럼 손전화 소리가 울렸다. 반가운 목소리였다. 그런데 8월 안에 뉴질랜드로 떠난다는 전화였다. 안타까웠다. 힘들어도 국내에 남아있기를 바랐던 바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 살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한숨이 나왔다. 무엇이 그를 힘들게 만들었을까.

그는 육사(32기)출신 임택준 중령이다. 올림픽에 정신이 팔리고 있을때인 1988년 7월 7일 육군본부에서 근무하던 미사일전문가 임 중령은 대통령에게 군의 민주화·인간화를 촉구한 31개항의 고발문을 내며 군 인권의 무법자들을 고발했다. 이후 군생활 17년을 타의에 의해서 마감했다. 동기생들한테도 '왕따'되었다. 기업체에 몇년 있다가 서울 마포구 망원동시장에서 고기장사로 생활을 해왔다. 나라의 장래를 기획하는 국가론을 써보는 게 꿈이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그에게 준 마지막 선물은 영등포구치소 경험이었다. 합참의장 진급을 앞두고 있는 한 군장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그 장성은 14년전 임중령이 양심선언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장본인이었다. 구치소에서의 일주일 경험이 더욱 그의 외국행을 앞당겼다. 참군인은 이렇게 떠났다.

8월 어느 날. 참군인이 부활했다. 18년만에 군에서 자살로 은폐 조작된 허원근 일병이 조직적인 타살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부친인 허원춘씨는 자식이 살아 돌아오는 것 같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눈물이 더욱 깊어졌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달에만도 강릉의 한 해안초소에서 불의의 총기사고로 박성식 일병이 피다만 젊은 꽃이 되었기 때문이다. 1년에 300명 이상의 젊은 군인이 분단된 사회에서 채 피다 말고 세상을 떠나고 있다. 전시사회이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짜고 친 9·11 테러 희생자 세배이상의 숫자가 한국군대안에서 지난 50년 넘도록 희생되었다. 부모님 가슴에 군복과 입던 옷만 돌아왔다. 자기문제가 아니다보니 주변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모른체한다. 분단은 휴전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선이 효순이도 마찬가지다.

분단과 전시상태의 최대 희생자인 군인들과 기지주민들에게도 희망은 찾아왔다. 2000년 6월 15일 남북 공동선언은 어쨌든 월드컵 세계 4강인 대한민국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국 세계 4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도자가 서로 가슴으로 겨안았다. 5천년만에 처음있는 일이었으니 해방이후 처음이다. 경의선 연결은 단순한 철길을 넘어 한민족과 시베리아, 유럽을 연결하는 생명선이다. 9월 17일 일본 총리의 방북 또한 해방이후 처음이다.

2003년 어느 날. 제네바협정 마감 시한 전에 북·일, 북·미 수교가 손에 잡히는 수순을 가고 있다. 통일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다. 그래야만 푸른 군복의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북·일, 북·미 수교는 미국 명령에 따라 한국군인들이 엠16소총을 들고 동족을 향해 일방장진하지 않아도 된다.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비로소 막 내리게 하는 세계적인 큰 일이다. 칠천만 겨레의 '한'의 결과다.

2005년 머지않아. 참 군인을 국내에 다시 불러오게 할 수 있고, 군인이 더 이상 개죽음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군인들이 제일 바라는 세상'이 우리 대에 펼쳐질 수 있다. 반갑다 통일야! 허나 아무리 좋은들 못다 핀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은 힘들지 않은가. 지금이라도 참군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 군에 자식을 보내지 않고, 군대를 부정하며 거짓말을 일삼는, 통일을 끝내 반기지 않는 세력들이 있는 한 거짓 군인과 별들만 만들어 내기 때문에...

**다산 인권**

제85호

2002. 9. 10. (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편집인 : 송원찬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이주노동자 노예사냥, 표적수사**

법무부, 경찰, 국정원 합동단속에 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

지난 7월15일 발표된 정부의 '외국인력 제도개선방안(개선방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8월말부터 정부의 불법체류외국인 합동(법무부, 경찰, 국정원)단속이 시작됐다.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연수제도철폐·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6일까지 안산, 부천, 김포, 서울, 경기도광주, 구미, 서울 성수 등지에서 8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단속됐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정부가 그동안 각종 이주노동자 관련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주노동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단속된 중국동포 2명(이철용, 김주석)은 지난 3월에 열린 중국동포 정책 회의집회에서 삭발을 하는 등 중국동포 권익활동에 앞장서는 이들이며, 같은 날 새벽 6시에 연행된 2명(고빌, 비두)도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에서 조합원으로 활동했던 이주노동자들인데 함께 연행된 12명 중 나머지는 풀려나고 이들만 강제출국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의 의도적인 표적 단속과 관련해, 지난 8일 과천종합정부청사 앞에서는 평등노조 이주지부 등 이주노동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비자 쟁취와 구속동지 구출을 위한 이주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의 단속을 규탄했다.

이들은 10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공문서 위변조 및 이주노동자 탄압 분쇄 기자회견", 그리고 11, 14일 서울출입국 관리소 앞에서 "고빌, 비두 표적단속 및 노동탄압 단속 추방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지난 9일에도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정책 철폐 및 산업연수제도 폐지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표적단속을 비롯한 사실상의 노예사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지역별로는 '지역감시단'을 구성하여 단속현장을 감시하는 한편 명동성당 농성단 결합과 지지방문, 공익소송단 명예훼손 소송, 양당 대통령후보 면담, 국민 토론회 집회 및 범국민 캠페인 등 강제추방반대와 연수제도 철폐 및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한 각종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수생제도를 확대하고 내년 3월까지 국내에 체류중인 미등록노동자들을 전원 추방하겠다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산**

**수원지역 청소년 인권의식 한 눈에**

다산인권센터, 12일 1800여명 청소년인권실태조사 발표회

다산인권센터가 지난 4, 5월 동안 수원 지역 청소년들 1,87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86.4%의 청소년들이 인권에 관심이 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거나 청소년 인권에 대한 제도나 법률에 배운 적이 있다는 청소년들이 (2면에서 계속)



**청소년인권의식 설문조사발표 및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02년 9월 12일(목) 오후 3시
- 장소 :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은하수홀
- 진행 : 청소년인권의식 표본 조사발표(수원시 청소년을 중심으로)
  - 박진(다산인권센터)
  -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인권적 접근을 중심으로)
  - 전효관 (하자센터 부센터장)
- 문의 : 박진 상임활동가(031-213-2105 / 017-268-0136)

☆☆ 작은 인권영화제 및 인권포럼 ☆☆

**"미국식 애국주의를 고발한다-9.11, 1년 후"**

- 일시 : 2002년 9월 17일(목) 오후 7시
- 장소 : 다산인권센터 회의실
- 상영작 : 9.11(다큐) / 강사 : 9. 11을 뒤돌아보다 - 김용한 평화운동가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

(1면에 이어서) 전체 응답자의 10%밖에 안 돼, 청소년을 위한 인권교육이 상당히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 스스로의 권리 행사와 관련한 질문에서, 조사대상자의 55.3%가 권리를 갖기는 하지만 아직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부모나 교사 등으로부터 일정한 제약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청소년들은 한 주체적인 인간으로 모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다고 답한 이들은 40%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들이 스스로 매긴 인권점수 중 100점에서 75점 사이를 순위로 살펴보면, 가정에서의 청소년 권리가 74.6%를 차지해 청소년들은 가정내에서 자신들의 권리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이어 사회에서의 권리가 45.7%, 학교에서의 권리가 41.9% 순으로 집계된 반면 청소년들의 노동권은 31%로 나타나, 청소년들도 스스로도 자신들의 노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를 준비한 다산인권센터의 박진 상임활동가는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이 느끼는 인권의식의 현주소와 학교, 가정, 사회에서의 인권현실과 의식의 정도를 파악하고, 청소년 스스로 자신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했다."고 밝히며 "이번 조사를 토대로 청소년인권교육을 증진하고 청소년 인권의식에 끼치는 영향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해서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개선과 기구 마련 등을 모색하는 계기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오는 12일(목) 오후3시부터 청소년문화센터 은하수홀에서 열리는 "청소년인권교육의 실태조사 발표 및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하자센터 전효관 부소장이 '청소년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계언을 하며, 청소년과 교사가 말하는 청소년의 인권, 경기도에서 나와 청소년정책을 발표한다. 또한 이날 청소년인권 전달기구의 마련에 대하여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다산]

국가인권위, 학교생활규정(안) 개선권고

교육부에 체벌금지, 학교 내 인권상담기구 설치 등 요구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는 10일 지난 6월26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생활규정(안)이 학생인권의 약화 및 인권침해소지가 있다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 예시안의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이번 권고가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가인권위 권고내용 요약>

▷ 체벌금지 수용 : 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교육부가 체벌 근거로 삼고 있는 초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 관련조항을 개정해 체벌금지를 적극 수용하라고 권고.

▷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로 개정 : 학생도 학교운영의 책임 있는 한 주체이므로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개정 권고.

▷ 학생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현행법상 만 20세까지 참정권이 있으므로

로 학생생활규정에 정치활동금지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학생 정당원이 될 수 없다.

▷ 학교 내 인권상담기구 설치 :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폭력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폭력예방 교육과정을 규정하여 인권의 보장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 '인권상담기구'를 설치 운영하도록 권고.

▷ 여가활동 관련 조항 포함 : 아동의 발달 및 행복추구를 위해 학교생활규정에 '놀이 권리' 및 '문화권'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용의사항 완화 : 학생들 스스로 개성을 표현하면서도 학생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다시 예시해야 한다는 견해 제시.

▷ 기타 : 학교생활규정의 목적에 학생인권 보장,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다산]

한총련 합법화 운동 경기지역 사회인들이 나섰다.

지난 7일 오후 5시 아주대학교 원천관에서는 종교, 여성, 학생, 민주동맹,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경기지역 범사회인 대책위원회'(한총련합법화 경기대책위) 발족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희영 상임공동대표(수원환경운동센터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한총련의 변화와 함께 어떠한 불의에 굴복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서라"라며 학생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또 서울 한총련합법화 대책위 정진우 집행위원장(목사)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열의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경기지역에서 한총련 합법화운동에 불을 지피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의 잣대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굴레 씌우는 것은 시대적 양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해 모든 이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 한총련 이적규정의 전면 철폐 △ 9기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수배해제 및 관련자 석방 △ 10기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 △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하며 앞으로 시민공청회 등 한총련 합법화의 정당성을 여론화 할 예정이다. 대책위 상임공동대표로 박희영, 김상완 민주노동 경기본부장, 김철준 변호사, 신연숙 경기여연 상임공동대표가 맡고 있고 홍창진 신부, 박미진 경기도의원 등 20여명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10기 한총련 김형주 의장의 공판이 광주지법에서 진행중이며 9일에는 증인으로 전 전대협 의장인 임중석 현 국회의원이 나와 한총련의 이적규정의 부당성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10월경에 이 재판의 선고결과에 따라 10기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다산]

다산 인권

제86호

2002. 9. 17. (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편집인 : 송원찬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미군차량과 충돌, 한국인 사망

여중생사망장소와 불과 4킬로 떨어져, 미군 안전대책 신뢰못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여중생 2명이 사망한 곳에서 불과 4km 떨어진 곳에서 또 다시 미2사단 훈련차량과 충돌로 시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6일 밤 11시 30분경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도로에서 스포티지(운전자 박승주,37.식당운영) 승합차와 마주오던 부교탑제 미군 트레일러(운전병 최희수 상병)가 정면충돌했고 이 사고로 스포티지 운전자 박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파주경찰서 사고처리반은 스포티지 승합차가 트레일러의 앞 부분을 정면으로 충돌한 현장상태 등으로 미뤄 일단 운전자 박씨가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직후 현장에서 트레일러를 운전한 미군 최상병이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미군 헌병대에 인계한 상황이다. 미2사단은 이날 오후 언론사에 보낸 자료를 통해 "사고 민간차량은 과속으로 주행, 중앙선을 넘어 정지해있던 트레일러와 정면 충돌했으며 트레일러는 경계등이 작동되는 등 호송안전절차에 따라 운영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의 사고원인의 조사여부를 떠나 또다시 비슷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망사건이 발생해 그 근본적 문제가 드러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지난 8월7일 미군사령부는 두 여중생 참사에 대한 재판권 이양을 거부하면서 획기적인 사고예방책 즉, △지역 주민들에게 훈련세부사항에 대해 통보한다. △금번 사고에 관련된 차량과 같은 대형차량의 이 동시 차량 행렬 전후방에 안내차량을 배

치한다. △훈련기간 동안 부대 지휘관은 차량이동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통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땅되찾기 경기도본부 관계자는 "얼마나 더 죽어야하느냐"

며 울분을 토해냈고 "이번 참사로 미군의 차량안전대책이 유명무실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미군을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박씨의 사체가 안치된 파주시 금촌의료원에는 이날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대책위' 관계자와 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찾았으며 일부는 사고현장에서 미군규탄대회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산]

<단상> 국가인권위원회의 현명한(?) 선택

중증 장애인들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37일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발산역 리프트 장애인사망사건에 대해 서울시장이 사과하고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설치와 저상버스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서울시장은 전임 시장시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으며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되풀이 할 뿐이다. 이러한 서울시와 장애인들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애꿎은(?) 국가인권위가 있다. 장애인들의 국가인권위 농성을 보면서 국가인권위의 대응 조치와 처신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다. 장애인 농성 이후 국가인권위는 서둘러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농성장의 전기를 끊고 하고 최근에는 조사발표의 공정성을 이야기하며 농성을 해제해야 발산역 조사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의 이런 모습은 어쩌면 이리도 코메디적인지, 오히려 국가인권위의 관료성을 비판하는 것보다 더 우스울 따름이다. 분명 이번 농성사건으로 인해 국가인권위가 곤란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이해 못할 일이 아니다. 엄연히 국가기관인데 불법(?)적으로 점거농성을 벌이는 것은 할 일 많은 국가인권위의 권위를 추락하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또 다른 농성자들의 선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도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하고많은 곳 중에 국가인권위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장애인들이 농성시작 전에 밝힌 바 있는 성명서를 읽어보기 바란다. 많은 이들은 국가인권위가 진정사건에 대한 민원처리기관이거나 팔짱을 낀 채 책상머리에 앉아 인권정책에 대한 권고만을 읊조리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국가인권위는 우리 사회 모두가 등을 돌린 이들에게 마지막 손길을 잡아주고 눈물을 닦아 그 해결의 지혜를 함께 모아내는 곳이어야 한다. 국가인권위가 진정으로 이도 저도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장애인인권을 보장함네' 하며 인권전담기구라고 거드름 피우는 것을 그만두기를 바란다. 차라리 국가인권위 능력한계를 솔직히 시인하며 공권력투입 요청해 국가기관의 권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어디 두고 볼 일이다.

## 경기교육청-교원단체 단체협약 체결

지난 7월 26일부터 일주일동안 경기교육청의 성실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전교조가 경기도교육감실 농성을 벌이는 등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교육청과 교원노조(전교조 경기지부, 한국교조 경기본부)는 16일 122개항의 2001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양측은 지난해 11월20일 교원노조의 교섭안 제출 이후 8차례의 실무협약의 4차례의 본교섭을 거치면서 장장 10개월만에 체결된 것이다.

양측이 서명한 협약서를 보면 교원업무 경감과 사립학교 감독강화 등 쟁점사항에 합의했고 주변교사제 운영은 교무회의를 거쳐 학교 자율로 결정하고 교사의 방학중 근무일수도 최소화한다는 전제 아래 교무회의를 통해 적정인원과 근무일수를 정하기로 했다. 또 교수-학습지도안과 학습경영록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고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만 결재하도록 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단체협약 조인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며 실제적으로 분회현장에서 제대로 단체협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경기지부측은 곧바로 9월 분회지침을 통해 단체협약을 강제해 내기 위해 <공동단협이행사항>으로 설정된 분회계시판마련과 포스터부착, <초등교육정상화>, <사립학교법개정>문안으로 플랜카드부착, 9월 25일 <분회교육의 시간 확보> (월 1회, 2시간, 방과후 근무시간 중, 단, 분회사정에 따라 분회교육의 날짜는 변경가능)을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3일 단체협약 체결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한국교조 경기본부장이 경기교육청 정문에서 공익요원의 제지를 받았다며 교육청이 한국교조에 대한 예우문제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 결국 체결을 거부, 16일 체결하게 된 것이다. **다산**

## 수원지검, 관련자 전원 소환 조사

교사 여학생 성폭행사건, 거짓말 탐지기 조사 판정불가 나와

교사의 무죄주장과 여학생 피해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H고 교사 여학생 성폭행사건이 지난 6월 수원지검 송치이후 석달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여학생의 거짓말에 의한 무고혐의로 가닥을 잡아가던 검찰이 처음부터 조사를 다시 수사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담당검사의 계장을 여성으로 교체한 상태에서 지난 16일 교사, 여학생 양측을 다시 불러 조사를 벌였고 이 피해학생의 초기상담원은 물론 펜싱부 학생 전원을 불러 재조사라고 할 수 없지만 사실상 조사내용을 다시 재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5일 실시한 양측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검찰이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판정불가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사는 거짓말탐지기의 재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금금증자아내기도 했다.

한편, 경기여성단체연합은 18

일 오후 2시 기업은행 동수원지점 강당에서 '학내 성폭력,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인가'라는 주제로 경기도내 학교성폭력 관련 긴급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수원, 김포에서 발생한 학내 성폭력사건의 경과과정 보고와 '학교성폭력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 조중신(한국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열림터)씨가 발제를 하고 전교조, 교육청관계자와 손난주 변호사 등이 참여해 최근 빈번하고 있는 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토론에 앞서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6일 교육청에 공문을 전달, 18일 오전 10시 교육감 면담을 신청한 상태이며 이 자리에서 학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이들은 지난 4일 수원지검 차장검사와의 면담자리에서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다산**



### <사회복지대학> 사회복지현장종사자의 권리찾기

- 일시 : 2002년 9월24일~10월22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총 5회)
- 장소 : 다산인권센터 회의실
- 대상 : 사회복지현장종사자와 사회복지에 관심있는 일반시민
- 참가비 : 30,000원
- 프로그램 :
  - 9월24일(화) 사회복지와 권리(사회복지와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사회복지 등) : 김철준 변호사
  - 10월 1일(화) 사회복지종사자 권리찾기와 노동법 해설 ①(근로기준법 해설: 휴가·년월차, 임금·퇴직금·각종 수당 등 산정방법, 취업규칙 등 / 산재, 해고 등) : 손경미 노무사
  - 10월 8일(화) 사회복지종사자 권리찾기와 노동법 해설 ②(노사관계법: 노사협의회등 노무관리 등) : 손경미 노무사
  - 10월15일(화) 사회복지종사자 권리찾기와 노동조합(참복지 실현을 위한 종사자들의 주체적인 노동조합 건설을 중심으로) - 장재구 사회복지노조 준비위원장
  - 10월22일(화) 사회복지 권리찾기와 조직화(노동조합이 건설된 곳을 중심으로 사례 발표와 방안 모색, 향후 지역차원에서 활동방안) : 에바다·안산·안양 장애인복지관 노조 등
- 문의 : 경기복지시민연대 허윤범 활동가(031-215-4399)

# 다산 인권

제87호

2002. 9. 24. (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편집인 : 송원찬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 보건의료노조 무기한 단식농성

민주노총도 '노동탄압 분쇄와 부실국정감사 규탄투쟁' 나서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차수련)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장기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 및 노조탄압 중단, 부당노동행위처벌' 등을 요구하며 차 위원장 등 노조원 50여명이 25일부터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당에 경찰투입을 승인한 한국 가톨릭의 노동탄압 실상을 알리고 문제해결을 호소하기 위해 국제노동단체 등과 연대해 다음달 초순께 로마교황청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태의 실질적 책임자인 정진석 주교와 방한중인 아린제 로마교황청 추기경과도 면담을 추진하는 등 평화교섭 쟁취와 장기파업 해결을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 보건의료 파업사업장 등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국정감사 대상 및 증인채택이 대부분 배제된 것에 항의해 24일 국회 앞에서 '부실 국정감사 규탄결의대회'를 갖고 25일, 27일에도 연달아 국회 앞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현재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업장은 한라병원, 경희의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주요국정감사 일정은 24일(서울, 부산,대구,경인,광주,대전노동청), 30일(노사정위원회,중노위,12개지노위 등), 10월4일(노동부)에 있을 예정이다.

강남성모병원 관계자는 "병원측은 대화로 사태해결의지가 전혀 없이 경찰병력 동원 등 노조파괴공작을 벌이고 있다"며 "현재 노조는 15명 체포영장 발부, 93명

출두요구서, 5명 불구속기소, 15억원 임금 및 조합비 가압류, 20명 해고, 573명 징계위원회 회부, 4개월치 무노동무임금

적용 등 노조에 대한 전면적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의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파업 119일만에 타결된 경희의료원외에도 현재 목포가톨릭병원(120일째), 제주한라병원(118일째), 제천정신병원(74일째), 고신의료원(53일째) 등이 장기파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산**

## 이동권연대 39일간의 단식농성 풀어

서울시, 저상버스도입 추진협의회 구성 약속

"우리는 단지 버스 몇 대를 얻고자 싸운 것은 아니다. 장애인과 서울시장이 모두 똑같은 사람이란 것을 밝히고 싶었다"

지난 19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39일간의 국가인권위 점거농성을 종료하는 기자회견장에서 류홍주 이동권연대공동대표(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위원장)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 5월19일 발산역 (2면에서 계속)



## 제7회 수원인권영화제

수원인권영화제가 어느덧 7회를 맞이했습니다. 인간을 위한 영상, 지역에서의 대안문화, 우리시대 '소수자들의 외침'을 향하여 올해도 지역단체들과 힘차게 필름을 돌립니다.

● 일시 : 2002. 11. 15(금)~17일(일)

● 장소 :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은하수홀

### <부대행사> ☆ 영화포스터패러디공모전 ☆

● 형식 및 내용 : 기성영화의 포스터를 현실 풍자적이거나 인권의 시각으로 자유롭게 재구성한 작품

● 자격 : 누구나(일반부/대학생부/청소년부)

● 규격 : A3, 또는 B4용지 크기

● 시상 : 최우수상 등 소정의 부상 증정, 시상식은 인권영화제 폐막식 때

● 접수 및 문의 : 다산인권센터(031-213-2105)

☆☆영화제를 함께 만들어 갈 자원활동가를 찾고 있습니다☆☆

(1면에서 이어짐)리프트사고로 지체장애 인 윤재봉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장애인 이동권연대는 지난 8월12일 서울시의 책임인정과 공개사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를 점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장애인 이동권연대는 단식투쟁을 벌이면서 매일같이 서울 시청 지하철역에서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았고, 온라인 시위, 서울시 분회회장 진입 기습 시위 등을 벌였다. 5개 인권단체들도 지난달 20일 단식농성을 지지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동조단식에 들어갔다.

농성이 계속 되자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장애인 여러분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장애인전용콜택시 도입 등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아 되레 거센 반발을 샀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9월말까지 저상버스 도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권연대는 비록 서울시장이 공개사과는 하지 않았지만, 서울시의 이같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단식농성 39일째인 지난 19일 이동권연대는 △발산역 사고 책임과 관련, 서울시에 대한 법적 투쟁으로의 전환 △서울시가 밝힌 '저상버스 도입 및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대책 현실화를 위한 투쟁을 천명하면서 농성을 풀었다.

장애인 이동권연대는 오는 27일(금) 오후 7시 서울 혜화동 대학로에서 단식투쟁을 마무리하는 문화제를 열고 향후 입법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4일 민주당 설송웅 의원이 산업자원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9일 이전 설치된 서울시내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 587대 중 현재까지 법정 완성검사를 신청한 경우는 51대에 불과한 것을 밝혀졌다. 그나마 완성검사를 통과한 휠체어 리프트는 51대 중 23대에 불과했고 4대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24대는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설 의원은 '완성검사를 제때 실시했다라도 오이도역과 발산역의 장애인 리프트 사망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신]

### 대입전형시 나이차별 탈락자, '합격' 결정

#### 국가인권위 구제권고에 따라, 대구가톨릭대 합격 결정

국가인권위가 내린 차별행위와 관련해 내린 권고조치를 첫 이행한 사례가 나왔다.

지난 6월17일 국가인권위는 정진무씨(25세, 대전광역시)가 대구가톨릭대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연장자라는 이유로 불합격됐으며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이는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관련 대학에 시정·개선타를 권고했다. (다산인권 73호 참조)

이에 대구가톨릭대학은 24일 국가인권위의 권고조치를 받아들여 정씨를 합격 처리하기로 했다며 국가인권위에 통보한 것이다.

대구가톨릭대학은 "정진무 학생을 국가인권위의 구제권고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의 모집인원 이월승인 신청을 받아 합격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씨는 2002년 3월1일부터 입학처리하되, 내년 2월28일까지 휴학처리하고 3월부터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정씨는 2002년도 대구가톨릭대의 예과 수능영역별 우수자 특별전형 입학시험에 응시했으나 동점자의 경우 수능종합등급과 연소자순으로 합격처리한다는 학교 규칙에 따라 불합격되자, 지난 2월20일 나이를 이유로 차별받았다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대신]

### 국정감사를 통해 본 인권

- "긴급체포자 28.6% 석방, 긴급체포 남용" : 서울지검은 2000년부터 지난 7월까지 6만3천256명을 긴급체포해 이중 28.6%인 1만8천115명을 석방. 또 서울지검은 2000년 긴급체포자 2만829명 중 5천162명을, 2001년 2만7천851명 중 8천671명을 2002년도 1만4천576명을 긴급체포해 4천282명을 석방.

- "계좌추적영장 청구 급증, 발부율 99%" : 서울, 인천지법 등 4개 법원의 올 1~7월 검찰이 청구한 2천684건의 계좌추적 영장 중 2천669건(발부율 99.4%), 인천지법은 361건 중 356건(98.6%), 수원지법은 1천196건 중 1천186건(99.2%)을 각각 발부했으며, 춘천지법은 277건의 계좌추적 영장을 모두 발부. 계좌추적영장 발부건수도 98년 1천886건에서 99년 2천172건, 2000년 2천319건, 2001년 4천392건으로 증가, 실제로 서울지검의 계좌추적 영장청구는 98년 1천418건이었으나 올 1~7월에만 2천684건을 청구, 수원지검의 경우 98년 220건에서 올 1~7월 1천96건을 기록. / 감청영장의 경우도 올 1~5월 서울지법에 119건이 청구돼 92.4%인 110건이 발부됐으며, 인천과 수원, 춘천지법은 같은 기간 청구된 감청영장에 대해 모두 100% 발부율을 기록.

- "군사망 15% 제조사 결론달라" : 지난 99년 9월말까지 군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중 민원이 접수된 166건 중 제조사에 들어간 161건 가운데 14.9%인 24건이 최초 발표와 다르게 결론.

- 이주노동자 산업재해자 수 99년 715명→2000년 1197명→2001년 1491명, 사망자 수도 99년 20명, 2000년 39명, 2001년 57명으로 증가(노동부)

- 중기협 산업연수생 관리수익 6년간 565억원(중소기업청)/ 현재가 88년 설립 이후 위험 결정 내린 각 중 법조항 269건 가운데 19.7%인 53건 정도가 개정·폐지되지 않은 채 방치(헌법 재판소)/

-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업재해 비율(0.35%)이 정규직(0.21%)에 비해 훨씬 높아...4월 468개 사업장 안전보건점검 실시 결과(노동부)

# 다산 인권

제88호

2002. 10. 1. (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편집인 : 송원찬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 새만금간척은 미군비행장용 ?

### 새만금간척지 130만평 미군비행장 제공, 시민단체 강력반발

1일 새만금 갯벌을 간척하여 미군기지로 조성한다는 충격적인 언론보도가 나오자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모 중앙지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군산비행장 인근 공여지 26만평을 돌려받는 대신 새만금간척지에 비행안전구역 및 해안포대 부지용으로 1백30만평을 미군측에 제공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전북 군산시 옥서면에 위치한 미군산비행장이 새만금간척지 공사가 끝날 경우 해안으로부터 격리됨에 따라 비행장 주변 공여지 26만평을 돌려받는 대신 전투기 접근을 위해 현 기지에서 바다까지 비행안전구역 및 관리시설 설치용으로 새만금간척지의 만경지구에 속해 있는 1백30만평을 제공키로 한 것이다.

이 토지는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공군기지에 제공될 수밖에 없는 비행안전구역과 이를 위한 8만평의 해안포대 지역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비행안전구역에는 일정높이 이상의 건축물·구조물·식물, 그밖의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어 이 1백30만평에서는 새만금간척사업의 취지인 농업용지 확보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같은 계획을 미국측과 추진하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 관계부처인 외교통상부, 환경부, 농림부, 전라북도와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국방부 관계자는 "간척지 제공문

제는 미군과 합의할 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제공해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다 안보관련 사항인 만큼 제공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국방부의 안이한 현실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만약 이 계획이 사실이라면 정부와 농림부의 그간 새만금 간척지를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지로 사용하겠다는 주장은 한낱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새만금갯벌 간척을 즉각 중단하고

미군기지 제공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용산미군기지 수원이 전 반대 대책위관계자는 "미군 장갑차에 의한 의정부 여중생들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대책조차 내놓지 못한 정부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갯벌을 미국에까지 내주는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현재 국방부는 이번 언론 보도 내용이 오보라고 주장하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고 자료를 받은 국회의원 또한 자료공개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3월29일 체결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의하면 군산미군기지(비행장)의 주변 땅 총 26만평은 2003년까지 반환될 예정이다. [대신]

## 경찰, 개인신상정보 유출 인권침해 심각

### 보건소 건강진단발급대상(보건증) 신상정보 임의대로 복사, 사용

경찰이 기소중지자 일제 검거기간 동안 수배자 검거를 위해 개인 신상정보를 빈번히 유출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개인정보유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수원시 보건소 등에 따르면 경찰은 기소중지자 일제 검거기간 등을 이용,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건강진단 결과 발급대상(보건증)에 기록된 개인 신상정보를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방식으로 발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수원시 팔달구 보건소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수원 중·남부경찰서는 물론 일선 파출소도 협조공문을 보내거나 또는 아예 협조공문도 없이 수시로 찾아와 자료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보건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 유흥업소 종사자는 물론 식당 등 위생업소 종사자 등 약 1천여명의 대상자들이 보건증을 발급받고(2면에서 계속)



##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워크숍'

- 일시 : 2002년 10월 19(토) ~ 20(일)
- 장소 : 양평 소재 숙박시설(미정)
- 대상자 : 중고등학교 교사 및 인권교육에 관심있는 분 30명
- 내용 : 인권의 이해, 인권교육 이론, 인권교육 프로그램 실제 등
- 참가비 : 3만원(숙박, 자료집 포함)
- 문의 : 박진 인권교육 담당자(031-213-2105)

(1면에서 이어짐)있으며 이 보건증의 발급 기록에는 개인인적사항은 물론 성병 등 개인질병사항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대개 경찰은 조회기를 통해 일일이 주민등록증을 입력해 수배자를 확인하거나 또는 복사해가기도 하는데 어느 때는 400~500명의 기록을 일체 복사해 가기도 했다는 것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경찰이 수배자 색출을 위해 보건증이 발급된 개인신상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관행화된 일"이라며 "모든 개인정보 유출을 꺼리면서도 같은 국가기관으로서 경찰의 요청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경찰도 "유형업 종사자에 대한 개인신상정보 요구는 우범자 및 기소중지자들의 대부분이 유형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는 "경찰이 유형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잠정적 범죄자 취급을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산인권센터는 지난 9월30일 경기지방경찰청에 경찰의 개인신상정보유출의 경위와 실태, 대책 마련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10월4일까지 답변을 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그 질의한 답변을 검토해 법적대응 등을 고려하고 있다. [특집]

### 영화패러디포스터 공모전

제7회수원인권영화제조직위는 인권의 눈으로 영화 비틀어보기 포스터 패러디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 기간: 10월1일(화)~11월8일(금)
- ◇ 접수: 우편(당일 소인에 한해 유효), 이메일 또는 직접 접수
- 주소)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6 법전빌딩 313호 다산인권센터
- 연락처) 031-213-2105, humandasan@hanmail.net
- 홈페이지) www.rights.or.kr
- A3용지, B4용지크기, 파일접수 또는 출력 1매씩

### ▷ 우리쌀 지키기 100인 100일 걷기 - 수원도착

10월1일 '우리 쌀 지키기 100인 100일 걷기 운동'의 행렬이 지난 7월 1일 진도를 출발해 전라도, 경상도, 충남, 충북에 이어 경기도 수원에 도착했다.

지난 27일 경기도에서는 여주에 첫발을 내딛는 이 행렬은 이천, 안성, 평택, 화성 매항리를 거쳐 수원농대에 도착한 것이다.

'우리 쌀 지키기 100인 100일 걷기 운동'은 오늘날 위기에 직면한 한국농업을 바로세우기 위해 WTO 쌀개방 반대 식량주권사수와 농업희생을 주창하며 각 지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쌀개방 문제를 전하고 뜻을 하나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난 7월 1일 진도에서 출발해 이날로 90여일째로 접어들고 있다. 90여일동안 1,000여km를 걸어 경기지역에 도착한 40여명의 걷기운동 대원들은 12일까지 강화, 김포 등 경기지역 13개 시·군지역을 걸으며 농업희생을 위한 국민적 여론을 모아낼 예정이며 13일에는 여의도에서 우리쌀지키기 만민공동회를 개최면서 기나긴 여정을 마칠 예정이다.

한편, 경기민중연대는 수원에 도착한 걷기운동 대원들을 맞이하는 경기지역 환영대회를 이날 오후 6시에 수원농대 검도장에서 가졌다. 또 이들은 2일 오전 11시 장안공원에서 WTO반대 식량주권사수 경기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 ▷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지킴이' 발족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연수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지킴이' 발족식을 가졌다.

'인권지킴이'는 앞으로 각 지역마다 이주노동자 상담지원단체 및 공대위 활동단체, 지역주민들로 구성해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사례 고발과 외국인력제도개선을 위한 활동, 외국인노동자와의 문화교류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 공대위는 이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신고전화'(1588-1138)를 개설해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발생시 가장 가까운 지역의 상담소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10개국의 20개 단체와 한국의 166개 외국인 노동자 관련단체들은 14회 부산아시아게임에 맞춰 '아시아 이주노동자 인권평화선언'을 발표하고 "외국인력을 평소에 편법으로 이용하다가 필요성이 떨어지면 강력한 단속과 강제추방을 반복하는 이중적 정책이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 ▷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누출은 프라이버시권 침해

국가인권위는 지난 26일 재정경제부가 개정 추진중인 보험업개정법률(안)이,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가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누출될 소지를 안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아닌 보험업법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들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개정안 제165조의 삭제 권고했다. 보험업법개정법률(안) 제165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게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국가인권위는 현 법률안에서도 금융감독위원회에 효과적인 조사권을 주었음에도 165조에서 다시 광범위한 조사권을 주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다산 인권

제89호

2002. 10. 8. (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다산인권센터 ●편집인: 송원찬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 경찰, 미성년 피의자 가혹수사

###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강력계 반장이 학생을 죽도로 구타

경찰이 장물알선혐의사건을 조사하면서 미성년자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피해자 이모(18·수원시 장안구 연무동)군과 이군의 부모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9시30분 수원남부서 소속 경찰이 폭력사건과 관련해서 조사할 것이 있다며 이군을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해 이군은 남부서에 가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반장이 이군의 양팔을 등뒤로 돌려 수갑을 채운 뒤 죽도와 손, 발 등으로 수습차레에 걸쳐 머리와 얼굴, 옆구리 등을 심하게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의해 가혹행위를 당한 이군은 머리에 흑이 생기고 음식을 삼키기 어려울 정도로 턱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반장은 이군이 혐의내용을 부인하자 심한 욕설을 하며 "지하실에 밧줄을 묶어 물고문을 하겠다"면서 다른 형사에게 "지하실에 물을 채워놓으라"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김반장은 연행소식을 듣고 달려온 이군의 어머니가 면회를 요구하자 허락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원남부경찰서 강력1반 담당행사는 "조사한 적은 있지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노영란 상임활동가는 "가혹수사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반장은 불과 2달전 피의자 구타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에 있다"라며 "이 경우를 보더라도 여전히 경찰의 가혹수사를 통한 수사관행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경찰내부의 미온적이 대처가 또다른 인권침해를 불러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군은 조사받은지 35시간이 지난 3일 밤 11개 풀려났고 장물알선혐의로 불구속 입건조치된 상태다.

한편, 이군과 이군의 부모는 7일 김반

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수원지검에 접수했다. 같은날 다산인권센터도 수원남부서의 미성년 피의자에 대한 가혹수사와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촉구서를 경기지방경찰청장과 수원남부경찰서장에 전달했다. 수원남부서는 현재 자체적인 감찰을 벌이고 있는 중이며 당사자인 김모반장은 8일자로 파출소로 발령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집]

##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개정을 반대한다.

### 각계각층 500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 주장 기자회견 열어

8일 오전 10시30분 참여연대 2층강당에서 '전기통신사업법 53조 개정안 반대와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를 주장하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500인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선언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지난 6월에 헌법재판소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의 단속'조항의 위헌판결은 이 조항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정보통신윤리위원회(2면에서 계속)

## 제7회 수원인권영화제

수원인권영화제가 어느덧 7회를 맞이했습니다. 인간을 위한 영상, 지역에서의 대안문화, 우리시대 '소수자들의 외침'을 향하여 올해도 지역단체들과 힘차게 필름을 돌립니다.

• 일시 : 2002. 11. 15(금)~17일(일)

• 장소 :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은하수홀

### <부대행사> 영화패러디포스터공모전

제7회수원인권영화제조직위는 인권의 눈으로 영화 비틀어보기 포스터 패러디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 기간: 10월1일(화)~11월8일(금)
- ◇ 접수: 우편(당일 소인에 한해 유효), 이메일 또는 직접 접수
- 주소)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6 법전빌딩 313호
- 연락처) 031-213-2105, humandasan@hanmail.net
- 홈페이지) www.rights.or.kr
- 형식) A3용지, B4용지크기, 파일접수 또는 출력 1매씩

(1면에서 이어짐)의 설치자체를 제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터넷 통제권이라는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조항만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라며 정보통신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또 이들은 "정보통신부의 이번 개정은 '불온통신의 단속'을 '불법통신의 금지'로 바꾸고 불법통신의 내용을 나열하는 한편, 불법통신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헌시비가 있었던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 정지, 제한 명령권 절차를 보완해 유지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존속시키기 위함이다"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체를 주장했다.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취지에 맞게 정보통신부의 제재권을 금지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1천만 네티즌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27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불온통신의 단속'을 규정, 정보통신사업법 53조 제1항과 이것에 근거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한 제2항의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이라는 위헌판결을 내렸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판결요지**

▶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행정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이루어지고, ▶정보통신부장관 - 사업자 - 이용자의 삼각 규제 구도가,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과 처벌의 형식적 대상은 전기통신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자는 이용자라는 모순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용자는 제3자로서 행정절차에 참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권리구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형식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제한이지만, 이용자 - 사업자 - 정보통신부장관의 역학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과 처벌을 의식한 사업자에 의해 이용자가 상시적인 자체 검열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다산**



**인권의 인권과 국가보안법은**

**한지붕아래 있을 수 없다.**

이민우 운영위원(수원신문 기자)

부산아시아 게임을 계기로 단일기가 넘실거리고 있다. 그뿐 아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인공기가 게양되기도 했다. 신문과 TV에 세계 여러 나라의 국기와 함께 펄럭이는 인공기가 수없이 나왔다.

1992년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서울에 있는 건국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대동제 행사에 인공기(손으로 조작하게 그린)와 태극기, 단일기가 걸렸다. 당시 언론들은 우리 사회가 곧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그리곤 완전무장한 전투경찰들이 학교에 진입해 대대적으로 진압했다. 당시 언론에선 태극기와 단일기 얘기는 쪽 빼고 대학생들이 인공기만 게양한 것처럼 몰아부쳤다. 마치 대학생들이 이북의 불순한 '지령'이라도 받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로부터 10년. 강산도 바뀐다는 세월이 흘러 한반도 남단 하늘에 인공기가 나부끼고 있다. 또 수많은 인공기를 흔드는 이북 응원단과 남쪽의 응원단과 함께 "우리는 하나다"를 외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는 걸 어려운 말로 격세지감이라고 하던가. 이처럼 놀라운 변화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뒤 남북의 최고지도자가 회담을 가진 뒤에 더 급격하게 일어났다.

남북의 정상이 만나 통일의 방향과 화해를 위해 굳게 약속(6·15남북공동선언)했고, 이로써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의 존립 근거가 없어졌다. 이어 이산가족 상봉이 이어졌고, 금강산 관광, 경의선 철도 연결 등의 사업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분단의 그늘 한쪽에서 아직도 탄압받는 이들이 있다. 최근에도 대학생들이 잇따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경찰에 체포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엔 대학생들이 한총련이란 '이적단체'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란 공안당국의 흑백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 물론 학생들에게 내려지는 재판부의 형량이 줄어든 경향은 있다. 하지만 전국 각지의 대학 총학생회가 모인 한총련이란 단체에 대한 검찰의 이적규정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항일에국인사들을 못살게 탄압했던 대표적인 일제잔재인 치안유지법을 이어받아 냉전체제에 편승해 만든 악법이다.

수구 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큰일 날 것처럼 떠들고 있다. 끊임없이 6·15공동선언과 남북화해의 성과를 훼손하려 획책하는 것이다. 이같은 수구세력 대응은 기본적 인권인 사상·결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유지되던 분단독재의 기득권을 계속 온존시키려는 음모에 다름아니다. 흔히들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고 한다. 여기에 분단 현실을 감안해 덧붙일 말이 있다.

"인권과 국가보안법은 한지붕아래 있을 수 없다."

**▲ 10월부터 '주간 다산인권'의 필진이 새롭게 바뀝니다. 앞으로 2003년 2월 까지 이민우 수원신문기자, 손난주 변호사, 이광영 부산인권센터 사무국장, 강순원 한신대 교수가 돌아가면서 집필해 주시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동안 참여해 주신 필진분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워크숍' 안내**

- 일시 : 2002년 10월 19(토) ~ 20(일)
- 장소 : 양평 소재 숙박시설(미정)
- 대상자 : 중고등학교 교사 및 인권교육에 관심있는 분 30명
- 내용 : 인권의 이해, 인권교육 이론, 인권교육 프로그램 실제 등
- 참가비 : 3만원(숙박, 자료집 포함)
- 문의 : 박진 인권교육 담당자(031-213-2105)

# 다산 인권

제90호

2002. 10. 15. (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편집인 : 송원찬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 의문사특별법 개정, 노숙투쟁

경찰, 한나라당 앞 의문사 유가족 노숙농성자 무차별 연행

의문사 유가족들과 사회단체들은 지난 10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촉구 선포식을 갖고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문사법 개정을 하기로 양당 총무가 합의했으나 조사 권한 강화 없이 단순히 기간 연장만으로 법 개정을 하는 것은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도록 조사 권한이 강화되는 의문사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농성 첫날부터 무차별적으로 농성자들을 연행하고, 천막과 현수막 등 집회물품까지 압수하며 농성을 저지하고 있다.

농성 첫날인 지난 10일 경찰은 오전 11시경 허영춘(고 허원근 아버지) 씨, 신정학(고 신호수 아버지) 씨 등 농성 참가자 30여명을 연행했다가 오후 9시 석방시켰다. 경찰은 이어 밤 9시 30분경 농성자 일부를 연행했으며, 침낭조차 꺼내지 못하게 하는 등 탄압을 일삼고 있다.

농성단들은 "유가족 중에는 나이든 분들도 계신데 경찰이 무턱대고 연행하고, 한 밤 중에 침낭 사용조차 막고 있다"면서 경찰의 폭력을 거세게 비난했다.

경찰은 급기야 농성 4일째인 지난 14일, 농성장에서 캠페인을 하기 위해 현수막을 펼치고 있는 의문사 유가족들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을 또다시 연행했고, 개인 물품까지 모두 압수해갔다.

이처럼 경찰의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인권, 사회단체들은 16일 성

명서를 통해 "과거 국가권력이 자행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는 역사적 책무"라면서 "국회는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충분한 조사기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의문사법을 즉각 개정해야 하

며 또한 현재 경찰의 농성탄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월16일로 활동을 종료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그동안 총 85건의 진정사건을 접수했으며 이 중에서 '취하' 1건, '각하' 2건, '기각' 32건으로 처리했다. 또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불능' 사건이 30건이었으며, 개연성이 높으면서도 진상을 밝혀내지 못한 '인정' 사건이 무려 19건에 달했다. **다산**

## 경찰의 개인정보유출 국가인권위 진정

경찰, 수배자 검거 위해 보건소내 보건증소지자 정보유출 심각

경찰이 기소증지자 및 수배자 검거를 위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일반 시민 및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개인신상 정보를 유출해 내고 있다는 것(다산인권 88호 참조)과 관련해 다산인권센터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한 지방언론 보도로 불거진 이번 사건에 대해 다산인권센터는 지난 9월30일 경기지방경찰청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인권센터는 이 공개질의서를 통해 "경찰의 수사편의적인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사실 확인을 위해 실태조사와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경기청은 지난 2일 답변을 통해 "경찰에서 수배중인 범법자 중 다수의 수배자들이 유흥업소 등을 전전하며 숨어다니고 있어 이들을 검거키 위해 소재를 추적함에 (2면에서 계속)

**< 제 6 회 다산인권포럼 >**

###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 일시 : 2002년 10월 17일(목) 오후 7시
- 장소 : 다산인권센터 회의실(수원지방법원 정문앞)
- 문의 : 031-213-2105 ( 노영란 상임활동가 )

**□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워크숍' 안내 □**

- 일시 : 2002년 10월 19(토) ~ 20(일)
- 장소 : 양평 소재 파라다이스청소년수련관
- 대상자 : 중·고등학교 교사
- 내용 : 인권의 이해, 인권교육 이론, 인권교육 프로그램 실제
- 참가비 : 3만원(숙박, 자료집 포함)
- 문의 : 박진 인권교육 담당자(031-213-2105)

(1면에서 이어짐) 관련 공공기관을 방문, 협조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며 "앞으로 협조공문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업무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들에 대한 교양과 감독은 물론 수집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안유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청 관계자는 전화통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요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과 6항 등에 근거해 적법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인권센터는 15일 국가인권위에 접수시킨 진정서를 통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건강진단 결과 발급대상(일명 보건증)에 기록된 개인들을 잠정적 범죄자로 간주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유출, 사용해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며 "설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공기관의 업무협조 내지 협조공문 등의 절차를 밟았다하더라도 위 법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받기 위한 근거로 오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진정서에서 "범죄혐의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며 범죄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유홍업종사자(일반음식점 종사자 포함)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범죄혐의자를 찾는 것은 명백한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의 개인정보유출을 통한 수사관행이 수원은 물론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진정결과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2항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6항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다산]

### 불처벌 협정 제의한 오만한 미국

#### 미국의 자국민 불처벌 보장 요구에 '국제법 위반' 거센 비판

내년 초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을 앞두고 미국이 최근 반인도적 범죄로 기소되는 미국민에게 불처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나서 국제인권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1일 집단살해, 인류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로 기소되는 미국민에게 불처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이태리, 스페인, 영국 외무장관에게 촉구했다.

앰네스티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미국인에 대한 불처벌을 요구하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13개국(이스라엘, 아프카니스탄 등)이 미국과 이같은 협정을 맺었다고 밝혔다.

한국정부도 지난 8월말경 미국으로부터 불처벌 협정 제안을 받았으나, 아직 로마규정에 비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상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로마

규정 비준과 동시에 제협상 제의가 들어올 것으로 알려졌다.

앰네스티는 "미국과 이같은 협정을 체결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의 심한 압력에 저항할 수 없는 약소국들로 미군철수와 원조 중단 등의 협박에 못 이겨 협정에 서명한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앰네스티는 "미국이 제안한 불처벌 협정 체결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1949년 제네바협정, 집단살해에 관한 국제협약 등의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인류사상 가장 추악한 형태의 범죄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처벌대상에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앰네스티는 지난 9월17일부터 각국 정부가 미국과의 불처벌 협정에 서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국제적인 인터넷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다산] <http://www.amnesty.or.kr/campaign/021004.htm>

### 수원남부서, 가혹수사 관련 경찰 전보조치

지난 2일 10대 미성년자가 수사과정에서 경찰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강력반 형사2명을 검찰에 고소한 사건(다산인권 89호 참조)에 대해 담당형사가 전보조치되고 고소인측이 고소를 취하였다.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서장 조길형)는 지난 9일 절도죄와 관련, 이모(18.고3년)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소된 강력반 김모반장을 교통민원실로 전보조치하고 또다른 형사 2명을 마약반으로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남부서 관계자는 "아직 죄의 유·무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검찰에 고소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강력범을 잡는 등 형사사건을 자유롭게 취급해야 하는 것이 김 반장본인뿐 아니라 조직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보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 반장을 고소한 이군 부모는 "언론을 통해 실상을 알린 것에 만족하며 남부서가 자체적으로 관련자들에게 문책하였다고 판단해서 9일 고소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산인권센터는 여전히 경찰들의 가혹수사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고 수원남부서 서장면담을 요구하며 보다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이군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강력반 사무실에서 장물알선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형사로부터 죽도와 주먹으로 맞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김반장 등 형사2명을 7일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다산]

# 다산 인권

제91호

2002. 10. 22(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다산인권센터 ●편집인: 송원찬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mailto:humandasan@hanmail.net)

## 공무원도 노동자다.

### 공무원노조,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안에 반대해 파업투쟁 불사

정부가 공무원단체와 관련 노조명칭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 노동권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의결한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정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 또한 정부의 입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국회내에서도 이부영 한나라당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어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통과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입법안에 반대하며 ▲전국지부장단 구속결단식(10월 4일) ▲전국지부간부 정부안 입법저지 결의대회(명동성당 10월 17일)를 가진 데 이어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정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본부(본부장 남운수)는 현재 자체 실천단을 구성하여 경기도 지역을 순회하며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정의행위 찬반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천단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은 오히려 없느니만 못하다"라며 "정의행위 찬반투표에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관건이지만 참여자의 절대적인 찬성으로 가결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경기공대위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수원 장안공원에서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각 지회장들이 삭발투쟁을 하며 결의를 모아낼 예정이다. 또 시민사회단체

들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교수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경기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11월1일 경기지역 1천인선언자를 조직해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을 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유홍업소 종사 외국인여성 인권침해 심각

### 업주와 공연기획사들 임금체불, 윤락강요 등 대책마련 시급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16일부터 10월19일까지 유홍업소 종사 외국인 여성 인권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총 9건 39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도내 200여개의 외국인 전용업소 및 일반 유홍업소에 1천280여명(러시아 702명, 필리핀 500명, 기타 78명)의 외국인 여성이 종사하고

한편, 정부안인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공무원단체는 2006년 1월에 도입되며 명칭은 '공무원조합'으로 하고, 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은 불허용, 교섭권 외부단체 위임·연계 금지,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는 무급휴직, 복수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다른 공무원단체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노조 활동을 심대하게 제약하고 있다. [다산]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들은 임금체불, 윤락강요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시달려 왔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전용 유홍업소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은 대부분 예술홍행(E-6)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나, 업주 및 공연기획사에서 여권을 압수, 일괄보관하여 출국하지 못하도록 협(2면에서 계속)

### '편견에 중독된 세상에서 탈출하라! 차별과 소외에 관한 기록'

## 제7회 수원인권영화제

• 일시 : 2002. 11. 15(금)~17일(일)

• 장소 :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은하수홀

### <부대행사> 영화패러디포스터공모전

제7회수원인권영화제조직위는 인권의 눈으로 영화 비틀어보기 포스터 패러디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기간: 10월1일(화)~11월8일(금)

◇ 접수: 우편(당일 소인에 한해 유효), 이메일 또는 직접 접수

- 주소)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6 법전빌딩 313호

- 연락처) 031-213-2105, [humandasan@hanmail.net](mailto:humandasan@hanmail.net)

- 홈페이지) [www.rights.or.kr](http://www.rights.or.kr)

- 형식) 1부 제출(형식은 자유), 영화제 동안 전시



(1면에서 이어짐)박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외국인 여성의 인권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도내 전 경찰서에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외국인 여성 고용업소 전담팀을 통해 매주 1회 이상 상담 및 피해사례를 수집,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 등 철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도 22일 대책모임을 갖고 외국 여성을 고용한 업주들이 여권 등 신분증을 일괄 보관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감금 및 성매매를 강요당한 외국 여성들의 체불임금 해결 및 민형사 소송 등 피해구제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체류 상태라도 필요한 경우 출국유예 조치를 허용키로 하는 등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대책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업주와 공연기획사들에 의한 인권침해가 유흥업소 외국인여성의에도 예술공연단체에 가해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아프리카 예술공연단에 대한 임금체불 및 강제노동 의혹과 관련, 초청 기획사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로써 외국인들이 기획사를 통한 계약을 맺은 뒤 임금을 체불하거나 공연 외에도 각종 강제노역은 물론 성매매 행위의 강요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당국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할 실정이다. [1면]

### 국가인권위, 경찰 알몸

### 신체검사 요건강화 권고

국가인권위는 경찰의 관행적 알몸신체검사가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청장에게 '유치장 입감시 정밀신체검사 요건 강화' 등이 포함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지난 4월 2일 집회참석 도중 체포된 한국시그네틱스 노조원 7명이 구로경찰서에 연행된 뒤, 가운도 입지 않은 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알몸신체검사(과잉입감신체검사)

### <기고> 정신장애인들을 인권의 중심에 두고...

1975년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지만 지금도 그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영화가 있다. 빠꾸기 등지 위로 날아간 새(One flew over the Cuckoo's Nest)가 바로 그 영화이다. 이 영화는 정신장애인의 치료현장에서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여러 문제점을 시사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정신장애인의 인권 무시이다.

가령, 클래식 음악이 정신장애인에게 좋다는 판단을 환자들에게 강요하거나 마음대로 집단상담을 하면서 자신이 드러내기 싫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장면들이다. 과연 정신장애인은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인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파스칼은 "광세"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은 없다'라는 명제를 남겼는데 미국 법원의 판례 몇 가지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20세기 들어 이 같은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도움을 준 세 가지 미국 정신의학계의 사례로는 첫째 치료받을 권리(right to treatment)를 인정한 Wyatt v. Stickney 사례, 둘째는 자유로움에 대한 권리(right to liberty)로 Donaldson v. O'Connor 사례, 셋째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right to refuse treatment)를 인정한 Rogers v. Okin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정신장애인은 장기 수용화만으로도 자기 존중감이 소홀히 될 수 있고 의존성, 절망감 등은 치료의 목적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수용을 조장하는 환경에 쉽게 노출이 되면 이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크게 정신보건체계내의 활동과 정신보건체계 외부에 대한 활동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는 4가지 기본적인 접근방법을 취한다.

첫째는 judicial advocacy로 법정에서의 실질적인 사례 판독을 하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right protection advocacy로 정신보건체계내에서 법령의 제정 등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며 셋째로는 service advocacy로 지역사회내에서 정신장애인들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system advocacy로 사회변화와 더불어 정신보건 등의 체제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옹호 그룹을 말한다. 이들 4가지 방향은 흔히 중첩되며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다. 어떠한 방향으로 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활동이 진행되는 정신보건 전문가들은 지역사회와 연관을 가지며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을 중심에 두고 활동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영문(아주대학교 정신과 교수, 수원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를 당했다며 당시 신체검사를 담당했거나 지휘계통에 있었던 5명의 경찰을 상대로 진정한 결과로 비롯되었다.

국가인권위는 이 진정사건의 조사결과 피진정인 박모 경장이 상황실장이 입감지휘서를 통해 간이신체검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진정인들이 잠바끈 제거를 거부하자 자해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의적으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했으며, 특히 생리중인 여성 노조원까지 같은 방법을 동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는 '피의자유치 및호송규칙' 제8조에서 유치인에 대한 인

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밀신체검사 시에는 가운을 입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구로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관련 교육조차 받지 않았다고 관련 경찰관 모두에게 국가인권위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의 수강을 권고했다.

한편, 지난 2000년 3월엔 성남 남부경찰서에서 여성노조원을 알몸으로 검사했고, 2000년 10월에는 보건의료노조 대표에 대한 알몸신체검사가 여론화된 적이 있으며 지난해 10월 26일 대법원에서는 위법 판결을 내린 사실이 있다. [1면]

# 다산 인권

제92호

2002. 10. 29(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다산인권센터 • 편집인: 송원찬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 검찰, 성폭행 교사 무혐의 처분

### 여성시민단체 강력반발 - 여학생의 무고죄도 무혐의 처분

지난 24일 수원지검(담당검사 이주형)은 H고교 교사에 의한 여학생 성폭행사건에 대해 교사와 여학생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에 따르면 "J양이 두명의 교사로부터 강간당하거나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거듭 진술을 반복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고, 성폭행을 입증할 만한 특별한 증거가 없어 두 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두 교사가 J양에 대해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 것과 관련해서 "J양이 이번 사건의 확대를 바라지 않았으나 아버지와 주위 사람들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달리 고소한 것으로 J양 부녀에게 특별한 범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J양의 아버지는 검찰의 이번 처분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즉, 중3때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일일이 기억할 수 없거나 더구나 당시 성폭행 당했던 충격과 조사과정의 불안감으로 인해 진술의 번복은 있을 수 있는데 검찰이 확대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성시민단체들도 검찰의 이번 처분은 H고 성폭행 사건에 대한 실제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채 검찰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전형적인 사건이라며 비난했다. 따라서 앞으로 J양과 아버지의 의견과 이번 사건에 함께 대응했던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과 대응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이번 사건의 처분과 대

응에 관계없이 J양이 안정적으로 가정과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법적 절차는 이번 검찰처분에 불복하면 30일내에 항고하면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이번 사건이 다루어질 것이다.

## 국가인권위, 국회의장에게 의문사범 개정권고

### 의문사 유가족들, 20일째 한나라당사 앞 노숙농성 계속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9일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에게 지난달 16일 활동이 종료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강제력이 있는 조사권을 부여하고,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조사 활동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권고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말경부터 2002년 5월까지 5회에 걸쳐 H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펜싱선수 J양이 H고등학교 교사와 경기도 펜싱협회 관계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이다.

하지만 검찰이 한달동안 수사를 하지 않고 누장수사가 이루어지자 여성시민단체들이 신속한 수사와 가해교사의 엄정 처벌을 촉구하며 수원지검 앞에서 1인 릴레이시위와 매주 수요집회를 석달동안 진행했다. [1면]

국가인권위는 "의문사 사건은 공권력이 죽음의 과정에 개입했거나 그 진상을 조직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위한 증거수집에 필수적인 강제조사권한을 의문사위에 부여해야 한다"며 권고이유를 밝혔다.

또 국가인권위는 9월16일로 조사기한을 규정한 의문사특별법 (2면에서 계속)

### '편견에 중독된 세상에서 탈출하라! 차별과 소외에 관한 기록'

## 제7회 수원인권영화제

• 일시 : 2002. 11. 15(금)~17일(일)

• 장소 :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은하수홀

### <부대행사> 영화패러디포스터공모전

제7회수원인권영화제조직위는 인권의 눈으로 영화 비틀어보기 포스터 패러디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기간: 10월1일(화)~11월8일(금)

◇ 접수: 우편(당일 소인에 한해 유효), 이메일 또는 직접 접수

- 주소)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6 법전빌딩 313호

- 연락처) 031-213-2105, humandasan@hanmail.net

- 홈페이지) www.rights.or.kr

- 형식) 1부 제출(형식은 자유), 영화제 동안 전시

(1면에서 이어짐) 제23조의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했고 그 권고결정은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을 이룩한다는 의문사위원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번 국가인권위 권고는 의문사 한 허원근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62)씨가 지난 달 16일로 의문사위 활동시한이 끝난 것과 관련,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기간연장과 조사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문사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며 국회를 상대로 10월17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해 서 비롯됐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는 정권의 창출이나 유지를 위해서라면 국민의 인권과 생명까지도 경시했던 과거 권위주의 통치역사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재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0일부터 20일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숙농성을 벌이며 조사권 강화와 의문사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와 한나라당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10월28일부터 11월1일까지는 매일 오전 9시부터 11시 50분까지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또 각 단체들에게 신문광고를 조직해 이번 의문사특별법 개정을 위한 여론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의문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준)는 30일 오전 10시에 노숙농성장에서 의문사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의문사특별법 개정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신]

인권센터의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회비 월 5천원 이상, 연 3만원 이상 / 가입은 홈페이지 www.rights.or.kr에서 / 조호은행 : 501-04-877047 / 다산인권농협 : 116-12-264081 / 노영란

인권침해신고(031-211-5855)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조례 만든다.

서울 성동구에 이어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두번째 조례 제정

수원시가 서울 성동구에 이어 전국 자치단체에서 두 번째로 외국인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시의회 재정보사위원회는 지난 22일 수원시가 제출한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아래 조례안)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11월4일 수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아래 쉼터)의 기능에 대해 "만남의 장소 제공 등을 통해 애로사항과 법률상담, 문화활동 등 기타 권익보호와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안 제3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쉼터를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 노동단체, 종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며, 시장은 쉼터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쉼터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제조업체 등에 취업해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근무여건 및 환

경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인도적 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2년여동안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수원시가 쉼터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제정 및 지원등을 하겠다는 것은 환영한다"라며 "하지만 조례제정과정에서 기존의 쉼터 운영자들과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할텐데도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돼 의아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수원시는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권선구 고등동의 36평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쉼터를 내년에 150여평으로 확대하고 일정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원시와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수원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경찰청 추정치)는 2만여명이며 휴일에는 유동 외국인이 4~5만여명에 이르는 등 외국인노동자의 증가추세에 있으며 각종 인권 및 노동상담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대신]

서울지방변호사회, 교도소등 구금시설 실태조사 발표

서울지방변호사회(아래 서울변회, 회장 박재승)가 28일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교도소 앞 출소자 대상 설문조사와 서울 인근의 영등포, 안양, 의정부 교도소와 서울, 영등포, 성동 구치소를 대상으로 구금시설 방문조사를 한 실태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영등포구치소는 1천780명 정원에 2천488명이 수용돼 초과수용률이 40%에 달했고, 적정 수용인원이 3천200명인 서울구치소도 5백명(15.6%)이 초과된 3천700명을 수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교도소와 성동구치소는 각각 1천400명 정원에 1천631명(16.5%초과)과 1천930명 정원에 2천93명(8.4% 초과)을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안양교도소에서는 독거 수용을 위해 고의로 징벌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정부교도소는 의사 1명이 매일 300명의 환자를 진료중이며, 성동구치소도 의사 1인당 하루 진료인원이 120명, 투약인원은 400~500명선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변회는 이번 발표에서 "교정당국이 재소자 인권보호를 위해 교정예규 등을 공개해 수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와 별도로 민변, 인의협도 구금시설의 의료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어 구금시설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

다산 인권

제93호

2002. 11. 5(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다산인권센터 • 편집인: 송원찬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인권은 검찰앞에서 멈춰선다?”

검찰의 수사관행 바꾸는 근본적 개선대책이 마련해야

서울지검의 수사관에 의해 피의자가 고문 살해되는 검찰의 반인권적 상황이 발생하자 인권관련 단체들은 저마다 한목소리로 이번 사태의 개선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4일 '피의자 사망' 사건과 관련, "자백위주의 수사 관행을 증거위주의 수사로 바꾸기 위한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사중고문행위는 근본적으로 국내 수사기관의 자백위주 수사관행에서 비롯된 만큼 수사방식을 증거확보 위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이번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변은 "밤샘수사는 그 자체로 잠을 안 자는 고문수사에 다름 아니므로 이번 기회에 이 관행 역시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없다면 국민은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을 내고 "야간·밀실 수사의 관행을 지양하고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했다면 이런 일은 예방됐을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방식과 수사관행을 전면적으로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은 자백강요와 밤샘수사 등 구태의연한 수사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 조력 등 인권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사회연대'도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가 더이상 용인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지난 1일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다른 피의자들을 조사하여 가혹수사혐의가 있는 진단결과를 발표했다. 또 다른 피의자 최모씨의 가족도 지난 4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접수시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신]

제7회 수원인권영화제(www.rights.or.kr)

- 일정 : 11월 15일(금) -17(일) 오전11시 ~ 오후10시

- 장소 :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은하수홀(문의 : 031-213-2105)

Table with 4 columns: 날짜 (Date), 시작 (Start), 종료 (End), 상영작품 (Screening Title). It lists the schedule for the 7th Suwon Human Rights Film Festival from Nov 15 to 17.

\* 상영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검찰 성폭행교사 무혐의 처분에 피해가족 항고의사, 여성단체 규탄집회 열어

<속보> 수원 H고 펜싱선수 J양 성폭행 맞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 J양의 부모측은 항고를 결심하고 시민단체들은 규탄집회를 열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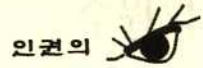
J양의 아버지는 "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교사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성폭행 당한 딸의 정서가 불안한 점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변호사와 협의해 조만간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J양의 무혐의를 주장하며 매주 수요일 집회와 1인시위를 벌여 온 수원여성회 등 시민단체는 5일 12시 수원지검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60여명이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검찰의 가해교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은 실제적 진실을 밝혀 내지 못한 채 검찰수사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피해가족들이 항고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법적 대응에 맞춰 또다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다각도의 활동을 벌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J양이 지난 5월 운동부 숙소 등에서 체육교사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하고 교사도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무고로 맞고소해서 비롯됐다. **다산**

#### 청소년모의법정 공모당선작

- 대상 : 없음
- 최우수상 2편(인권영화제 공연예정)
- 김정화 (태장고) - "거울속의 나"
- 전진철 (수원고) - "야간자물학습"
- 장려상 2편
- 박은별(원곡고)"버스는 시민의 발?"
- 김아라 (태장고) "씻지 못할 상처"



### 피의자와 인권

부산인권센터 사무처장 이광영

한국사회는 헌법학적으로 보면 국민의 기본권이 상당한 수준까지 보장되어 있는 나라이다. 즉 모든 일들이 헌법대로만 할 것 같으면 사회적 갈등이나 대립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위법이 아무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할 한 위법이 그렇지 못하면 국민들의 기본권은 하위 법에 의해 제약되고 통제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사안에 따라서 판결을 불복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하는 일이 다반사다. 헌법재판소가 오죽했으면 위헌신청을 제한하려고 까지 했겠는가.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한국사회는 법 적용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최근에 벌어진 형사피의자 사망사건의 문제가 단적인 예이다. 혐의자에 대해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고문을 가하다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기소권을 쥐고 있는 검찰 내에서 피의자를 조사하다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가혹행위를 가했던 것이다. 이처럼 허위자백의 강요는 결국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없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가해지는 수사관행이다. 통상 피의자는 가혹행위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한 후 법정에서 그 사실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다.

형사소송법상 유죄 판결이 있기 전에는 그 누구든 무죄 추정을 받는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경찰서에 들어서는 순간 죄인이 되어 유죄로 단정된 상태에서 경찰수사를 받기 시작한다. 이 상황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찾기는 쉽지 않다. 혹자들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는 여전하다. 경찰서에 들어 가본 사람 치고 변했다는 사람의 말을 듣기가 힘들다. 검찰청은 더욱 심하다. 검찰청 수사관들은 경찰신분하고는 다르다는 스스로의 자부심(?)에 빠져 수사태도도 권위적이고 고압적이다. 이번 피의자 사망사건의 경우 가혹행위를 당해 절명직전에 놓인 상황에서도 주임검사가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가혹행위를 지시하지는 않았겠지만은 방조 내지 묵인했을 개연성은 다분하다. 검찰수사를 받은 본인의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검찰 수사는 주임검사가 지켜보는 속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따라서 검찰 내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가혹행위나 인권유린을 당할 때 검사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한가지이다. 검찰만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 피의자는 경찰에서 1차 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송치된다. 송치되면 검사는 기소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데 대부분은 기소를 한다. 그런데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공소유지가 필요한데 모든 사건들이 증거가 충분하지는 않다. 그렇다 보니 형소법상 정해진 기간안에 기소를 하다보니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의 경우, 완벽한 기소를 위해서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경우의 자백은 강요가 많다. 그리고 시간에 쫓기다 보면 이번 사건처럼 가혹행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때문에 이러한 관행이 사라지기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검사에게만 주어져 있는 기소권에 관한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찰들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이 주어져야 한다. 모든 사안에 대해 일일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즉 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검찰의 지휘를 받을 때 검찰이 재조사 지휘가 내려오면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재조사를 하게되고 그 과정에 경찰의 태도는 피의자 인권보다는 검찰의 지휘에 맞는 조사 결과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라도 기존의 수사관행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올 2월의 경우도 부산지검 박모 검사실은 무고한 시민을 불법 강제 연행하여 조사를 벌이다 혐의를 찾지 못하자 하루 지나 무혐의로 풀어준 경우가 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모씨에게 말하기를 '밖에 나가서 검찰에서 있었던 사실을 절대 발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다산 인권

제94호

2002. 11. 12(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편집인 : 송원찬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 편견에 중독된 세상에서 탈출하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11월

15일부터 3일간 제7회 수원인권영화제 열려

<상영시간표>

인간을 위한 영상, 제7회 수원인권영화제가 오는 15일(금)부터 17일(일)까지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은하수홀에서 열린다.

모든 영화는 무료 상영이며, 수원 22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필름을 돌린다.

올해 인권영화제 주제는 소수자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소수자들의 이슈가 거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장애이동권 보장을 하며 단식투쟁을 한 장애인우들, 현대판 노예제 폐지를 위해 거리로 나온 외국인노동자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 등.

제7회수원인권영화제조직위(상임대표. 전영을 수원경찰서 공동대표)는 제도화된 편견이 빚어내는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소외를 주제로 하여 올해 슬로건을 "편견에 중독된 세상에서 탈출하라-차별과 소외에 관한 기록"으로 정했다.

올해 상영되는 작품은 모두 22편. 개막작은 장애인이동권을 다룬 박종필 감독의 '버스를 타자'(15일 오후 8시35분)이며, 폐막작은 비닐의 유해성을 다룬 다니엘 골드, 주디스 헬펀드 감독의 환경다큐멘터리 '푸른색 비닐'(17일 오후 7시20분).

상영작은 크게 여섯 개의 부문으로 구분된다.

첫째, 소수자들의 인권으로 '차별과 소외에 관한 기록'이다. 여기에는 모두 9편이 상영된다. ▲버스를 타자(박종필/장애인이동권) ▲그들만의 월드컵(최진성) ▲상암동 월드컵-사람은 철거되지 않는다

날짜	시작	종영	상영작품
15일(금)	3:00	4:00	그들만의 월드컵 (60m)
	4:05	4:25	가출한 헨젤과 그레텔 (20m)
	4:27	4:40	망중한 몽중인 (17m)
	4:44	4:50	Mouse without tail (5m30")
	5:05	6:07	상암동 월드컵-사람은 철거되지 않는다 (47m)
	6:10	7:30	먼지, 사복을 묻다 (80m)
	7:30	7:50	감독과의 대화-이미영감독 (20m)
	8:00	8:20	개막연극공연 (20m)
	8:25	8:35	개막식 (10m)
16일(토)	8:35	9:30	개막작-버스를 타자 (52m)
	9:30	10:10	감독과의 대화-박종필 (20m)
	1:00	1:20	가출한 헨젤과 그레텔 (20m)
	1:25	2:05	중국탈북자식량난민인권보고서 (40m)
	2:10	2:47	어머니, 미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40m)
	3:00	3:37	그리고, 나락 (37m)
	3:40	4:10	감독과의 대화-박성배 (25m)
	4:25	5:08	굳센 뿌리 (43m)
	5:10	5:35	또하나의 국경 (25m)
17일(일)	5:35	5:40	Show (5m)
	5:40	5:50	이상한 나라 (8m)
	6:00	7:10	철로 위의 사람들 (80m)
	7:20	9:50	전쟁과 평화 (150m)
	11:00	12:24	SOS테헤란 (84m)
	12:35	1:54	작별 (79m)
	2:10	3:20	어부로 살고 싶다 (70m)
	3:20	4:00	감독과의 대화-이강길 (40m)
	4:10	4:36	폐허 숲을 쉬다 (26m)
17일(일)	4:40	4:47	The news (7m)
	4:50	5:05	Mouse without tail (15m)
	5:15	6:15	그들만의 월드컵 (60m)
	6:25	6:57	동행 (32m)
	7:15	7:30	폐막식 및 영화페스티벌공모전 (15m)
	7:40	9:20	폐막작-푸른색 비닐 (97m)

박홍렬, 손영성/철거민) ▲그리고, 나라 (박성배감독/농민문제) ▲또 하나의 국경 (스페인, 요아킴 마르테네, 파블로 툴리안/이주동자) ▲군센 뿌리(브라질, 마리아 루이사 멘도사, 알라인 사사하라/도시빈민) ▲동행(김미례감독/비정규직여성노동자) ▲중국탈북식량난민인권보고서 (좋은벗/탈북자) ▲SOS테헤란(프랑스,이란 여성들).

'그들만의 월드컵'은 지난 6월 열린 월드컵을 다룬 다큐멘터리로, 특히 월드컵의 화려한 이면 뒤에 있는 부조리한 현실에 영감을 맞췄다. 특히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월드컵기간 동안 '아동노동철폐' 캠페인을 벌였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SOS테헤란'은 보기 드문 이란영화로, 이란 혁명 이후 변화되고 있는 이란 사회, 특히 여성들의 변화를 밀도 있게 그려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둘째, 노동-민주주의 섹션으로 '짓밟힌 권리, 지켜야 할 민주주의'란 부제를 달았다. 여기에서는 ▲먼지, 사복을 묻다 (이미영) ▲철로 위의 사람들(노동자뉴스 제작단) 두 편이 상영된다.

'먼지, 사복을 묻다'는 80년 강원도 탄광촌인 사복에서 광산노동자들이 어용노조에 맞서 3일간 사복읍을 점거했던 '사복항쟁'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20년이 지난 지금 항쟁의 주인공들의 삶을 접할 수 있다.

'철로 위의 사람들'은 근 50여 년만에 처음으로 철도어용노조를 무너뜨리고 민주노조를 건설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

셋째, 환경섹션으로 '자본에 갇힌 생명'이다. 여기에서는 모두 4편이 선보인다.

'푸른색 비닐'(다니엘 골드, 주디스 헬렌드/미국) ▲어부로 살고 싶다(이강길/새만금) ▲작별(황윤/동물권) ▲폐허 숲을 쉬다(이승준/생태)

넷째, 전쟁과 평화로 '전쟁의 본질, 그리고 위협받는 평화' 섹션이다. ▲'전쟁과 평화'(아난드 팻와르드한, 인도/핵문제)

▲어머니, 미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의정부여중생사건) 등 두 편이다. '전쟁과 평화'는 인도 작품으로 '누구를 위한 핵인가?'라는 주제로 핵 민족주의를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는 수작 다큐멘터리이다. 상영시간은 2시간 30분.

다섯째, 청소년섹션으로 '십대야, 행복하니?'로 부제를 달았다.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두 편이 상영된다. '가출한 헨델과 그레텔'은 가출청소년들의 관한 다큐이며, '망중한 몽중인'은 입시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극영화로 제작한 작품이다.

여섯째, '재밌는 그림일기'란 타이틀을 단 애니메이션섹션이다. 모두 4편이 선보인다. ▲Mouse without tail(박원철) ▲Show(전영찬) ▲이상한 나라(한병아) ▲The news(김미라, 유목인).

결들인 행사

이번 인권영화제에서는 영화 상영 이외에 다양한 결들인 행사들이 펼쳐진다.

우선, 인권의 눈으로 영화 비틀어보기 '영화포스터페러디'공모 및 전시를 들 수 있다. 올해 처음 공모되는 이 전시는 단순한 인권영화를 감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직접 기성영화의 포스터를 인권의 관점으로, 또는 현실 풍자적인 내용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공모된 작품은 영화제 기간 동안 전시되며, 17일 폐막식에서 시상식을 한다.

또 다른 행사로는 외국인노동자와 여성노동자 사진전이 열리며, 서명운동이 함께 진행된다. 이밖에도 하루감옥체험이 상영관 앞에서 진행된다.

특히 올해 인권영화제 개막공연으로 '2002 청소년 모의법정 대본 공모' 최우수 수상작인 '야간자율학습'(전재철,수원고 1년)이 연극으로 공연된다. 공연은 수원고등학교 연극반에서 맡아 한다.(15일 오후 8시)

인권영화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rights.or.kr)나 다산인권센터로 문의하면 된다.(031-23-2105) [다산]

수원남부서, 사회단체 간부 주민등록등본교부 말썽

지난 5일 수원남부경찰서 경찰관이 수원시 고등동사무소를 방문, 수원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채희병씨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해간 사실이 확인되어, 사회단

체 간부에 대한 사찰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민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채씨는 7일, 해당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무분별한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 항의하며, 주민등록등본을 교부 받은 목적과 경찰관의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동사무소측은 채씨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고 요구했고, 채씨가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자 '주민등록법 시행령 43조에 의거 등본을 교부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43조는 "수사상 긴급히 필요하여 관계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명·성명 및 신청목적 등을 기재한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와 관계공무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가 있으면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한편 김현철 시의원(민주노동당 권선지구당 위원장)은 지난 12일 남부서에서 채씨의 소개파악을 위해서 등본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경찰관의 신원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동사무소측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채씨는 "이것은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자신의 활동에 대한 민간사찰이기 때문에 수원민중연대와 범국민대책위원회 차원에서 항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다산인권센터 노영란 상임활동가는 "경찰이 채씨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주민등록등본을 교부 받아야 하는 긴급할 필요가 있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사회운동 활동가에 대한 부당한 정보 수집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경찰은 채씨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교부 신청서를 공개하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산]

2002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일시: 2002. 11.30 ~ 12. 1
◇조치원청소년유스호스텔

다산인권

제95호

2002. 11. 19(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다산인권센터 ●편집인: 송원찬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공무원노조관련 본격 징계시작

경기도 인사위원회, 18일 수원시청 공무원 해임결정

경기도 인사위는 18일 오후 회의를 열고 지난달 9일 행자부 장관실 점거 이유로 행자부로부터 중징계가 요구된 김중연(행정7급·공무원노조 경기도지역본부 조직국장)씨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이번 중징계 결정은 지난 4~5일 공무원노조의 연가투쟁 등과 관련해 징계가 요구된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징계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사위 관계공무원은 "김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실정법을 위반해 인사위에서 중징계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무원 경기공대위는 "공직 개혁에 앞장선 공무원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며 징계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다"면서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앞으로 김씨는 인사위 결정사항이 소속 자치단체장인 수원시장에게 통보돼 시행되는 즉시 퇴직하게 된다.

지난달 9일 행자부장관실을 점거한 김씨는 서울,인천,경남,부산 등 5개 시도 공무원 5명과 함께 행자부로부터 중징계가 요구돼 인사위원회에 회부됐고 이날 경기도 인사위에 는 도행정부지사와 자치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 전직 공무원과 변호사 등 총 7명중에 5명이 참석해 징계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사위가 열린 경기도청 회의장과 정문앞에서는 100여명의 노조 소속 공무원들과 경기공대위 관계자들이 징계회부에 항의해 집회를 열고 회의장에 진입하는 등 경찰과의 마찰을 빚기도 했다. 또 이날 징계회부와 관련해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논평을 내고 "행자부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는 권리를 제약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도리어 짓밟고 재정권을 자치단체 통제수단으로 삼겠다는 반

인권적이고 반자치적인 행위"라며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행자부의 징계요구에 맞서줄 것을 촉구했다. 같은 사건으로 18일 부산동구청에서 열린 인사위는 부산공무원노조의 반발로 민간출신 인사위원 2명이 퇴장하는 바람에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해 사실상 인사위원회가 무산되었다.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로 규정

광주지법, 한총련 10기 의장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선고

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이적 굴레를 벗지 못한 채 법원에 의해 여전히 이적단체임이 재확인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선재성 부장판사)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주 한총련 의장(25·전남대총학생회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10기 한총련이 강령을 개정하는 등 변화하고 있는 것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전술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있어 법원의 한총련에 대한 현실인식이 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

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민주당 임종석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0명이 탄원서를 냈고 북한 연구자 42명이 의견서를 제출해 전향적 판결을 기대했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이번 재판은 지난 6월부터 변호인측과 검찰, 변호인측과 재판부간에 한총련 합법화 문제를 둘러싸고 법정논쟁을 벌여 그동안 큰 관심을 모아 왔다.

그동안 변호인측은 최근의 남북관계 변화와 한총련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지 않으며 강령을 개정하는 등 변화노력을 들어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2면에서 계속)

"2002 전국인권활동가대회"

- 일정 : 11월 31일(토) ~ 12월 1일(일)
- 장소 : 조치원청소년수련원(연락처 041-862-3332)
- 참가비 : 인권단체활동가 2만원, 일반인 3만원
- 문의 및 참가신청 : 다산인권센터(031-213-2105)

< 감사의 글 >

제7회 수원인권영화제(11월15일~17일)에 참여해 주신 단체, 후원인, 자원활동가 그리고 관객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생생한 인권현장을 담은 필름을 갖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 수원인권영화제 조직위 -

(1면에서 이어짐) 입증하기 위해 주력했다. 한총련도 광주지법에 강령개정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한총련 합법화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한총련합법화 경기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재판을 통해 한총련의 합법화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되리라는 일말의 기대를 재판부가 무참히 짓밟았다"면서 "이번 재판부가 기존의 한총련에 대한 근시안적 시각에서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은 판결을 했다"며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한총련 관계자도 "이번 판결은 어느정도 예상했던 일지만 그래도 실망스럽다"며 "앞으로도 각계각층과 함께 한총련의 합법화 운동에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경기지역 한총련 관련한 구속자로 10여명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중 대부분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이고 경기대학생은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다. [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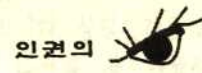
### 국가인권위원회는 비독립기관 ?

최근 청와대가 대통령의 사전 허가 없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 등에게 경고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유감 표명을 한데 이어 인권단체들이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위협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18일 "인권위는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해 수행'하는 기관으로, 청와대가 위반 근거로 내세운 '공무국의외행 규정'도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국외 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인권위원장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행정자치부는 "인권위는 기능과 직무 수행상의 독립성만 부여된 기구로 기관운영과 관련된 인사·조직·예산에 관한 권한이 대통령에게 귀속되었고 소속 직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의 적용을 받으므로 대통령 통할하의 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헌법상 헌법이 직접 설치하고 있는 기관을 제외하고는 입법부, 사법부 또는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완전히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정부기관이 성립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가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



### 사내부부는 명퇴대상?

손난주 변호사(법무법인 다산)

총 762쌍의 사내부부가 있는 농업협동중앙회가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762쌍의 사내부부 중 오직 10쌍을 제외한 752쌍의 한 쪽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 퇴직한 752명 중 688명이 여성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런 명예퇴직이 근로자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사실상의 해고도, 남녀차별도 아니란다. 심지어 지점장이 부부직원을 불러다 놓고 "남편은 휴직명령을 받고 부인은 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되거나, 추후 축협 등과의 통합과정에서 우선적인 정리해고 대상이 되는 등 명예퇴직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이니 지금 명예퇴직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 것이다" 라는 말을 하였다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말이 단순히 "조언"이거나 "권유"일 뿐이라고 한다.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라니,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다.

일반사원들은 남성 12.6%, 여성 38.6%만이 사직서를 냈는데 사내부부는 99.9%가 사직서를 냈다. 1차 명예퇴직 실시결과 회사에서 예상했던 인원(1,360명)보다 많은 인원(3,529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는 사내부부들에게 집요하게 사직 압력을 가하였고, 이들은 2차 명예퇴직 신청 마감일에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도 사내부부들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사직한 것이니 "사실상의 해고"가 아니라 "고용계약의 합의해지"라고 한다.

근로관계의 종료에 이르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사용자측의 일방적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이며 기존 판례의 명백한 태도이다.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근로기준법 상의 엄격한 요건을 준수하여야만 그 적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남녀를 다르게 취급하는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에 있어서 여성근로자가 불평등을 주장하는 때에는 사용자가 스스로 남녀차별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고, 표면상 남녀를 동일하게 대우하나 그 기준이 특정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워 결과적으로 특정성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적 차별 또한 강행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의 금지 대상이다.

농협은 남편에게 휴직명령을 하고 휴직명령 대상자는 추후 우선적인 정리해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생계책임자인 남성의 일자리를 뺏으면서 자신의 자리를 고집할 수 있는 여성은 몇이나 되겠는가. 이것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아닌 명백한 해고다. 농협은 실제 명예퇴직 예상인원보다 많은 인원들이 명예퇴직신청을 하였음에도 신청기한을 추가로 연장하면서까지 사내부부의 사직원을 받아냈고, 그 후 사직원을 낸 여성 근로자들의 66%를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였다. 그 과정 어디에서도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도 발견할 수 없다.

내가 사내부부가 아닌 것을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앞으로 내 후배들, 내 딸들에게 사내부부는 정리해고 1순위 절대 사내부부는 되지 말아라 라고 해야 하나?

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국가기구로서 현 정부가 국가인권위의 독특한 조직위상에 대해 무시하거나 행정부의 영향력 아래 두려하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인권위의 위상과 법적, 제도적, 시스템적 문제들을 다시한번 점검, 평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성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위원장과 최영애 사무

총장등 관계자 4명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인권기구포럼(APF) 제7차 연례회의에 참석하자 청와대가 '공무국의외행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15일 이들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는 이 APF 연례회의에 신규 가입심사를 받기 위해 참석한 것으로 현재 12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 [1면]

# 다산 인권

제96호

2002. 11. 26(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다산인권센터 ●편집인: 송원찬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 미군 무죄평결에 국민분노 확산

여중생범대위, 27일 비상시국회의 갖고 용산 미8군앞 집회 예정

미군 케도차량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기소된 미군 2명에 대한 무죄평결에 항의하며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소파)의 전면적인 재개정을 요구하는 시위와 각계각층의 규탄성명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군장갑차 고 신효순, 신미선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여중생 범대위,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는 27일 오전에 전국의 각계각층의 개인과 단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주한미군의 두 여중생 살인사건 무죄평결 규탄과 여중생 사건 해결을 위한 범국민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중생 범대위는 이 제안문에서 "모든 국민들은 미군당국의 기만적인 무죄 평결을 보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주권은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며 대단히 분노하고 있다"라며 "오만방자한 미군당국의 태도와 예측적인 한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범국민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중생 범대위 관계자는 "각종 집회에 청소년, 일반시민 등 자발적 참가자들이 늘어 국민들의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라며 "이번 비상시국회의를 통해 ▲기만적인 미군 재판 무효화 ▲살인 미군의 한국법정처벌 ▲불평등한 한미 SOFA 전면개정 ▲부시 대통령 공개 사과 등을 요구하며 향후 대중적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국민적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비상시국회의에서는 앞으로 △매일 저녁 6시, 서울을 비롯 전국에서 동시다발 규탄대회 진행(주말엔 3시) △매주 1회 차량 경적 시위 진행 △전국의 사찰과 교회, 성당은 항의 및 규탄 타종 △백악관과 미국방부, 미 대사관, 주한미군 사령부 사이버 시위 △항의

및 규탄집회 참석자 호루라기, 태극기 지참 △소속 단체 실정에 맞게 각계각층 투쟁의 날 조직 △추모리본 착용 등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제안하고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이날 비상시국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미군규탄집회가 오후 3시 용산 미8군사령부 앞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와 녹색연합,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 14개 시민단체 관계자 100여명도

25일 오전에 주한미군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 규탄 및 소파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한 뒤 미대사관쪽으로 행진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성명을 내 "한·미 두 나라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즉시 소파 개정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난 25일 미군부대 대학생 화염병 투척에 이어 26일 대학생 50여명은 경기도 의정부 미군부대 안으로 진입하여 30여분간 '살인미군 한국법정 처벌' 등 구호를 외치다 전원 의정부경찰서로 연행됐다. 같은날 부산에 위치한 미군 하얏리부대 정문앞에서도 대학생 12명이 진입하다 경찰에 연행되는 등 분노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1면]

### <논평> 바로세우자! 국가인권위

지난 11월 25일은 국가인권위의 출범 1주년을 맞는 날이었다. 지난해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국가인권위의 출범을 우리는 기꺼이 반기지 않았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축하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다. 척박한 우리 사회의 인권현실과 각 국가기관의 견제로 인한 어려움속에서도 국가인권위의 1년 활동은 인권이 우리사회에서 주요한 기준임을 보여주었다는 희망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가 애초 잘못 끼워진 단추로 인해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운용이 가능할 것인가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역시나 주위의 성에 차지않는 평가에 우리를 더욱 자책하게 만든다. 더우기 국가인권위 설립에 중대한 역할을 자임했고 현재 국가인권위와 인권단체와의 불편한 관계를 자초한 역할에서 자유롭지 않은 어느 변호사가 내뱉은 실로 충격적인 고백(?)은 우리의 이러한 자책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국가인권위의 권위주의, 관료성, 폐쇄성은 물론 인권단체들의 '밥그릇 쟁기'라는 있을 수 없는 내용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의 설립초기부터 법적, 제도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건설한 기구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지지와 파트너쉽, 그리고 실천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은 간에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오게 됐다. 얼마전 국가인권위에 대한 청와대의 경고로 불거진 독립성 문제도 독립성이 선언 말, 법률로 거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인권단체들도 이제 국가인권위를 뜨뜨미지근한 자세로 방치하거나 방관할 수는 없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그리고 비판을 아주 혹독하게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도 인권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외면과 회의가 지속된다면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의 3년임기를 어느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임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를 바로세우는 일은 여전히 유효하다.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우리들의 지난한 투쟁에 국가인권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 '2002 경기민중대회

### 경기도청 계란시위

11월30일 전국민중대회 개최 예정

경기민중연대(준)와 공직사회 개혁 및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쟁취 경기지역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무원경기공동대위) 소속원 300여명은 23일 오후 수원 장안공원에서 '2002 경기민중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WTO 쌀 수입개방 저지와 경제특구법안 통과반대, 여중생 살인 미군 처벌, 공무원조합법안 인정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집회 참석자들은 경기도청까지 거리행진을 하였고 도청 정문앞에 집결해서 계란 200여개를 던지며 지난 18일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해임된 수원시 공무원 노조원 1명의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그리고 지난 공무원노조 연가투쟁으로 인해 징계회에 회부된 다른 26명의 시·군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해당 시·군이 거부해줄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손학규 경기도지사 퇴진운동 등을 펼치기로 결의하고 해산했다.

한편, 전국민중연대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은 '2002 전국민중대회'를 11월30일 오후 3시에 종묘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WTO 쌀수입 개방 반대, 식량주권수호,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반대 ▲철도 가스 발전 배전 등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해외매각 저지와 공공성 확대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과 합법화, 공무원·교수 노동3권 보장 ▲경제특구법 폐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철폐 ▲중소, 영세, 비정규 노동자 희생 없는 주5일제 쟁취 ▲영세노점상 단속중단! 철거민에 대한 강제 철거 중단! 빈민생존권 보장 ▲WTO 교육개방 반대, 의료 공공성 쟁취! 사회보험 사유화 저지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 이주노동자 추방반대, 연수제 철폐, 노동허가제 실시 ▲국가보안법 폐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적규정 저지, 범민련·한총련 이적규정 철폐 ▲미선이 효순이 압살, 경제침략, 전쟁책동 미국반대, 주한미군 철수 등 총체적으로 집약된 민중 10대 요구사항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신]

### 국가보안법의 죽음을 선포하자!

12월1일 국가보안법 제정 54년을 맞아 국가보안법 장례식 준비

지난 18일 10기 한총련이 또다시 이적단체로 규정되고 최근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회원이 이적단체 혐의로 구속되는 등 국가보안법의 위력이 여전히 현상에서 통일연대 등 사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장례식을 치를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일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장례식준비위원회는 앞으로 ▲11월29일 오전 11시에 '국가보안법 장례식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추진 활동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회견 이후 국가보안법의 사망진단서(법의학적 해설)를 통해 '국가보안법 사망 통보'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11월30일부터는 국가보안법 빈소 및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의 자리를 마련해서 각계각층의 조문객을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본 행사로 국가보안법 제정일인 12월 1일 오후 2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국가보안법 장례식을 진행해 실제 영결식을 마련하고 상여행진을 벌여 국가보안법을 화장할 예정이다. 그리고 ▲12월6일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석방, 김대중 대통령 결단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연대 관계자는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54년이 되는 해를 맞아 각계각층의

원로, 개인, 단체들이 망라한 거국적인 국가보안법 장례식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국가보안법의 죽음을 선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를 기회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의 정책공약에 반영시키고 성탄절을 맞아 인권대통령 김대중 정권 하에서의 마지막으로 전면적인 양심수 석방을 가시화시켜 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에서 집계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10월10일 현재 전국의 구치소, 교도소, 경찰서 유치장 등에 수감되어 있는 양심수는 모두 9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을 신분별로 구별하면 학생 42명, 노동자 36명, 재야 및 기타 17명이다. 또 양심수 95명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숫자는 모두 43명(45.3%)으로 확인됐다.

또 김대중 정부 이후 구속자 현황은 10월 10일 현재 2150명으로 집계됐고 신분별로 학생이 1028명, 노동자 807명, 농어민 29명, 재야 기타 247명, 군경 3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구속자 2150명중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은 1028명(47.8%)으로 과반수에 가까운 숫자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신]

### "2002 전국인권활동가대회"

- 일정 : 11월 30일(토) ~ 12월 1일(일)
- 장소 : 조치원청소년수련원(연락처 041-862-3332)
- 참가대상 : 각 인권단체 상근활동가, 자원활동가, 회원, 임원 등/ 인권에 관심있는 일반인 등
- 참가비 : 인권단체(활동가) 2만원, 일반인 3만원
- 프로그램
  - . 대주제 : 한국 인권운동 10년의 평가와 과제-연대운동을 중심으로
  - . 소주제 : 인권교육의 전략/ 사회권운동의 전략/ 운동사회의 가부장성 문제/ 국가인권위원회 대응/ 수사기관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과거청산 및 민간인학살/ 이주노동자 인권 등
- . 문화행사
- 참가신청 : 참가신청서를 admin@lgbtkorea.org/ Fax 02-744-7916 (한국동성애자연합)
- 문의 :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 다산인권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제97호

2002. 12. 3.(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편집인 : 송원찬

무죄평결 원천무효! 살인미군 처벌! 부시 직접사과! 소파 개정!

## 분노... 분노... 분노

5일 경기도시국기자회견, 수원 매주 목요일 촛불집회 등 도내 항의집회

의정부 여중생 미군장갑차 살인사건의 무죄평결에 대한 분노가 경기지역에서도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경기민중연대 등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정당들은 오는 5일(목) 오전 10시 수원역 광장에서 여중생 미군 장갑차 살인 사건 관련 시국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은 지난 2일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갖고, 시국기자회견을 포함한 경기지역 각 시,군 구의 매일 집회를 결의했다. 이번 시국기자회견을 계기로 모든 지역들은 미군장갑차 사건을 계기로 높아지는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각 거점지역을 통해서 모아낼 것으로 보인다.

수원은 오는 5일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두 여중생을 추모하는 촛불집회를 수원 남문 중앙극장에서 벌이며, 성남, 안양, 안산, 이천, 김포, 부천, 용인, 평택 등의 지역도 자체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의정부에서는 오는 7일(토) '학생교사 행동의 날'을 의정부역 광장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박미진(경기도의회,민주노동당) 의원의 24명의 도의원들이 발의했다가 보류됐던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경기도의회 결의문'이 박의원과 한나라당 의원의 공동 발의로 오는 4일(수) 경기도의회 상임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당시 경기도 의회는 '시일이 지난 사건이다,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중앙정부가 할 일을 지방정부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태도로 상임위에서조차 논의하지 않고 결의문 채택을 보류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박미진 의원은 "경기도에서 발생한 문제를 정치적 논리를 들어 보류시켰다가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의 TV 발언 이후, 갑작스레 태도를 돌변한 것이 안타깝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주말에 서울 시청에서 열렸던 대규모 촛불집회는 이번 주말에도 계속된다. 범대위는 오는 7일(토), 14일(토) 오후 3시 서울 시청역 광장에서 두 여중

생을 추모하고 불평등한 소파 개정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다음 주말인 14일(토)에도 서울 시청에서 10만명 규모의 집회를 조직하고 있다.

한편 3일 오전 김대중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의정부여중생 같은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와 SOFA 개선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는 구체적인 소파 개선방안 및 반미감정 진화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으로는 미군의 중대 범죄사건, 사고 시 우리 수사당국이 초동수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측과 형사공조에 관한 '소파 합동위 합의사항'을 체결하는 것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신]

## 공무원노조 릴레이 단식농성 돌입

부당징계 철회·자치권포기 손학규도지사 퇴진 요구 거세

지난달 18일 경기도가 행자부 장관실 점거를 이유로 행자부로부터 중징계가 요구된 김종연(행정7급, 공무원노조경기도지역본부 조직국장)씨에 대해 해임 결정된 것에 반발하며 공무원노조경기도지역본부는 경기도청에서 릴레이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공무원노조경기본부는 지난달 27일 '부당징계 철회' '자치권을 포기한 손학규 경기도지사 공개 사과' 등을 요구하며 도청 내에서 3인씩 릴레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특히 공무원노조경기본부는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전국 최초로 해임징계를 단

행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자치권을 포기한 행태라고 강력하게 규탄하며 경기도지사의 퇴진운동으로까지 전개하고 있다.

지난 2일 공무원노조경기본부는 경기도지사 퇴진 투쟁 돌입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도지사는 행자부의 불법적인 징계지시에 스스로 굴복하여 공무원노동자의 공직사회 개혁과 노동3권 요구에 앞장서 탄압하고 있다"면서 "경기도의 수장으로서 초법적 자치권을 침해하고 경기도민의 자존심을 말살하는 행자부의 부당 지시를 거부할 것을 강력 요구했음에도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무책임하고 소신 없는 태도로 노조를 (2면에서)

**의정부여중생 추모·불평등소파개정 수원촛불집회**

◇일 시: 12월 5일(목) 오후 6시 ◇장 소: 수원 남문

(1면에 이어) 탄압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의 단식농성이 이어지면서 민주당경기도의회 의원 10명도 지난 2일 '공무원노조 및 노조원 과잉징계에 대한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자부가 요구한 직원을 징계한 것은 실책"이라고 지적하면서 "해임결정은 해당 공무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과잉징계"라면서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근 정승우 수원시부시장이 공무원노조수원시지부 조합원 7명에 대한 징계에 수원시장 대신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무원노조는 오는 5일부터 수원시청 내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한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 수원공대위도 오는 10일 수원시청에서 수원시의 이같은 조치를 규탄하는 항의집회를 갖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27명이 징계위에 회부돼 있다. [1신]

### '노조 인정, 해고자 전원복직'

#### 행운레미콘 노조, 19일간 천막농성 끝에 사측과 합의

19일간 공장 봉쇄, 천막농성 등 파업투쟁을 진행하던 전국건설운송노조 행운레미콘분회가 지난 11월30일 '노조활동 인정, 공정배차 실시, 해고자 전원 복직'등 사측과 합의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행운레미콘은 계약만료를 앞두고 당사자에게 재계약의사를 묻는 관례를 무시한 채 평소 노조활동을 열심히 해 온 박명호 분회장 등 7명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회사 정문에 노조 현판을 달자 증기기로 담장을 헐어버리는 등 노조 탄압을 자행해왔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12일부터 해고자 복직과 노조활동 인정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한편 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노조가 적법한 절차로 파업을 했음에도 지난 15일 "불법파업"이라며 파업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회사측에 보내 논란이 됐다. [1신]

## "인권활동가들 만났다"

### 인권활동가대회 140여명 참석, 다양한 주제 토론...깊이 있는 논의 아쉬움

2002 전국인권활동가대회가 11월30일과 12월1일 이틀동안 조치원청소년수련원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20여 개 인권단체 활동가 140여명이 참여했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대회는 무엇보다 인권활동가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한국의 인권운동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한국의 인권운동 10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란 주제로 시작됐다. 오완호 한국앰네스티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대주제토론에서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국가인권위 공대위를 비롯한 인권단체들간의 굵직한 연대기구를 중심으로 발제를 했으며,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인권단체 포럼 구성에 대한 제안을 했다.

소주제 토론은 국가인권위에 대한 대응, 인권교육의 전략,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회권운동의 전략, 운동사회 내의 가부장성 등 모두 8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다. 참석자들이 특히 관심을 보였던 주제는 '국가인권위에 대한 대응' 과 '인권교육의 전략' 그리고 '운동사회 내의 가부장성'이었다.

'국가인권위 대응'에 대한 토론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조나 활동에 대해 공통으로 합의하는 의견은 없었지만, 현재 인권위가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라는 것에는 모두 공감했다. 이후에 인권단체들은 사안별 인권위에 대응하자는 것에는 동의했으며, 상시적인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도 한차례정도 모임을 갖는 것으로 결정했다. '인권교육' 소주제 토론은 40여명이 참여해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인권교육을 왜 시작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공동의 실천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라는 질문까지 8가지 정도의 자유논의를 했다. 참가자들은 단체별로 경험과 고민을 함께 공유한 후 향후 공동으로 인권교육활동가들간의 네트워크 마련, 공동워크샵 개최 등의 구체적 실천들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조순경교수(이화여대 여성학과)의 주제발제로 시작된 운동사회 내의 가부장성토론은 당초 예상과 달리 30여명의 많은 이들이 참여해 남성중심의 운동사회가 여성활동가들에게 강요하는 부당한 행태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을 가했다.

이밖에도 '사회권'관련 소주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사회권운동은 기본적으로 '반자본'운동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눈에 띄는 참석자들은 LG기업에서 내부고발로 왕따를 당했던 정국정씨와 방글라데시아 준마민족 출신 로넬 차크마니씨 등이었다. 이들 외국참가자들은 탄압을 받고 있는 준마민족의 인권침해상황을 설명하면서 캠페인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소주제 토론에 이은 뒤풀이는 다음날 해뜰 때까지 거나하게 진행됐다. 인권활동가들이 친목을 다지는 자리이자 동시에 서로의 고민과 정보를 나누는 자리였다.

이번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도 폐지' '미국의 불처벌조항에 대한 반대' 등 모두 3개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대회는 많은 아쉬움을 남긴 것이 사실이었다. 인권활동가들이 참여한 대회인 만큼 인권 관련 주제들이 좀더 깊이 있게 논의되고, 인권운동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되었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참가자들 모두 또 다른 자리와 투쟁을 통해서 이번 대회에서 나누지 못했던 인권운동의 과제들을 풀어가는 마음으로, 또 이번 대회가 그런 디딤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년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 다산인권

제98호

2002. 12. 10.(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편집인 : 송원찬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 세계인권선언일, 한결같은 목소리 "구체적 조치로 인권 옹호를"

### 인권활동가들 올해의 인권소식 1위 '여중생 사망사건' 선정

1948년 12월10일,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지 54주년이 되는 날을 맞아 인권단체에서 다양한 행사와 논평들을 발표했다.

▶ **인권운동사랑방**은 한국 인권의 현주소를 점검하기 위한 '올해의 인권 10대 소식'을 9일 발표했다.

올 한해 동안 발생한 58개 국내 인권사건 중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 11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6일간 진행된 설문조사에 의해 선정됐다. 1위는 단연 '주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80.5%)'이 뽑혔고 2위는 국가인권위를 점거한 장애인노동자투쟁(62.7%)이 차지했다. 그 다음은 △의문사위가 밝혀낸 공권력에 의한 죽음의 진실(50%) △여성장애인 최옥란씨의 죽음(49.2%)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으로 인한 피의자 인권보장문제 전면 부각(44.9%) △전쟁반대 신념 등 비종교적 이유로 잇따른 병역거부 선언(42.4%) 순이었다.

이와 함께 △전원추방 방침에 맞선 이주노동자 권리 투쟁(40.7%) △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에 희생된 여성들(35.6%) △공무원 노동자 정부 탄압 속 노동조합 결성(33.9%) △발전노조 민영화 반대 파업에 따른 사측의 보복성 인권유린(30.5%) 등이 10대 뉴스에 포함됐다.

▶ **앰네스티 한국지부**도 9일 차기 대통령이 지켜야 할 인권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대선후보들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지부에서 내놓은 정책은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악법 폐지 △박경순, 김경환 등 양심수 즉각

석방 △낮은 교정시설의 현대화 △사형제도 폐지 △이주노동자 권리신장 △초·중·등 교과과정과 전국의 법 집행 공무원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포함 △국제형사재판소 미국민 기소면책을 위한 불처벌 협정 무조건 거부 △양심적 병역거부권 소수자의 권리문제, 대인지뢰문제를 인권문제로 천명 △국제관계에서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견지해야 한다는 등 모두 9가지를 제시했다.

또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제3회 공무원 인권상' 수상자로 의문사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와 의정부 교도소의 김종수 교위(7급)를 각각 선정했고 '제6회 앰네스티 언론상'에는 외국인노동자시리즈를 제작한 문화방송 민경의, 김시현 기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전북평화인권연대**는 10일 '세계인권선언 54주년에 즈음한 2002년 전북인권현실을 발표했다. 이 논평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 △현행 집시법의 개정 △전주교도소 인권침해 개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반대 △국가인권위 등 인권기구의 개선 △농민 생존권 보장 △교육의 △미국의 패권주의 반대 △여성인권침해 개선 △병역거부자, 외국인노동자 등 소수자 인권보장을 2002년 전북지역의 인권과제내용이라고 밝혔다.

▶ **국가인권위**는 10일 위원장 명의로 성명

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는 정부와 공무원들에게 △각종 국제인권조약에 대해 각 부처가 충실한 실천과 △행정업무 추진과정에 인권인식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또 국가인권위는 앞으로 '인권교육의 제도화', 'SOFA 개정', '차기 행정부의 세계인권선언지지 문서 서명'을 추진하는 등 '선언'에서 이제는 '실천'으로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이날 '국가인권위에 바란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토론회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권, 사회권, 국가인권위의 법적 한계, 인권시민단체와의 관계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하루 앞둔 9일 '2002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었다.

민변의 최병모 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한국의 인권상황은 세계인권선언이 선포한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인권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권상황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본 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사회권', '자유권', '인권관련 정부위원회활동평가 및 국제인권분야'의 3개 세션 10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모두 23명의 전문가, 변호사 및 활동가 등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하여 각 분야에 대한 현재 한국의 인권상황과 지난 1년간의 활 (2면으로)

### 의정부여중생 추모·불평등소파개정 촛불집회

◇ 수원집회 : 12월12일(목) 오후 6시 / 장소 : 수원 남문

◇ 서울집회 : 12월14일(토) 오후 3시 / 장소 : 서울 시청

(1면에 이어)등을 평가하며 이후의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토론을 마친 후 △지속적인 남북 화해교류 추진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및 직권중재조정폐지 △사회적 약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실질적 조치마련 △여성의 참정권확대 및 호주제 폐지 △국가보안법폐지 △형사 절차상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법 배제 입법 마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국가 인권기구에 대한 실질적 권한 보장 등을 담은 10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여, 야 정당은 현재의 한국 인권상황을 직시하고 그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새로 선출될 대통령 당선자는 이러한 요구들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여 한국 인권상황 향상을 위해 진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 '민가협 양심수후회회',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등 전국 589개 통일·시민단체도 10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수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 등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인권대통령을 자임하던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고 대선을 코앞에 둔 지금도 국가보안법이 유지되고 수많은 양심수와 정치수배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이 땅에서 더 이상 양심수와 정치수배자가 생기지 않기를 현 정부와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 부산인권센터도 이날 오후 5시에 부산역광장에서 '세계인권선언 54주년 기념 및 2002년 인권문화제 폐막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 '2002년 부산인권선언'을 발표하고 각종 인권사진 전시 및 인권영화상영이 진행됐다.

▶ 천주교인권위는 11일 오후 7시 '한반도 평화와 우리의 선택'이란 주제로 세계인권선언기념 토론회를 갖는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오는 19일 대선을 앞두고 '인권대통령'의 상을 조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대신]

<논평> 2002 되돌아보는 세계인권선언

신자유주의, 군사 패권주의에 맞서야

오늘은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이다.

인류가 세계대전의 폐허 위에서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고, 다시는 인권침해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날이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이 공포된 지 5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이 선언했던 인권의 가치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참담한 심정으로 되돌아본다.

나아가 신자유주의의 광폭한 공세와 부시정권의 군사적 패권주의 앞에서 세계인권선언이 과연 인권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마저 드는 오늘이다.

우선 한국의 인권상황을 가늠케 하는 대표적인 악법 '국가보안법'의 존재 앞에서는 인권지수를 말하는 것조차 무색해진다.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직전(1948년 12월1일)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반세기가 넘도록 변함없이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지금도 96명(국가보안법 위반 41명, 이 중 한총련 26명)을 감옥에 가두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은 '안전하게 버스를 타고 싶다'면서 목숨 건 단식농성까지 감행했고, 많은 젊은이들은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징집과 징집을 거부'하면서 투옥되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 자행됐던 각종 의문사사건의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였고,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고 외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우리는 인류가 이미 50여 년 전에 설정한 인권의 가이드라인에도 훨씬 못 미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의 거센 물결은 세계인권선언의 낮은 울타리마저 넘어 들어와 우리의 생존권을 일거에 휩쓸어 버렸다.

국가기간산업의 해외매각으로 많은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빼앗겼으며, 여성들은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밀려나 어느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전체 여성노동자의 73.3%에 이르게 되었다. 농민들은 밥 한 그릇을 만드는 데 겨우 250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쌀 시장을 개방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가슴을 쓸어 내리고 있고, 어민들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 버렸다.

자본과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수많은 사람들로 부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마저도 앗아가 버렸다. 또 자본의 공세 뒤에는 군사적 패권주의로 무장한 미국이 오만하게 버티고 서있다. 세계 곳곳에서 무력사용과 전쟁불사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올 한해 인권단체들은 이 모든 것에 맞섰지만 무기력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54주년인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서 희망을 잃고, 그 희망을 키워야 한다.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 않고 '불평등한 소파개정'을 외치면서 연일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의 대열 속에서 희망을 잃어야 한다.

그리고 그 대열과 함께 '인권'의 가치를 높이 들고 '자본을 앞세운 신자유주의'나 '군사적 패권주의'에 전면으로 맞서야 한다. 그것은 바로 세계인권선언의 선언했던 소중한 가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길이고, 세계인권선언이 미처 담지 못했던 가치를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채워나가는 길일 것이다.

다산인권

제99호

2002. 12. 17.(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다산인권센터 ●편집인: 송원찬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경기도지사는 뭘하고 있나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경기도에 미군기지대책전담기구 설치 요구

미군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무죄평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 시민단체 인사들이 경기도에 미군기지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7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기자회견에서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경찰청 등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경기도의 불평등한 SOFA개정 노력과 미군기지 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하는 경기지역 100인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선언문에서 "대한민국내 미군기지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가 미군기지관련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며 "미군기지로 인한 미군범죄, 환경문제 등 도민이 입고 있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경기도와 비슷하게 일본 미군기지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오키나와에서 초등학교생이 미군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을 때 오키나와 현직사가 미국을 방문해 당시 미대통령의 공식사과와 미일주둔지위협정의 개정을 성사시키는데 앞장섰다"며 "또 오키나와는 행정조직에 독립적으로 '기지대책실'까지 두고 미군기지에 대한 각종 정보와 향후 반환준비, 기지주변 생활환경 정비 등 일상적 활동을 하면서 준비된 행정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경기도에 ▲경기도지사가 불평등한 SOFA개정에 적극 대응 ▲미군에 의한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방안을 도차원에서 마련 ▲미군기지주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전담부서인 '기지대책실'을 신설 ▲미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가칭)경기지역 미군기

지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한편, 경기민중연대(준), 다산인권센터 등 경기지역 시민사회정당들이 참여하고 있는 '경기지역 비상사국회의'는 17일 일간지에 '살인 미군처벌과 한미소파 전면개정을 위한 경

기도 사회시민정당단체 대표선언'을 게재하고 '무죄평결원천무효, 살인미군처벌, 부시직접사과, 소파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같은날인 17일을 '경기도민 행동의 날'로 정하고 오후 6시 수원역에서 경기도민들이 참여하는 촛불시위를 가졌으며 경기도지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현재 수원, 부천, 평택, 고양, 안산 등 경기도의 21개 시, 군에서 매일 또는 매주 촛불집회를 갖고 있다. [대신]

"경기도 미군기지 주민 30%, 미군피해경험"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의정부시 등 4개 미군기지지역 주민 설문조사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해 동두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등 4개 지역주민 1천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미군으로 인한 피해를 실제로 어느정도 경험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0%가 '본인, 가족, 이웃 등이 토지이용, 도로, 교통, 강도, 폭행, 소음, 환경오염 등의 미군피해경험이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 지역사회와 미군과의 갈등 현안에 대해서는 복수응답으로 "미군공여지로 인한 토지이용 및 재산권 행사의 불편"(67.8%), "미군범죄 및 미군들의 무례하고 문란한 행동"(62%), 환경오염"(56%)순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결과 응답자 가운데 52.1%가 미군이 우리지역 주민에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66.6%가 미군이 환경, 청소년 교육환경, 도시개발, 사회치안 등 각 분야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는 "전국 미군 공여지의 87%인 6천400여만평이 있는 경기도에서는 각종 미군범죄와 환경문제로 인해 미군과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주한미군이 당장 철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파의 합리적 개정과 함께 경기도 등 미군기지가 있는 자치단체의 적절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경기도 제2청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주한미군관련 주민상담센터'를 설치했으나 도민들은 이 센터가 미군기지문제의 예방이 아니라 발생한 민원의 국가배상절차 안내나 대행을 위한 기능에 머물러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경기지역 시민단체들은 모든 회의가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2사단과의 상설협의체'도 사실상 미군의 입장을 고려하는 형식적 구성이라고 평가하며 근본적이 대책기구와 전담부서의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와 비슷한 상황인 일본의 오키나와현은 '기지대책실'을 두고 '오키나와현행정조직규칙제19조'에 사무내용을 규정하고, 인력을 편제하여 기지와 관련한 갖가지 정보에서부터 향후 기지반환준비, 기지주변 생활환경 정비등 일상활동을 펼치며 지방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대신]



### 부천장애인복지관 노조 노조인정, 단협체결요구

사용자의 전근대적인 노조관으로 인해 파행운영되고 있는 부천시장애인복지관(위탁자 성가회유지재단)이 노사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중재안마저 거부하고 나서 분규해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부천시는 부천장애인복지관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자 지난 12월 노무사를 선임해서 중재안을 마련해 지난 11일 부천시관계자와 복지관 노사 양측, 근로감독관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복지관측은 "부천시와 노동부가 자신들에게 압력을 주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 그리고 근무시간내 조합활동과 집기류 제공들은 복지관의 운영원칙에 배치된다"라며 중재안을 거부했다.

부천시와 노동부 관계자는 복지관측의 중재안 거부방침에 당혹스러워 하면서 "현 중재안은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노사가 충분히 받아들일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복지관측의 거부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노조측도 "단체협약도 타지역 장애인복지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한 것이며 인사위원회 노조참여 등 중요한 쟁점사항을 노조가 모두 양보했는데 불구하고 제3자의 중재안마저 거부하는 것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상"이라며 복지관측을 비난했다.

더욱이 복지관측은 17일 계약직 조합원을 해고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노조와해과정을 밟으려해 노조가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18일 점심 휴게시간중(12시~1시) 사이버시위를 전개하고 20일 오후 1시에 복지관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경기복지시민연대 관계자는 "복지관측의 노동조합에 대한 근시안적 태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상황이다"라며 "결국 노사간의 원만한 해결이 안될 경우 위탁자 교체 등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복지관 노조는 복지관측에 ▲노동조합 인정 및 노조사무실 제공, ▲주5일 근무, ▲근무시간 내 조합활동 인정, ▲운영 참여 등을 요구하며 지난 10월부터 천막농성 벌여 왔다. **특신**

### 외국인여성이주노동자, 이삼중고

성폭력 피해자중 55.6%는 가해자가 한국인 직장상사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연수제 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갑배 등, 아래 공대위는) 17일 오후 3시에 '외국인여성이주노동자 실태보고 및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공대위가 지난 3월부터 9개월간 전국 30개 상당단체 이주노동자 공동체 50여개 및 집단거주지역 여성이주노동자 357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해 노동조건실태, 모성보호실태, 성폭력피해실태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 ▶ 주거지와 근무환경

일주일 근무시간은 67~88시간 이하다 38.2%로 가장 많았고, 49.2%만이 한달에 4번 정도 휴일을 갖는다고 응답했다. 또 월평균 임금은 53~100만원이하다 70.7%로 가장 많았으며 36.7%가 현재 직장근무기간이 1년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생활의 문제로는 장시간노동(30.2%), 저임금(29.9%), 열악한 작업조건(27.4%), 임금체불(21.5%) 순으로 나타났다.

#### ▶ 모성보호실태

이 결과에 따르면 임신을 경험한 외국인 여성중 56.3%는 한국에서 유산을 경험했다고 답해, 국내외국인 여성들의 모성보호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임신경험 여성의 57.7%는 임신을 이유로 업무변경을 부탁하지 못하였으며, 그 이유에 대해 66.7%가 '임신사실을 숨겨야 해서', 16.7%는 '사장이 싫어할 것 같아서'라고 답해 현실적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 ▶ 성폭력 실태

이와 함께 외국인여성노동자의 121%가 직장내에서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30.4%는 신체만지기, 21.7%는 성적농담이나 성관계 강요, 17.4%는 음란물 보여주기, 13%는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가해자로는 55.6%가 한국인 직장상사를, 27.8%가 한국인 남성 노동자들, 11.1%가 외국인 남성 노동자들 지목했으며, 발생장소로는 56.3%가 작업장을, 18.8%가 숙소를 꼽았다.

또 성폭력 피해를 당한 외국인 여성노동자 중 38.9%는 '혼자참고 견뎌다', 16.7%는 '직장을 옮겼다'고 답했으며, 혼자 참고 견딘 이유에 대해 54.5%가 '불법체류신분을 이용한 협박'을 들어 불안한 신분상태가 외국인 여성을 성폭력의 대상으로 몰고있음을 알 수 있다.

#### ▶ 인권침해의식

여성이주노동자의 41%는 자신이 한국생활 동안 인권침해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으며 이들은 개인상담이나 외국인노동자상담소를 통해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대위측은 "여성이주노동자들은 불안정한 신분 이주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와 함께 '여성'이라는 신분때문에 성폭력등에 방치돼 이삼중의 고통을 받는 것은 물론, 모성보호 실태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대위측은 이와 관련 ▲합법적 취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모성보호, 남녀고용평등법, 직장 내 성희롱 금지법 적용 ▲모성보호센터설치, 성폭력대책위원회 구성, 한국문화교육 ▲여성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국내여성운동 연대를 제안했다.

한편, 공대위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외국인 노동자 등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02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한국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한국선언문에서 "이주노동자들에 가해지는 비참한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한국은 더 이상 이주노동자들을 경제적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 말고 올바른 외국인력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신**

**“월 514,150원을 못받고 계신가요?”  
 최저임금위반사업장 신고를 받습니다.**

◇ 민주노총 수원지구협의회 031-225-9484 /  
다산인권센터 031-211-5855

# 다산인권

제100호

2002. 12. 24.(화)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편집인 : 송원찬

442-38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6 법전빌딩 313호 ☎ 031-213-2105 Fax 031-215-4395 http://rights.or.kr e-mail: humandasan@hanmail.net

## 반인권, 비리연루 인권위원 인선을 거부한다.

인권시민사회단체 26일 긴급 비상회의를 열고 대책마련 예정

지난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이진강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을 거부하는 인권단체 공동 집회'가 열렸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21개 인권단체들은 류씨의 신임위원 임명에 대해 '▶첫째, 류씨는 99년 대전법조비리 사건(이종기 변호사 뇌물 수수 사건)에 연루된 인물로 비리 당사자로 당시 검사직에서 물러났으며 그후 국내 굴지의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해서 최근까지 기업쪽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으로 그 전력이 인권옹호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

▶둘째, 92년 류씨가 법무부 인권과장 재직 당시,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참석해서 "한국에는 인권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발언을 해, 한국의 인권상황을 왜곡하는데 앞장섰다. 국제사회를 향한 인권문제의 부인과 왜곡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취해온 악습이다. '인권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인식을 가진 인권위원이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라는 점을 들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또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원 인선에 있어서 국회, 사법부가 나뉘먹기 식으로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 인선기준을 공

개하지 않는 문제점 등을 들어 인권위원 인선 원칙을 공개적으로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류씨는 청와대의 지명으로 인권위원에 임명되어 첫 인권위원회에 뒤늦게 참석했고, 당시 회의를 참관하던 인권단체 관계자는 류씨의 신임위원의 임명을 거부하는 인권단체의 성명서를 낭독하며 인권단체의 의사를 전달했다.

또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와 청와대에 각각 인권위원 인선과정에 대한 공개질의서와 경위해명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 요구서에서 부당한 인권위원의 인선의 재발방지와 이를 위한 공론화를 요구했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오는 26일 오후 1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류국현 인권위원 임명 대책'을 위한 인권·사회단체 비상연석회의를 열어 류씨의 인권위원 사퇴와 인권위원 공론화 등 인권사회단체들의 공동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신**

### < '다산인권' 100호 발행에 부쳐 > “인권과 평화의 촛불을 밝히자”

“우리는 먼저 인권유린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단숨에 내달려갈 것이다. 인권을 유린하는 권력과 자본을 고발하고 인권유린을 방치한 모든 법 제도를 고발할 것이다. 절반의 생각만을 강요했던 국가보안법과 그 안에서 길들여진 우리의 인권무의식에 대해서 질타를 가할 것이다. '다름을 인정하지 하고 차별로 대응하는 자들의 폭력성에 대해서도 폭로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겠느냐며 독자들에게 끝없이 질문을 던질 것이다.' (2000년 10월 1일 창간사 중)

지난 2000년 10월4일에 주간 '다산인권'의 창간호가 발행된지 2년이 지난 오늘 지령 100호를 발행하게 됐다. 정말 기쁘다.

거창한(?) 창간사를 밝히면서 벽찬 감동과 옹골찬 다짐으로 인권세상을 향해 '다산인권'이라는 첫 불화살을 힘껏 쏘아 올렸다. 하지만 뒤 돌아보면 창간사에 밝힌 '다산인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의문을 가진다. 사실 주간 '다산인권'은 다산인권센터에게는 인권소식을 전하는 매체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왜냐하면 '다산인권'은 우리의 인권활동과 그 현실을 그대로 투영하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보기좋은 편집과 논평조의 평범한 기사로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한 활동을 숨길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다시금 창간사의 의미를 반추해서 힘찬 실천을 약속하며 조용히 자축한다.

하지만 100호를 자축하기에는 우리앞에 놓인 인권상황은 심각하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북한에 대한 압력으로 인한 불안한 한반도 상황 등 실로 미국의 패권주의가 전세계를 중차대한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때 지금 휴전, 미선의 죽음으로 촉발된 전국민적 추모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여중생의 죽음이 우리에게 실로 많은 것을 남기고 보여주고 있다. 이제 또다시 그 여중생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되짚어봐야 할 때이다. 미국의 패권주의로 압살당하는 수많은 민중의 죽음을 막고 평화와 인권을 지켜내는 일이야말로 우리 여중생 죽음을 진정성을 보여주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지난 14일 서울의 광화문과 세계 곳곳의 교포들이 환하게 밝힌 촛불의 메시지를 12월31일 광화문에서 열릴 100만 범국민 촛불평화대행진이 평화와 인권의 메시지를 세계에 알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특신**

### 동계 위협적 강제철거

수원 망포동 철거민들 분개

23일 오전 8시 가수용이주단지 건설과 영구임대주택을 요구하며 택지시행업체인 주택공사에 맞서던 수원시 망포동 철거민들이 강제철거를 당했다.

이날 수원남부서 소속 경찰 100여명과 용역업체 직원 50여명이 포크레인을 앞세워 들이닥친 것이다. 동계철거는 국무총리령으로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주민들은 "한 겨울 살인적인 강제철거"라면서 분개했다.

조영귀 망포동 철거민대책위원장은 학교에 안 가겠다고 울던 아들(9)을 달래서 등교시켰다. 포크레인은 120여가구가 살았던 빌라나 단독주택을 두 시간만에 흔적도 없이 몽개버렸다. 오후 2시께 철대위사무실에 있는 3동짜리 빌라를 남겨두고 철거는 계속됐다.

이곳은 지난해 9월 주택공사가 32평 서민형 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주민들과의 단 한차례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했다. 당시 이곳에 살고 있던 가구는 120여가구,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4인 가족 기준으로 4백만 원 약간 넘는 이주보상비만 달랑 받은 채 떠났다. 올해 3월 남아있는 10여가구가 철거민대책위를 구성하고 가수용이주단지 건설과 영구임대주택을 요구하며 시공사측과 싸웠다.

그 사이 주민들은 세 차례 강제철거 위기를 맞았다. 이 과정에서 두려움에 못 이겨 그나마 남아있던 이들도 떠났고, 현재 세 가구만 남아 있다. 이들 중에는 현재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있는 50대의 장애인부부도 있다. 4백만원 남짓한 이주보상비로는 살 데를 구하는 것이 만무하다. 이들은 밖에 나가 죽으나 여기 남아 있으나 매한가지라며 끝까지 남아있었다.

주택공사측은 가수용이주단지 건설 대신 겨울동안의 임시거처 제공만을 주장하다가 이날 오후 7시께 망포동 인근의 병점에 현재 건설 중인 25명형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입주시까지 가수용이주단지 건설 등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막판 극한 대립은 피했다. 조대책위원장은 "이곳에서 수십년 살아온 주민들에게 한마디 논의도 없이 내쫓는 것은 명백하게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주택정책을 비판했다. **다신**

### 형사소송법 개정안, 문제있다.

인권시민단체, 오히려 인권침해요소 많다며 반대의사 밝혀

법무부가 지난 22일 마련한 형사소송법 및 형법 개정초안을 발표했으나 인권시민단체들이 인권침해요소가 있다고 반대의견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다.

△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허용 -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입회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피의자는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초동수사 시기와 할 체포, 구속후 48시간 이내에는 변호인의 입회가 불가능하며 이후 변호인이 입회하더라도 신문에 직접 개입하지는 못한다는 단서가 있다.

△ 보석확대 및 석방제도 개선 - 필요적 보석 대상에 상습범을 포함시켰고 보석이 가능한 범죄의 범정형량도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했다. 그동안 보석을 허용하지 않는 범죄의 범정형량도 현행 '장기 10년 이상'에서 '장기 10년 이상 및 단기 1년 이상'으로 바뀌 보석의 범위를 확대했다.

△ 인신 구속제도의 개선·법률 서비스의 질적 향상 - 경찰 구속기간의 불필요한 장기화를 막기위해 현행 10일의 구속기간을 그대로 유지하되 구속기간이 5일을 초과하는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긴급체포를 했을 경우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했다.

△ 중대 범죄에 대한 검찰 구속수사 기간 연장 - 조직폭력, 마약, 테러, 강력, 뇌물 범죄 등 일부 중대 범죄에 대한 검찰 구속기간을 현행 최대 20일에서 최대 6개월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고 구속기간 연장시 매 1개월마다 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 참고인 구인제도 - 법무부는 현재 참고인이 자의에 따라 출석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 현행법 대신 중요 참고인의 경우 2차례

이상 수사기관의 출석에 응하지 않을 시 법원의 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초안에 넣었다. 이와 함께 참고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나 증인의 출석과 진술, 자료제출 등을 방해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 재정신청의 확대 -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도 현행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가혹행위에서 형법상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선거 방해, 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행위, 경찰관의 직무유기 등 총 10개범죄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및 형법 개정안 초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변은 성명에서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이후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서 법무부는 오히려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미명 아래 인권 침해적 요소들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변은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제한없는 입회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구속기간의 연장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사법방해죄 신설 등에 반대한다고 밝히며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현재 20일인 피의자의 검찰 구속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운 '중대범죄 해결'은 수사인력 확충과 수사기법 과학화 등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것"이라며 "기존 구속기간도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 마당에 오히려 구속기간을 늘리려는 법무부의 개정안은 설득력이 없는 수사 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다신**

#### 의정부여중생 추모·불평등소파개정 촛불집회

◇ 수원집회 : 12월26일(목) 오후 6시 / 장소 : 수원 남문

◇ 서울집회 : 12월31일(화) 오후 6시 / 장소 : 서울 광화문

# 다산 인권

## 합본 1호 색인

감옥

- 구치소내 폭력행위 사망자에 대해 원고승소판결 /113
- 서울지방변호사회, 교도소등 구금시설 실태조사 발표 /218

건강권

- “평생 불안에 떨 순 없다” - 향남면 제약공단내 방사선조사 멸균기 공장설립 취소 /4

경찰

- [HOT NEWS] 지속된 구타에 탈영, 정신치료...은폐까지 - 수원 남부서 의경들, 출동 직전 구타 집중돼 /74
- 경찰, 의경 구타 사실 인정...징계조치 - 경기경찰청, 1일 감찰 결과 구타 사실 확인 /76
- “서장 파면, 청장 공개사과하라” - 지역단체 15일 항의집회 갖기로 /79
- “경기경찰청장은 지역단체들과의 면담에 응하라” /81
- 수원단체들, 경찰청 항의 집회 /82
- 경기지방경찰청, 전·의경관리 문제있다 /105
- 경찰개혁 미룰수 없다 - 경찰폭력근절과 개혁등...인권단체개혁촉구나서 /108
- 인권단체, 대통령의 경찰관련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1천인선언운동전개 /111
- 의경실명 구속 대학생, 실형 선고 - 경기도경, 민중대회 관련 경원대학생 연행 /156
- 국가인권위, 경찰 알몸 신체검사 요건강화 권고 /216

고문·가혹행위

- 고문의혹 파출소 지하실 확인 - 외국인노동자 고문수사진상위 현장조사 /22
- “고문수사 입증할 충분한 근거 있다” /25
- 아이 앞에서 폭행...알몸 수색까지 - 대우차사태 곳곳서 인권침해, 인권단체들 조사 결과 드러나 /53
- 경찰폭력근절 멀기만한가! - 경찰봉으로 귀, 머리, 다리가격! /130
- 법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가혹행위 인정 판결 /131
- 경찰, 미성년 피의자 가혹수사 -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강력계 반장이 학생을 죽도로 구타 /211
- 수원남부서, 가혹수사 관련 경찰 전보조치 /214
- “인권은 검찰앞에서 멈춰선다?” - 검찰의 수사관행 바꾸는 근본적 개선대책이 마련해야 /219

과거청산

- ‘민주화 보상법’의 의의와 한계 - 역사적 정당성 확보 불구 보상수준 머물러 /2
-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 입법청원” /172
- 2기 민주화보상심의위원 보수성향 인사 대거위촉 /200
-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배제 입법 박차 - 사회단체협의회, 9월 5일 공소시효배제 입법촉구 의견서 국회제출 예정 /201

교육

- 학교폭력 방관자 심판대에 세운다 - 오는 17일 ‘2000 청소년동아리 한마당’ 모의재판 열기로 /32
- 종교 강요에 거리로 나선 교사와 학생들 - 안양성문고 종교의 자유 침해 등 파행운영 문제제기 /49
- 폐교설 나도는 가운데 교사 철야농성 돌입 - 안양 성문고 사태 갈수록 악화 /55
- [HOT NEWS] 사학 민주화 앞장섰던 교수노조 이용구 위원장 구속 /70
- ‘학교 화장실 청소 대행’ 선심으로 신문구독을 확장 /70

교육

· "인사비리 교육감 공개 사과하라" - 전교조경기지부 28일 무기한 천막농성 /75
· "반부패" 공개 수업 나선 전교조경기지부 - 도 교육계 인사비리 척결 위해 공개수업...도교육청, 불법행위로 간주 /87
· 초지일관 흔들리는 교육정책! -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규모 집회강행 /112
· 전교조 총력투쟁 유보 - 교육시장화 저지 과제 남아 /123
· 웃음을 되찾은 게 가장 보람 있었어요! - 매원초등학교에서 작은전시회 열려 /125
·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희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 차미경 국제민주연대 정책위원 /125
· 새학기 경기지역 대학교 분규로 진통 - 문제의 재단이 학내분규 원인제공 /151
· 학교는 신문지국, 교사는 신문배달부? -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204개 분회, 소년00일보 구독거부선언운동 전개 /163
· 집단 따돌림 지자제도 배상책임 있다 - 대전지법, D학교 학내 집단따돌림 사건 대전시에 책임 물어 /179
· 대입전형시 연소자 순 합격처리는 '차별행위' /180
· 국가인권위, 학교생활규정(안) 개선권고 - 교육부에 차별금지, 학교 내 인권상담기구 설치 등 요구 /204
· 대입전형시 나이차별 탈락자, '합격'결정 - 국가인권위 구제권고에 따라, 대구가톨릭대 합격 결정 /209

국가보안법 · 한총련

· 인권개선 한목소리 낸다 - 민변 민교협 인권단체, 국보법 폐지 철야농성 돌입 /33
· "국보법 폐지, 국가인권위법 제정하라" - 인권단체들, 18~23일 명동성당서 단식농성 돌입 /34
· 인권단체들 국보법 폐지 단식농성 돌입 - 19개 단체들 28일부터 명동성당서 /37
· '생각 없는' 국회의원들 - 국보법질의서 25% 답변...인권단체들 조만간 명단공개 /45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 경기남부지역단체들 14일 한나라당경기도본부서 집회 /47
· "미온적 태도...눈치보기" - 수원 국회의원들 국보법 질의서 답변 /63
· 최형규 항소심서 선고유예로 석방 /65
· 한총련 대의원 구속, 제동걸렸다 - 수원지방법원, 제9기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첫 영장 기각 /97
· 결혼앞둔 신랑,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 경인총련학생들, 수원지검 앞에서 연일 격렬한 항의시위 벌여 /100
· 신랑없는 눈물의 결혼식 - 김건수석방대책위원회, 수원지검 앞에서 매일 1인 단식 시위 /103
· 김건수, 서울고법서 실형 /150
· 한총련 대의원 수배학생, 부모앞에서 강제연행당해 - 한총련 대의원 10여명 구속중 /158
· 한총련 이적규정, 이제 그만! - 한총련 범사회인대책위, 한총련 강령개정 공청회 열어 의견수렴 /159
· "한번 한총련은 영원한 한총련?" - 14일 또 한총련 관련 학생 구속, 16일 아주대에서 한총련합법화 문화 /170
제 개최
· "한총련을 자유케 하라" - 한총련 합법화 경기지역 대책위(준) 구성, 이적규정 철회운동 확산 /181
· 전지윤 학생, 5년 구형 /185
· 기무사, 학생운동권 함정수사 의혹 - 서울고등군사법원, 국가보안법위반 장교 이례적 선고유예판결 /189
· 공안당국, 한총련 마녀사냥 또 시작 - 경기지역 인사 1,200명 선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촉구 /191
· 인터넷 토론 전지윤 학생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판결 /196
· [안내]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경기지역 범사회인대책위 출범식 /199
· 경찰, 한총련학생 연행과정 권총위협 - 경기지방경찰청, 한총련 대의원 무리한 검거로 물의 /201
· 한총련 합법화 운동 경기지역 사회인들이 나섰다 /204
·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로 규정 - 광주지법, 한총련 10기 의장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선고 /223
· 국가보안법의 죽음을 선포하자! -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54년을 맞아 국가보안법 장례식 준비 /226

국가인권위원회

· '허울뿐인 인권위법안' 철회하라 /45
· [HOT NEWS] 공권력 인권침해 더는 안 된다 - 인권위법 30일 국회 통과...실효성 발목 잡는 조항 여전 /66
· 국가인권위 대응 인권단체협의회(가칭) 창립 - 30여개 인권시민단체들, 19일 국가인권위 올바른 실현 위해 다시 결합 /89
· '국가인권위 바로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 내부워크샵 /101
· 인권위원, 불투명한 인선과 국제기준 미흡 - 24일, 국회의 여야 인권위원 4명 추천발표 /106
· 인권은 없고 위원만 있는 국가인권위? - 9일 인권단체 밀실인선 규탄속에 대통령 인권위원 11명 임명 /108
· 인권위원 명단(위원장 포함 11명) /108
· 국가인권위원회 당분간 파행운행 계속될 듯 - 관계부처 등의 몰이해, 비협조로 조직구성 조차 못해 /124
· 국가인권위원회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144
· "인권침해 구제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라" - 국가인권위법 1주년 기념 토론회서 인권위 한계 집중 거론돼 /166
· 국가인권위, 면전진정 방해한 교도소장 징계권고 /202
· 국가인권위원회는 비독립기관? /224
· 반인권, 비리연루 인권위원 인선을 거부한다 - 인권시민사회단체 26일 긴급 비상회의를 열고 대책마련 예정 /233

노동 - 일반

· 전교조 경기지부 민주화보상 신청 - '민주화 보상법' 시행에 따라 해직교사 110명 우선 접수 /1
· 노동자 권리찾기 '힘겨운 싸움' 승리 - 안성 동방제약, 188일 파업투쟁 끝에 극적 타결 /3
· 더 이상 탄압하지 말라 - 민주노총 경기지부 도내 7곳에서 노동탄압정책 규탄 천막농성 중 /4
· "우리도 엄연한 노동자다" - 골프 경기보조원들 /6
· 골프장 자치회 근로자 인정 안돼 /7
· "비정규노동자에게 근기법을 보장하라" /10
· 일방적 희생 강요에 다시 일어선 노동계 -노동계, 구조조정 및 노동법 개악 저지 공동투쟁 나서 /29
· "혹한의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 - 용인 한성CC 경기보조원 208명, 부당해고 반발 134일째 천막농성 /31
· 환자는 어찌란 말인가 - 수원 백성병원, 병동간호사 대거 부당 발령...노조탄압 조합원 강한 반발 /46
· 노동절, 그 이후 - 제 111주년 노동절 기념대회를 보고 /66
· "횡령 임금 지급하고 노조 인정하라" - 경기노조 안산분회 조합원들, 청소업체 노조탄압 맞서 싸움# /68
· 지금 안산은 노조 탄압의 무법지대 - 안산 동아공업노조 64일째 천막농성...환경미화원들 무더기 부당해고 /75
· 도내 곳곳에서 생존권 보장 파업 돌입 - 민주노총 비정규직차별철폐 등 요구하며 총파업 /78
· 노조간부 연행, 용역깡패 급습 /81
· 합법 파업 막는 경찰 폭력에 강경 대응 - 경기민중연대, 도내 농성장서 폭력 자행 공권력 규탄 집회 열기로 /82
· 민주노총 7월 5일, 정치총파업 돌입 - 노동운동탄압에 맞서 노동자 총궐기...경기본부도 7일 집회 열기로 /84
· "민주노총 탄압을 중단하라" - 20일 경기지역 시민사회민중단체 첫 공동 시국기자회견 개최 /89
· 삼성해고자들 수원삼성전자 앞에서 연대집회 /97
· 또! 또!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연행 - 비정규직 대책위, 국회의사당 진입 시도 /98
· 철도노조, 본격 민영화저지 투쟁 박차 - 11일, 수원 장안공원에서 '2001년 철로역정' 순회공연 진행 /102
· 안산시 청소용역업체 합의서 불이행... - 안산시, 합의서 이행촉구 환경미화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104
· 안성축산민영화(사기업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소동...민영화반대투쟁 3인 체포영장발부 /106
· 민주노총 비정규노동자 주간 선포 - 수원지법 앞 1인 릴레이시위, 수요집회 등 /109
· 민주노총 경기본부 17일부터 무기한 천막철야농성 돌입 - 83개 인권, 시민, 사회단체 단병호위원장 석방대 /110
책위 발족

## 노동 - 일반

· 민주노총 최저임금위반 사업장 신고접수, 고발 예정	/111
· 동아타이어(주) 인권유린, 산업연수생 파업, 단식 돌입!	/112
· '교수도 노동자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출범	/118
· 한겨울에 쫓겨나 천막농성하는 노동자들 - 안산 소재 대성산소용역노조 52일째 농성, 용인 소재 세원바이	/130
캠 노조 폐업 134일째	/130
· 한통 계약직문제 해결촉구 위한 2차 온라인 시위	/138
· "구속 노동자 석방하라" - 기아자동차노조, 구속된 노조원들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142
· "신자유주의에 대항해 싸우겠다" - 김상완, 민주노총경기본부 새로운 일꾼 뽑혀	/143
· 철도노조, 민영화반대 25일 총파업 돌입! - 민주노총, 주5일근무제 개악저지 등을 위한 2월 총파업지침 내려보내	/145
· 구조조정은 경영상 결단? 파업은 생존상 결단! - 대법원, 조폐공사 파업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조간부 유죄판결	/147
· 정부의 초강경, 총파업으로 맞선다 - 민주노총 긴급대의원대회에서 4월 2일 전면총파업 돌입 결의	/155
· 집배원노동자, 안전사고 사망자 5년 동안 117명 - 비정규 집배원노동자 장시간노동으로 고통, 노동기본권	/163
보장 시급	/163
· 대법원, "96년 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한 정치 파업도 정당한 해고사유 아니다" 판결	/166
· 발전노조 인권침해 조사나서 - 인권단체, '발전노조 공동조사단' 구성해 16일부터 조사 착수	/171
· 월드컵을 볼모로 삼는 노동자?	/172
· 수원30%이상, 최저임금위반사업장 - 공동감시단, 수원지역 최저임금위반 사업장 실태조사 발표	/173
· 발전노조 파업후 보복성 인권침해 심각수준 - 인권단체공동조사단, 발전회사의 반인권적 노조탄압 폭로	/188
· 교육청은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 전교조 경기지부, 5일째 경기도교육청 점거농성 식발투쟁 강도높여	/192
· 노동기본권 침해 직권중재제도 철폐하라 - 70개 시민사회단체들, 병원 장기파업사태 해결 촉구	/194
· 경기교육청-교원단체 단체협약 체결	/206
· 보건의료노조 무기한 단식농성 - 민주노총도 '노동탄압 분쇄와 부실국정감사 규탄투쟁' 나서	/207

## 노동 - 공무원 노조

· 경기지역, 공무원 노조 출범 박차 - 25일 경기지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회 출범...10개 지부 3천명 회원	/90
· 오산시, 전국 처음 직협소속 공무원징계 말썽 - 17일 징계공무원 경기도소청심사위에 소청제기	/94
· 공무원 노조, 경기지역 공동대책위 구성	/101
· 공무원노조, 24일 출범 - 정부 '불법간주 단호저지' 충돌 불가피, ILO 공무원노조 인정 권고	/153
·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 수원공무원노조 조합원, 수원시청 앞에서 30일까지 1인시위	/161
· 전공노수원지부 2일 천막농성 돌입 - '고용직공무원 고용 승계' '지부장 중징계 철회' 요구	/165
· 경기지역 대학생 70% 공무원노조지지 - 민주노동당 경기도지부 학생위원회, 969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165
· 수원시장, 전공노수원지부장 해임키로 - 13일 심 시장, 허지부 해임 결재 경기도에 올려, 전공노 수원지부	/169
와 수원공무원공대위 강력 반발	/169
· 공무원도 노동자다 - 공무원노조,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안에 반대해 파업투쟁 불사	/215
· 공무원노조관련 본격 징계시작 - 경기도 인사위원회, 18일 수원시청 공무원 해임결정	/223
· 공무원노조 릴레이 단식농성 돌입 - 부당징계 철회, 자치권포기 손학규도지사 퇴진 요구 거세	/227

## 노동 - 레미콘 노조

· "우리도 등지 틀고 노동3권 도전합니다" - 수도권레미콘운송협의회, 오는 11월 정식 출범	/10
· 낙타아저씨들 조직노동자의 대열에 - 건설운송노조, 12월 3일 설립보고대회 갖고 본격적인 활동 돌입	/28
· 건설운송 노동자 한 깃발아래 모였다	/31

## 노동 - 레미콘 노조

· 노조가입 이유로 내쫓기는 낙타아저씨들 - 레미콘회사 곳곳서 노조탄압	/35
·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하라" - 지노위 노조 합법성 인정 불구, 집회 참여 부천 레미콘노동자 강제연행	/51
· "레미콘운송기사 노동법상 명백한 근로자" - 서울지노위, 구제신청서 심판서 결정...사측 부당노동행위에 췌기	/55
· 부당노동행위에 총파업으로 맞섰다 - 건설운송노조 10일 대규모 집회, 중노위 합법적 파업권 인정	/60
· [HOT NEWS] 사법부, 레미콘불하차량 운송기사 "근로자"로 인정	/61
· 레미콘조합원들, 한밤중 용역들에게 집단 구타당해	/64
· "건설일용직 근로조건 개선 위한 범시민대책위 구성하자"	/71
· 경찰, 해머 들고 건설운송노조 여의도 농성장 급습 - 차량 부수고 조합원 301명 연행	/80
·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노조 인정할 수 없다" - 26일 국회 상임위서 유진측 이같이 주장	/83
· 김칠준변호사 국회 앞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 김변호사, 12일부터 레미콘운송기사 노조 인정 요구하며...	/86
이용식위원장도 순회단식 중	/86
· "유진기업 사주 즉각 구속 수사하라" - 43개 인권, 시민사회단체들, 18일 노조탄압 자행 유재필 구속수사	/88
촉구서 대검찰청에 접수	/88
· 유재필 처벌 1000명 대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 24일 시민사회노동계 유재필 처벌 시민고발대회 연 뒤 접	/90
수, 구속 수사 촉구	/90
· 불량레미콘 사실에도 사업주 비호하는 산자부 - 100인 위원회, 10일 오전 11시 30분 산업자원부 앞 규탄집회	/91
· 레미콘운송기사는 사업주가 아니라 노동자다 - 13일 노동법학자 21명, 기자회견을 통해 레미콘노동자 인정요구	/95
· 레미콘 분쟁과 관련한 주요 판결 및 결정 내용	/95
· 100인위 레미콘 사업주 구속처벌촉구 기자회견	/97
· 검찰의 레미콘 사업주 감싸기 처분에 각계 항의성명 잇따라 - 레미콘 운송기사는 노동자가 아니다. 검찰,	/132
레미콘 사업주 부당노동행위 무혐의 처분	/132
· 훈장은 박탈되고 그는 이제라도 구속되어야 합니다 - 유진종합개발(주)회장 유재필의 국민훈장모란장 수여에 부처	/142
· 레미콘회사들, 조합원상대 수억원 손배 청구 - 법원 징역형 선고 등에 업고 가압류 소송	/193
· '노조 인정, 해고자 전원복직' - 행운레미콘 노조, 19일간 천막농성 끝에 사측과 합의	/228

## 논평

· [논평] 기회는 이 때다, 무소불위 힘 휘두르는 공권력	/82
· [논평] 죽음 부른 가정폭력 가해자 살인죄로 기소되어야	/86
· [논평] 대응 감빵?	/107
· [논평] 에바다 폭력, 그 배후세력을 수사하라	/153
· [논평] 국가인권위를 진정합니다?	/162
· [논평] 바로세우자! 국가인권위	/225
· [논평] 2002 되돌아보는 세계인권선언 - 신자유주의, 군사 패권주의에 맞서야	/230

## 농민

· 우리쌀 지키기 100인 100일 걷기 - 수원도착	/210
-------------------------------	------

## 다산인권포럼

· [다산인권포럼] "지역에서 인권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155
· [다산인권포럼] "그녀의 죽음에 공소시효는 없다" - 수지 김 사건과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문제	/161
· [다산인권포럼] "한총련 이적규정문제 이대로 둘 것인가"	/179

## 다산인권포럼

- [다산인권포럼] 사상·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195
- [다산인권포럼] "미국식 애국주의를 고발한다" - 9.11, 1년 후 /203
- [다산인권포럼]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213

## 동성애자

- 엑스폰에 사이트 폐쇄... - 동성애자 단체 잇따른 성명 발표 /123

## 빈민·빈곤

- 고천만 경찰연 의장 징역 2년6개월 선고 /8
- "먹고는 살아야 할 것 아니냐" - 수원 팔달구청 용역동원 노점상 강제 단속... 노점상들 생존권 보장 집회 /42
- "하루 벌어 하루 먹고하는데 어찌라고" - 서민 울리는 마구잡이 노점상 단속... 생존권 보장해야 /43
- 합법집회 강제 저지로 노점상인 10여명 부상 - 수원 팔달문 노점상 집회 저지 용역단속반 폭행 휘둘러 /52
- "이의를 제기합니다!! 노점상이 불법이라급쇼~" /176
- 동계 위협적 강제철거 - 수원 망포동 철거민들 분개 /234

## 사상·양심의 자유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신청방법 /11
- 양심적 병역 거부자 끝내 실행 선고 /77
- 시대흐름 역행한, 국방부의 복지부동! - 국방부, 징총 거부자들에 대해 대체복무수용 절대불가 밝혀 /115
- 헌법재판소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제정 판결 나와... /141

## 사형제도

-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 상정" 엠네스티 지지성명 /114

## 사회복지

- '수급권운동 수원연대' - 국기법 관련 조례제정 촉구 /8
- 사회복지사의 복지가 문제다 - 사회복지노동자 주당 52.6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 /151
- '사이버 시위' /206
- [사회복지대학] 사회복지현장종사자의 권리찾기 /232
- 부천장애인복지관 노조 노조인정, 단협체결요구

## 신자유주의·세계화

- 이번엔 서울에서 Anti Globalization 깃발을 /11
- 국내 11개 인권단체, 아셈민간포럼탈퇴 - "아셈회의동안 인권침해 감시할 터" /15
- 아셈 2000 민간포럼 열린다 /16
- 가장 고통받는 이들과의 연대 - '신자유주의에 위협받는 인권' 주제로 수원인권영화제 쟁점토론 열려 /23

## 신체의 자유

- 강압수사 제동 건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56
- [HOT NEWS] 경기남부지역 공안탄압 진행 중 - 지방노동사무소 사건 구속자 속출, 경찰 조직확대, 인권 침해수사에 학생진영 반발 /68

## 아동·청소년

- 나와 세상을 사랑하자 - 수원지역단체, 5일 어린이청소년한마당 열어 /67
- 청소년들의 "알럽휴먼라잇즈" - 26일부터 청소년 인권강좌 열려 /73

## 아동·청소년

- [2001 청소년 모의법정 대본 공모] 친구야, 성난 사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78
- 청소년 모의법정 대본 공모 /83
- 가자! 놀자! 부대끼자! - '알럽휴먼라잇즈' 여름캠프 떠나자 /84
- 청소년모의법정 대본공모 시상식 열려 - 대상작: 극적 반전과 선명한 주제의식 돋보인 '굴레를 벗어나' /102
- 우리가 열어놓은 세상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 11월 3, 4일 청소년문화센터 g.o Festival 열려 /115
- 청소년 인권사업의 아이디어를 빌립니다 /137
- 청소년 인권을 위한 매뉴얼북 "通話, 따르릉..." - 경기북지시민연대 수원시 청소년들에게 배포 /138
- 수원지역 청소년 인권지수는 얼마? - 5월 청소년인권의식 및 인권침해 설문조사, 7월 청소년 모의법정대 본 공모 사업, 11월 청소년모의법정 행사 이어져 /170
- [안내] 청소년인권의식 표본조사 발표 및 청소년인권향상을 위한 토론회 /201
- 수원지역 청소년 인권의식 한 눈에 - 다산인권센터, 12일 1800여명 청소년인권실태조사 발표회 /203
- [안내] 청소년모의법정 공모당선작 /220

## 언론의 자유

- 경기지역 개인, 시민단체 언론개혁과 조선일보반대운동 본격 시동 /109
- 언론을 비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언론운동이다 - 오는 12월 1일(토) 경기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발기인대회 예정 /124

## 여성

- 여성인권 무시한 성희롱 가해자 복직 결정 /44
- 경기여연, 호주제폐지 앞장서기로 /60
- 여성 범죄 법적 심판받는다 /65
- 호주제 폐지운동에 앞장 - 7월 5일 기념식 가두서명 전개 /85
- 종중원 자격은 남자만의 것! - "헌법, 국제조약에도 어긋나는 구시대적 발상" /129
- 대체인력 부족, 낮은 급여로 육아휴직신청자 낮아... /136
- 매춘여성 인권지킴이? - 경찰청, 매춘업소 인권유린 대책 그 실효성 의문 /146
- 교사 지위이용 여학생 상습 성폭행 - 여성시민단체들, 검찰 직장수사에 항의하며 구속수사 촉구하고 나서 /187
- 여성단체 가해자 구속촉구... 검찰 뒤늦은 수사 /190
- 성폭행 피해자 검찰조사후 자살기도 - 교사 성폭행사실 전면부인, 검찰 당사자 거짓말탐지기 조사예정 /195
- 교사 성폭행 고소 여고생, 무고 체포영장 - 여성시민단체, 검찰의 편파적 수사 거센 반발...엄중수사 촉구 /197
- 여성·시민단체들 수원법원 앞 1인시위 - 성폭행피해자 중심 수사, 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199
- 수원지검, 관련자 전원 소환 조사 - 교사 여학생 성폭행사건, 거짓말 탐지기 조사 판정불가 나와 /206
- 검찰, 성폭행 교사 무혐의 처분 - 여성시민단체 강력반발...여학생의 무고죄도 무혐의 처분 /217
- 검찰 성폭행교사 무혐의 처분에 피해가족 항고의사, 여성단체 규탄집회 열어 /220
- 매춘여성 인권지킴이? - 경찰청, 매춘업소 인권유린 대책 그 실효성 의문 /146
- 교사 지위이용 여학생 상습 성폭행 - 여성시민단체들, 검찰 직장수사에 항의하며 구속수사 촉구하고 나서 /187
- 여성단체 가해자 구속촉구... 검찰 뒤늦은 수사 /190
- 성폭행 피해자 검찰조사후 자살기도 - 교사 성폭행사실 전면부인, 검찰 당사자 거짓말탐지기 조사예정 /195
- 교사 성폭행 고소 여고생, 무고 체포영장 - 여성시민단체, 검찰의 편파적 수사 거센 반발...엄중수사 촉구 /197
- 여성·시민단체들 수원법원 앞 1인시위 - 성폭행피해자 중심 수사, 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199
- 수원지검, 관련자 전원 소환 조사 - 교사 여학생 성폭행사건, 거짓말 탐지기 조사 판정불가 나와 /206

여성

- 검찰, 성폭행 교사 무혐의 처분 - 여성시민단체 강력반발...여학생의 무고죄도 무혐의 처분 /217
- 검찰 성폭행교사 무혐의 처분에 피해가족 항고의사, 여성단체 규탄집회 열어 /220

이주노동자

- '외국인 노동자는 사람이 아니다?' /14
- 가평 농장서 이주노동자부부 강제노역 /22
- 이주여성인권연대 발족 /56
- 외국인노동자노조 국내 최초 출범 /75
-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를 다녀와서 - 이금연 이주·여성인권연대 /104
- 이주노동자지원단체 공동발간 '외국인 이주노동자인권백서' 출판기념회 가져 /127
- 이주노동자 100여명 체불임금지급요구하며 파업돌입 /139
- 외노협,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중지 촉구 /154
- 외국인노동자 차별을 반대한다 - 공대위 6월말까지 외국인노동자 차별반대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167
- 전국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들 업무중단, 노숙투쟁 /190
- 국가인권위,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권고 -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등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대책 전면적 재검토 요구 /195
- 외국인 강제퇴거명령시 구제절차 보장해야 /196
- 이주노동자 노예사냥, 표적수사 - 법무부, 경찰, 국정원 합동단속에 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 /203
-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지킴이' 발족 /210
- 유흥업소 종사외국인여성 인권침해 심각 - 업주와 공연기획사들 임금체불, 윤락강요 등 대책마련 시급 /215
-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조례 만든다 - 서울 성동구에 이어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두 번째 조례 제정 /218
- 외국인여성이주노동자, 이삼중고 - 성폭력 피해자중 55.6%는 가해자가 한국인 직장상사 /232

인권교육

- 수원농생고와 함께 인권교육 /53
- '2002 교사를 위한 인권워크샵'(교사직무연수) /183

인권영화제

- "우리 시대의 삶과 희망 엿보기" - 제5회 수원인권영화제 /17
- 제5회 수원인권영화제 27일~19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 '자본에 맞선 인간과 영상의 연대' /19
- 삶 속에 스며든 인권연대 - 제5회 수원인권영화제 성황리에 막 내려 /24
- [작은인권영화제] 필름속의 인권을 잡아라! 제1회 다산 작은 인권영화제 - '대지의 소금' /51
- [작은인권영화제] 충무로, 영화 그들의 노동 - 겨울밤이야기를 듣다(A Winter Night Story) /61
- 다시 보는 인권 영화 - '5. 5인권영화제' 18일 개막...팔레스타인 분쟁 작품 대거 선보여 /69
- [작은인권영화제] 편견속에 갇힌 이반, 그들의 따스한 삶 '슈가 힐, 이발소 이씨' /71
- [작은인권영화제] 신자유주의의 심장에 활을 쏜다 '짜빠띠스타(Zapatista)' /80
- [작은 인권영화제] 시애틀 투쟁, 그날을 기억하자 '시애틀 투쟁기록' /89
- [작은인권영화제] 굴곡진 우리 현대사의 기록, 인혁당 /94
- [작은인권영화제] 1975년 4월 9일 '사법사상 암흑의 날' /96
- [작은인권영화제] 팬지와 담쟁이 /104
- No war! YES peace! - 제6회 수원인권영화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아주대 다산관 강당에서 열려 /107
- 제6회 수원인권영화제 - 일정과 장소 옮겨 /109

인권영화제

- [작은인권영화제] '구타 유발자... 잠들다(Four million blows)', '남정순, 엄마누라줌마(Don't cry mommy)' /110
- 제6회 수원인권영화제 /115
- 제6회 수원인권영화제(일정표) /118
- 제6회 수원인권영화제 - 살얼음 듣는 한복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하나 당신을 만나러 간다 /119
- 제6회 수원인권영화제 막내려 - 조선일보의 횡포에 안티 조선게시물 강제철폐 /123
- [작은인권영화제] '박통진리교' /177
- [작은인권영화제] '조국은 없다' / '탈북소년 중국에 가다' /195
- [안내] 제7회 수원인권영화제 - 상영일정 /219
- 편견에 중독된 세상에서 탈출하라 -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11월 15일부터 3일간 제7회 수원인권영화제 열려 /221

의문사

- 노동운동가 박태순 의문사 진상 밝혀야 /59
- "군 의문사 여전히 국가책임 없음" 판결 /128
- 군부대 초기사망, 유가족 진상요구 - 군가협, 6월 군의문사규명과 군폭력근절 홍보의 달 행사진행 /175
- 의문사특별법 개정, 노숙투쟁 - 경찰, 한나라당 앞 의문사 유가족 노숙농성자 무차별 연행 /213
- 국가인권위, 국회의장에게 의문사법 개정권고 - 의문사 유가족들, 20일째 한나라당사 앞 노숙농성 계속 /217

장애인권

- 학습권 침해 장애인 대학생 학교 상대 첫 소송 /54
- '에바다' 민주재단 구성으로 정상화 길 찾아 - 지난 30일 추가 선임된 이사 송탄등기소에 등기신청 /67
- 파행 파행 파행의 에바다 - 구재단측, 민주적 이사진에 대해 선임취소가처분신청 제출 /76
- 안양장애인복지관 노사교섭 난항 /84
- 에바다 가처분신청 기각결정 /87
- 에바다복지회, 정상화 갈 길 바쁘다 - 7일 민주적 이사진 4명 추가선임 /93
- "나는 보이지 않는 창살에 갇혀있다." - 22일, 장애인이동권연대의 서울지법에 이동권침해 손해배상청구 /96
- 에바다 농아학교 무기한 휴업 - 교장실 집기와 유리창 파손, 올해만 벌써 2번째 /114
- 경찰, 불법인 줄 알면서도 에바다이사들의 발을 묶다 - 평택 경찰, 에바다 공익이사들의 합법적 출입 막아... /137
- 또 다시 폭력으로 얼룩진 에바다 - 김칠준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난동, 법인 사무국장 집단 폭행 /149
- 에바다복지회 이사회, 에바다사태 공식입장 표명 /152
- 장애인의 날은 차별철폐투쟁의 날! - 4.20장애인차별공동기획단 장애인 7대 요구사항 기자회견 /162
- 4. 20 장애인철폐투쟁 공동기획단 투쟁 일정안내(16일-20일) /162
- 제천시장 장애인차별 손배소 제기 - 국가인권위 진정1호 사건, 7일 공대위 피해자의 위자료 지급요구 /177
- 폭력으로 가로막힌 에바다 정상화 - 에바다연대회의, 농아원 진입했으나 밖으로 밀려 대치 중 /187
- 에바다사태 평택경찰서 직무유기 고소 - 에바다연대회의, 농아원 앞 농성풀고 폭력피해자 손해배상 청구하기로 /189
- 서울시장 사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장애인이동권연대, 국가인권위원회장실 점거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196
- 인권단체들, 발산역 리프트사고 서울시장 사과 및 국가인권위 해결 촉구나서 /199
- 인권단체 장애인이동권 동조단식 - 발산역리프트참사 서울시장 공개사과 촉구...인권위 조사키로 /199
- 이동권연대 39일간의 단식농성 풀어 - 서울시, 저상버스도입 추진협의회 구성 약속 /207

## 전쟁

- 한국군 민간인 학살 입증 미국 기밀자료 공개 /26
- 일본군 '성노예 전범' 단죄 - 국제법정, 히로히토 전 일왕 등 8명 유죄판결 /32
- [HOT NEWS] '전시엔 학생들 강제 동원하겠다' - 오마이뉴스, 전시 학도호국단 운영 문건 공개 /72
- 수원지역 시민단체 전쟁반대 캠페인 나서... /112
-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것이나 - 지난 11월 30일 국회에서 아프간 파병 통과, 비난 줄이어... /127
- 우리는 파병 동의안에 서명한 국회의원 모두에게 주목하겠다 - 12월 11일 아프간 파병동의안 통과 항의 /128
- 경기·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열려 /184
- "인류의 이름으로 전쟁범죄 단죄" - 7월 1일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발효, 한국도 시급히 비준해

## 주한미군·반미

- "불평등 소파개정 받아들일 수 없다" - 27일 국회 통의통위 소파개정안 통과...국민행동 김판태 할복 /48
- 죽음의 고압선 그대로 방치되어있다 - 미군, 파주시 전동록씨에 대해 적절한 보상조치 없어... /133
- 이왕지사 옮길 것, 미국으로 가라! - 용산미군기지 대체부지 선정 송파, 성남, 수원 지역 주민들 반발 거세 게 일고 있다 /139
- 비교되는 지방자치단체들, 미군이전의 문제.. 행정적 규제에 의해 판단될 문제라고? /141
-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 수원지역 공대위(준) 시장, 의회의장, 국회의원에 공개질의서 보내 /146
- 부시 평택방문, 반대집회 열린다 /146
- 부시, 당신의 입국을 불허한다 - 오늘부터 부시 방한 반대투쟁 본격 시작 /143
- '테러라 굶쇼?' - 상공회의소 구속수감자 석방하라. 반미감정 고조 /148
- 수원지역 국회의원, 미군기지 이전 반대입장 표명 - 수원시, 시의회 모두 원칙적 입장만 되풀이 /150
- 미군기지 이전 결사반대로 경기도 들썩 - 국방부 애매모호한 답변 일관, 지역단체 반발 거세 /154
-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 연합토지관리계획 경기도민 조직적 반발, 대규모 경기도운동본부 구성예정 /157
- 미 상공회의소 점거농성 구속자 14명 전원 석방 /168
- 경기도민은 미군기지 이전과 확장을 반대한다 - 경기도운동본부, 경기도민 10만명 서명용지 경기도의회에 전달 /173
- "전동록씨의 명복을 빕니다" /178
- 주한미군 장갑차에 치여 여중생 사망 - SOFA 개정으로 재판권 행사해서 책임자 처벌해야... /179
- 여중생 참사사건 공분확산 - 유족측, 미군에 형사고소 - 미군영내 진입기자 국가인권위에 진정 /183
- 용산미군기지 어디로 갈까? - 국방부 관계자, "기자들에게 이미 미군이전관련 내용 브리핑했다" /185
- "의문투성이 수사 발표" - 민변, 여중생 수사발표 의견서 /194
- 노동자 통일선봉대 100여명, 매향리 미사격장 진입 농성 /196
-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도지사가 나서라 - 경기도지역 시도의원 10여명, 손학규 도지사 공개서한 발표 /195
- 미군차량과 충돌, 한국인 사망 - 여중생사망장소와 불과 4킬로 떨어져, 미군 안전대책 신뢰못해 /205
- 새만금간척은 미군비행장용? - 새만금간척지 130만평 미군비행장 제공, 시민단체 강력반발 /209
- 불처벌 협정 제의한 오만한 미국 - 미국의 자국민 불처벌 보장 요구에 '국제법 위반' 거센 비판 /214
- 미군 무죄평결에 국민분노 확산 - 여중생범대위, 27일 비상시국회의 갖고 용산 미8군앞 집회 예정 /225
- 무죄평결 원천무효! 살인미군 처벌! 부시 직접사과! 소파 개정! 분노...분노...분노 - 5일 경기도시국기자회견, 수원 매주 목요일 촛불집회 등 도내 항의집회 /227
- 경기도지사는 뭘하고 있나 -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경기도에 미군기지대책전담기구 설치 요구 /231

## 주한미군·반미

- "경기도 미군기지 주민 30%, 미군피해경험" -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의정부시 등 4개 미군기지지역 주민 설문조사 /231

## 집회결사의 자유

- "야, XXX아..." 경찰 여성활동가에게 성폭력 발언 - 군산서 경찰, 금요일집회 참석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사 /54 무국장에게 폭언
- "인권이 죽은 사회" - 인권단체들, 공권력의 인권유린 강력 대응...규탄집회, 해외단체와 연대 /62
- 경기민중연대(준), 경인총련탄압 강력 반발 - 6일 수원지검에 공개질의서 보내, 12일 수원 팔달문서 항의집회 예정 /93
- 경찰, 12월 2일 전국민중연대 집회에서 폭력진압 물의 - 민주노총, 노동파업 농민시위 강경대응은 '끓는 기름에 불지르기' 성명발표 /126

## 테러방지법

- 국정원 '테러방지법' 발표, 파문 확산 - 인권시민사회단체 강력한 반발...경기지역 오는 23일 테러방지법 반대 성명 밝히기로... /122
- "테러방지법(안) 제정을 반대한다" - 국회 정보위원회 심의 앞두고, 인권시민단체 21일 긴급기자회견 /145
- 국가의 테러를 방지하자! - '제2의 국가보안법' 제정 반대하는 각계 목소리 높아 /150
- "민주당, 테러방지법에 목숨걸었나?" - 민주당, 테러방지법 4월 임시국회에 수정안 마련 통과입장 /159

## 평화·통일

- "매향리사격장은 미 군수업체의 무기실험장이다" - 집시법으로 구속된 주민들, 보석 석방 기대돼 /2
- 매향리 주민대책위 사무실 폐쇄조치 /4
- [현장취재] 매향리에 핀 평화의 꽃 /12
- 매향리로의 초대 - 제3회 보름달 축제 4월 7일 매향리에서 열려 /58
- 매향리 주민들 1억 3천만원 배상 판결 - 11일 서울지법, 미 공군폭격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서 원고 승소판결 /60
- "6. 15 공동선언 즉각 이행으로 통일 앞당겨야" - 경기지역단체들 14일 6. 15선언 1주년 공동 성명서 발표 /79
- 8월 11일 수원 통일축제한마당 펼친다 - 수원재단체, 제7회 통일한마당 행사위 12일 발족...6. 15선언 실현 방점 /87
- 경기지역 통일 향한 힘찬 행보 - 6. 15남북공동선언 실현 경기통일연대(준) 27일 토론회 개최 /91
- 6. 15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경기, 수원지역 통일행사 /94
- 범민련 경인연합 '범민련 강령개정 설명회' 가져 /111
- 시민사회단체 전국적 규모의 "(가칭)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구성에 돌입 /118
- "폭격소음 인정한다. 항소심에서도 승소" - 매향리 폭격장, 주민들의 손해배상소송청구 1천여만원 받아들여져 /135
- "수원시민 통일의지 뚫뚫 뭉친다" - 10일 만석공원서 제8회 수원시민통일한마당 열려 /193

## 표현의 자유

- "홈페이지 게시판 글 삭제 부당하다" - 수원경실련, 수원시 인터넷 조례안 표현자유 침해 지적 /73
- "인터넷의 자유를 지켜라!" - 인터넷 등급제 반대, 500여 개 홈페이지들 사이트 과업동참 /85
- '인터넷 내용등급제 결사 항전' - 폐지요구...1인 릴레이 단식 이어져 /116
-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와 정통부장관퇴진을 위한 -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무기한 단식농성 9일째 /127
- 동성애차별법 철폐와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를 위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기자회견 가져 /136
- (가칭)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준비모임 참가단체들, 워크숍 가져... /138
-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개정을 반대한다 - 각계각층 500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 주장 기자회견 열어 /211



## 프라이버시

- 행정법원, 자기 정보에 대한 불 권리 인정 - 지문날인 반대연대 논평 발표 /144
- 참정권 제한 지문날인반대자 헌법소원 - 지문날인반대연대, 12월 대선까지 행정자치부 앞 매주 1인시위 돌입 /190
- 정신과진료 개인정보제공 사생활침해 - 국가인권위, 경찰청장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징계 및 피해자 손배권고 /191
- 경찰, 개인신상정보 유출 인권침해 심각 - 보건소 건강진단발급대장(보건증) 신상정보 임의대로 복사, 사용 /209
-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누출은 프라이버시권 침해 /210
- 경찰의 개인정보유출 국가인권위 진정 - 경찰, 수배자 검거 위해 보건소내 보건증소지자 정보유출 심각 /212
- 수원남부서, 사회단체 간부 주민등록등본교부 말썽 /222

## 환경

- 교도소부지 고층아파트건설 철회하라 - 수원교도소부지에 35층 아파트건설, 시민단체들 반발 /49

## 기타

- '다산인권'이 격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 『다산인권』 10월4일 창간합니다 /6
- [창간사] 진실의 힘으로 인권유린의 현장을 겨냥하겠습니다 /9
- [한해를 보내며] 인권 앞에서 우리는 망설이 여유가 없습니다 /35
- "개혁입법 외면하는 국회는 자폭하라" - 인권활동가들, 13일간의 단식농성 풀며 국회의사당 기습 시위 /39
- 영화20도 강추위도 그들을 꺾지는 못했다 - 농성단 찾은 국회의원들 잇따른 소금세례 맞고 발길 돌려 /40
- "내가 잘못 살아 젊은이들 고생한다....." /40
- [소장 취임사] 실천으로 답하겠습니다 /46
- 개혁 의지 상실한 정부를 규탄한다 - 27일 개혁실종규탄 수원지역203인 시국선언 발표 /48
- 경기 민중연대 출범한다 /53
- [HOT NEWS] 경찰, 사건 터지면 학생, 민중진영 일단 용의자로 /57
- [HOT NEWS] 91년 5월, 그 죽음을 기억하는가 - 강경대군 비롯한 11명의 젊은이 폭압정치에 죽음으로 저항...10주기 맞아 잊혀진 역사 재조명 /64
- 경기시민운동연대준비위 발족 /67
- 시대 읽는 '청년강좌' 열린다 /69
- 민주노동당 권선지구당 창당 /69
- 수원시민단체, 지방선거 참여 본격시동 /98
- 하반기 전 민중 투쟁 본격화 예고 /116
- 심시장, 업무복귀 앞서 수원시민에게 사과하라 - 수원시민단체 성명서 발표 /117
- "전반적인 인권수준 침체" 김대중 정부 들어 양심수 현저히 증가 - 세계인권선언 53주년 성명서, 행사 줄이어... /129
- 다산인권이 선정한 올해의 인권뉴스 10 /133
- 거기, 희망이 있습니다 /135
- '인도래' 인계동 마을주민신문 /137
- [사고] /147
- [안내] 세계인권포스터전 /165
- "소수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 인권사회단체들, 2002년 양대 선거 참정권 대응키로 /177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 인권' 300호 발행 -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8년간의 인권파수꾼 역할 충실 /186
- 국정감사를 통해 본 인권 /208

## 기타

- [안내] "2002 전국인권활동가대회" /223
- '2002 경기민중대회' 경기도청 계란시위 - 11월 30일 전국민중대회 개최 예정 /226
- "인권활동가 만났다" - 인권활동가대회 140여명 참석, 다양한 주제 토론...깊이 있는 논의 아쉬움 /228
- 세계인권선언일, 한결같은 목소리 "구체적 조치로 인권 옹호를" - 인권활동가들 올해의 인권소식 1위 '여성 생명사망사건' 선정 /229
- <다산인권 100호 발행에 부쳐> "인권과 평화의 촛불을 밝히자" /233
- 형사소송법 개정안, 문제있다. 인권시민단체, 오히려 인권침해요소 많다고 반대 의사 밝혀 /234

## 기획(월드컵)

- 다른 월드컵을 준비하자 - 국내외 노동인권단체, 아동노동 철폐 등 월드컵 캠페인 예정 /167
- 노동자와 아동의 노동착취를 고발한다 - 공동행동, 27일부터 아시아노동자 초청해 월드컵캠페인 진행 /171
- [월드컵 기획기사] ① 월드컵이 노동자 생존권 제한할 수 없어 /172
- [월드컵 기획기사] ② "추악한 아동노동에 레드카드를" /174
- "월드컵 후원 초국적 기업 노동착취 반대" /174
- 미국이여! 페어플레이를 해라? - 5일 수원 미국경기 맞춰,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예정 - 초긴장상태 /175
- [월드컵 기획기사] ③ 노점상에게 월드컵은 고통컵 /176
- [월드컵 기획기사] ④ 컵에 갇힌 집회의 자유 /178
- 붉은악마 신드롬의 이유있는 비판 -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월드컵 현상 냉철한 공론화 계기로 /181

## 기고·단상

- [인권단상] "인권은 최우선의 가치" /7
- [인권단상] 누구를 위한 산업평화상인가 /12
- [인권단상] 죽은 자의 인권 /26
- [인권단상] 에바다의 희망을 접을 것인가 /29
- [인권단상] 노점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43
- [인권단상] 학생들 대상 지문채취 강요 '반인권적 교육발상' /52
- [인권단상] 화염병 시위 배후자를 긴급수배한다 /59
- [인권단상]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 /91
- [기고] 수구 언론과 야당에 위해 조작된 매카시즘 선풍 - 8, 15 방북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의 문제점 /99
- [단상] 신랑없는 결혼식 /100
- [단상] 前과 後, 또 다른 출발을 위하여 /149
- 애도(哀悼)의 단상 - 박진 상임활동가 /158
- [단상]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의 눈물 그리고 희망 /169
- [단상] 국가인권위원회의 현명한(?) 선택 /205
- [기고] 정신장애인들을 인권의 중심에 두고 /216

## 인권의 눈

- [인권의 눈] 어느 쓸쓸한 재판 - 김철준 변호사 /5
- [인권의 눈] 진정한 원원게임 - 손경미 노무사 /13
- [인권의 눈] 청소년의 말 할 권리 - 최종식 기자 /18

## 인권의 눈

· [인권의 눈] 우리가 이 여성을 죽였다 - 한옥자 수원여성회 대표	/24
· [인권의 눈] 우리는 '이데올로기적 호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 고길섭 월간문화연대 편집실장	/27
· [인권의 눈] 차 우선 정책에 밀려난 보행권 - 염태영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처장	/30
· [인권의 눈] 해고도 서러운데 '왕따'까지 - 손경미 노무사	/33
· [인권의 눈] 청소년문화센터에 '청소년'은 없다 - 최종식 기자	/37
· [인권의 눈] 생명 앞에 자본의 논리 안 된다 - 한옥자 - 수원여성회 대표	/41
· [인권의 눈] '살색'과 인종차별 - 염태영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처장	/44
· [인권의 눈] 역(逆)역압을 넘어서는 성 표현 - 고길섭 문화연대 편집실장	/47
· [인권의 눈] 벼랑 끝에 선 대우노동자들의 분노 - 손경미 노무사	/50
· [인권의 눈] 교육감선거와 학생들의 권리 - 최종식 기자	/56
· [인권의 눈] 미군의 인권과 한국인의 운명 - 김용한 평화운동가	/58
· [인권의 눈] 국경없는 마을을 향하여 - 조용희 목사	/63
· [인권의 눈] 민주주의의 틀을 짜야 한다 - 김윤자 교수	/65
· [인권의 눈] 소년범에 대한 범죄자의 시선을 거두어야 - 최강호 변호사	/69
· [인권의 눈] 매항리 승소, 그 의의와 문제점 - 김용한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71
· [인권의 눈] 그들도 가정을 꾸릴 권리가 있다 - 조용희 목사	/73
· [인권의 눈] 1인 시위 활성화되어야 한다 - 최강호 변호사	/77
· [인권의 눈] 노동자 배제한 국민경제가 낳은 비극 - 김윤자 교수	/79
· [인권의 눈] 변호관 없이 달리는 미군들 - 김용한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81
· [인권의 눈] 집중단속에 침해받는 외국인노동자 인권 - 조용희 목사	/83
· [인권의 눈] 정례화된 세무조사 시스템을 확립해야 - 최강호 변호사	/85
· [인권의 눈] 모든 전쟁은 폭력이며 범죄이다 - 윤재훈 수원외국인노동자센터 상담실장	/105
· [인권의 눈]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앞서 - 허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113
· [인권의 눈] 살색 크레파스와 개고기 - 윤재훈 수원외국인노동자센터	/131
· [인권의 눈] 노동조합 전임자에게도 조건없는 산재적용을...	/140
· [인권의 눈] 공존과 인정을 위한 첫걸음, 이름을 부른다는 것 - 윤재훈 수원외국인노동자센터	/152
· [인권의 눈]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는 것 - 허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156
· [인권의 눈] 위험한 학교길 - 박영운 변호사	/160
· [인권의 눈] 진보적 인권운동을 생각하며 - 김삼석 군사평론가	/164
· [인권의 눈] 불법 양산하는 외국인력정책 - 윤재훈 수원외국인노동자센터 상담실장	/168
· [인권의 눈] '월드컵 열기' 제대로 보기 - 김삼석 기자	/182
· [인권의 눈] 월드컵과 이주노동자 - 윤재훈 수원외국인노동자센터 상담실장	/186
· [인권의 눈] 영화속의 재판이야기 - 김철준 변호사	/198
· [인권의 눈] 용역경비업체 농성장 침탈은 명백한 불법 - 박영운 변호사	/200
· [인권의 눈] 떠난 군인들에게 바친다 - 김삼석 군사평론가	/202
· [인권의 눈] 인권과 국가보안법은 한지붕아래 있을 수 없다 - 이민우 운영위원	/212
· [인권의 눈] 피의자의 인권 - 이광영 부산인권센터 사무처장	/220
· [인권의 눈] 사내부부는 명퇴대상? - 손난주 변호사	/224

## 인권 마당

· [인권마당] 집회 혼잡부담금案,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 / 군부정권 부역자 이병희 동상 철거하라	/1
· [인권마당] 보안관찰 정보 공개 거부는 알권리 침해 / 페미니스트 예술행사, 전주 이씨 종친회 급습으로 무산	/13
· [인권마당] 지난해 국보법 관련 구속자 2백86명 / '베트남전 심포지움' 참전군인단체 방해로 무산	/18
· [인권마당] "알몸수색 손해배상하라" / 시위교사 또 알몸수색	/27
· [인권마당]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도 산재 인정돼 / 인권피해치료센터 건립된다	/30
· [인권마당] "국보법 폐지하라" 19개 인권단체 성명서 / 올해 최대 인권뉴스 '매항리 폭격장 폐쇄투쟁' / 미국 170만개 대인지뢰 "70%가량 한국에 있다"	/32
· [인권마당] 국보법 구속 최형규 1월 5일 첫 공판 / 전국 중고등학생연합 출범	/36
· [인권마당] 전태일, 김상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 / "고문 못 이겨 전향했다"	/43
· [인권마당] 외국인노동자 항소심서 10년 실행 / 재건축부조합장 분신 경찰 채수사	/49
· [인권마당] 경찰 폭력시위감시단 구성 논란 / 임순애 구명운동 나섰다	/53

### 다산인권센터는....

다산인권센터는 1993년부터 변호사 사무실의 부설기구인 인권상담실로 시작하여 그동안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경기지역에서 노동권, 공안관련 사건 등을 중심으로 상담과 법률구조 활동 등을 해 왔습니다.

1996년부터는 그동안의 인권활동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인권운동을 전개하여 노동권, 복지권, 지역운동, 인권영화제, 인권교육 등 인권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00년부터는 단체의 명칭을 '다산인권상담소'에서 '다산인권센터'로 변경하고 경기지역사회에서 진보적 인권운동을 지향하는 운동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 다산인권센터는 이러한 활동을 합니다.

- 시민들의 인권피해 상담 및 구조활동을 지원하는 **인권침해신고센터 운영 (전화 031-211-5855)**
- 영상을 통한 인권의 대중화를 모색하는 **수원인권영화제 개최**
- 청소년,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인권가치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한 **인권교육 활동**
- 지역인권소식을 전달하는 **주간 '다산인권' 발행**
- 다산인권센터의 회원소식지 **월간 '몸살' 발행**
- 외국인노동자쉼터, 경기민중연대(준), 국가인권위 채신을 위한 열린회의 등 **경기지역단체 인권단체와의 연대활동**
- 기타 (청소년 인권센터 준비활동 및 청소년모의법정 대본공모사업 등)

## " 다산인권센터의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회원으로 참여해 함께 우리사회의 인권지킴이가 되어주십시오.

(회비 월 5천원이상, 연 3만원이상/ 가입은 홈페이지 [www.rights.or.kr](http://www.rights.or.kr)에서)

조흥은행 : 501-04-877047      예금주 박진

농협 : 116-12-264081      예금주 노영란